

---

# 2021년 경제정책방향

---

2020. 12. 17.

관계부처 합동

# 순서

I. 2020년 경제정책 평가 .....	1
II. 2021년 경제여건 점검 .....	4
III. 2021년 경제정책방향 .....	7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9
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24
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38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4.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59
5.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81
6.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105
IV. 2021년 경제전망 .....	116
[별첨1]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	117
[별첨2] 2021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131
[부록] 한국판뉴딜 성과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 .....	134

# I. 2020년 경제정책 평가

- ◇ '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해
- 우리 정부도 ① **당면한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② **체질개선** 및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노력 병행

## 1 당면한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

- (대응)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차례 추경 포함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이 과감한 지원대책** 추진

### 총 310조원 규모(GDP 16% 수준) 지원대책 마련

실물지원 대책 : 89조원	금융안정 대책 : 229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단계 종합패키지 (32조원) : 업종·분야별 대책/민생·경제종합대책/1차 추경</li> <li>✓ 긴급재난지원금 등 (15.2조원) :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사회보험료 감면</li> <li>✓ 고용안정패키지 (10.9조원) :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유지지원금 등</li> <li>✓ 하경정 및 3차 추경 (9조원)</li> <li>✓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4차 추경 (12조원)</li> <li>✓ 기타 (10조원)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업종·분야별 긴급지원 중소·중견기업 비용부담 경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안정패키지 (135조원+α) : 1단계 130조원+α/추가확대 35조원</li> <li>✓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li> <li>✓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확대 (4.4조원) ※ 소상공인 총지원규모: 1단계(16.4조원) + 2단계(10조원)</li> <li>✓ 하경정 및 3차 추경 (12조원)</li> <li>✓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4차 추경 (4.8조원)</li> <li>✓ 기타 (33조원) : 수출기업 보증보험/벤처·스타트업 용자·보증/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확대 등</li> </ul>

※ 310조원 = 89 + 229 - 8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중복분 차감)

※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시 총 570조원(GDP의 1/3 수준)

- (평가) K-방역체계 구축, 과감한 정책대응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기에 강한 경제**”를 다시 한 번 입증

- ① (경제성장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입**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중**

\* 코로나 대응 재정투입 규모(GDP 대비 %, IMF<10월>) : (G20 평균)6.6 (韓)3.5<G20중 13위>

\* '20.3/4분기 GDP 규모('19.4/4 = 100) : (韓)**97.5** (美)96.5 (日)96.1 (獨)96.0 (英)90.3

- 금년 성장률도 **OECD 국가중 1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작년보다 **2단계 오른 세계 10위**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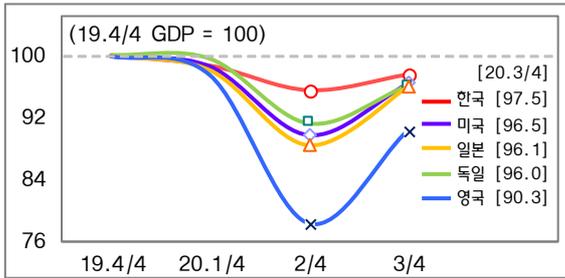
\* '20년 성장전망(% OECD<'20.12>) : (韓)**△1.1<1위>** (美)△3.7 (日)△5.3 (獨)△5.5 (佛)△9.1

\* 한국 경제규모 세계 순위(IMF<'20.10>) : ('14) 12 ('15~17) 11 ('18) 10 ('19) 12 ('20) **10위**

**② (수출)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축 속에서도 반도체·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방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의 위상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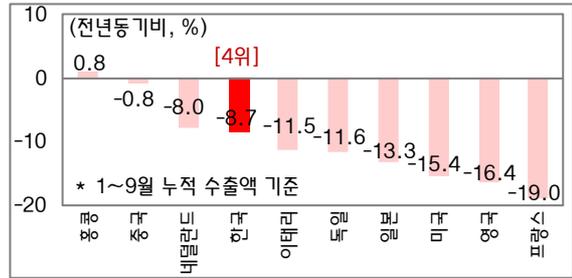
\* '20.1~9월 누적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은 홍콩·중국·네덜란드에 이어 4위

주요국 GDP 실적 추이



\* 출처 : 한국은행/블룸버그

세계 10대 수출국의 '20.1~9월 수출



\* 출처 : WTO

**③ (고용) 적극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

\* '20.1~10월 고용지표 변동

지표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 전년동기비)	△0.6	△0.7	△0.8	△2.0	△5.7	△6.3
실업률 상승폭(%p, 전년동기비)	+0.1	+0.4	+1.0	+0.8	+4.0	+4.6

**④ (금융시장) 흔들림 없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강한 회복력 유지**

- \* ①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中·日 보다 상위), ②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 최저 수준,
- ③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20.11월말 4,364억불, 글로벌 금융위기 2,012억불/외환위기 332억불),
- ④'20.9.10일, 외평채(14.5억불) 사상 최저금리(달러화) 및 마이너스 금리(유로화) 발행 등

**2 체질개선 노력**

□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혁신 확산·포용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소홀함 없이 착실히 진전

- (혁신확산) DNA·BIG3 등 신산업 육성,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화, 규제혁신 등 차질없이 추진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 (포용강화)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노력 강화(취약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혁신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대응

신산업	✓ 데이터3법(2월) 및 시행령(8월) 개정 ✓ 바이오산업 혁신(1월) / 사업화 촉진(11월) ✓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12월)
벤처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2월) ✓ 스타트업 파크 선정(9월, 대전·천안)
제조업 서비스업	✓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8월) ✓ 디지털기반 산업 혁신전략(8월)
규제 혁신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4월) ✓ 기업부담 완화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9월)

포용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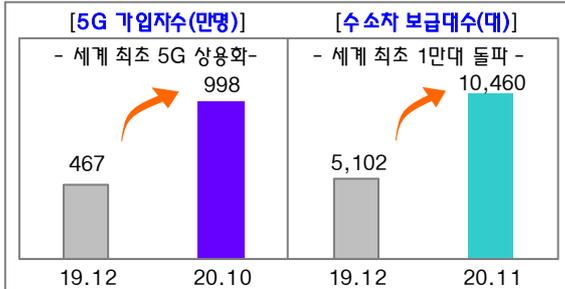
고용유지 고용안정	✓ 직접일자리 155만개 제공(본예산+추경)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확대 ✓ 신중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적용대상 확대 ✓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 ✓ 「제2차 기초생보 종합계획」 수립(8월)

□ (평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확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로 더욱 도드라지는 소득 격차를 최대한 완충**

\* 벤처펀드 규모 및 기술창업 증가세 지속, 5G/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급증 등  
 ▶ 벤처펀드 결성액(천억원, 1~3분기): ('19) 24.9 → ('20) 26.5 / 기술창업(만개): ('19) 16.6 → ('20)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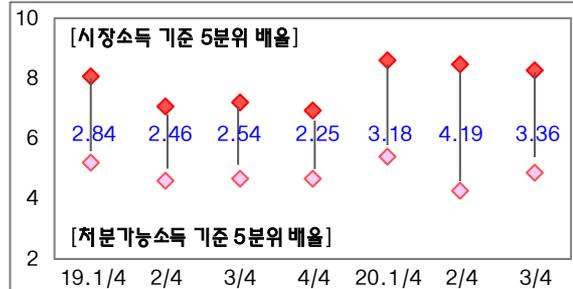
\*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확대

5G·수소차 등 신산업 수요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



\* 출처 : 통계청

### 3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 (대응) 코로나 위기에 따른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추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및 3차례 걸친 후속조치 마련  
 → '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뉴딜펀드 조성·지원방안(9월)/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10월)/추진상황 및 체감확산 전략(11월)

○ 즉시추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들부터 **추경**을 통해 **신속 착수**

3차 추경 뉴딜사업<4.8조원>

디지털뉴딜 : 2.4조원	그린 뉴딜 : 1.2조원	안전망 : 1.2조원
✓ DNA 생태계 강화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고보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스마트 그린도시/상하수도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 SOC 디지털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축	✓ 고용진입·전환지원

□ (평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구조적 대전환 과정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글로벌 경쟁 심화에 선제 대응**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전략을 **높게 평가**

\* (OECD<'20.8>) :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기대

☞ '20년은 K-방역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II. 2021년 경제여건 점검

### 1

### 경기 여건

#### ① (내수)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제약요인 상존

○ 소비는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 가계의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여력 증대,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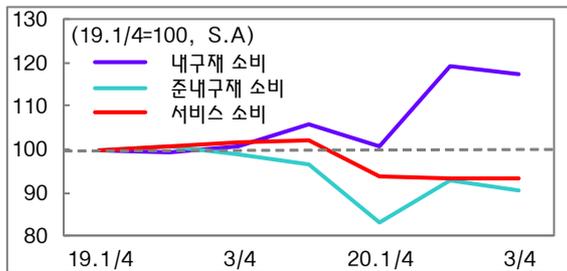
- \* 소비활력 제고 관련 예산 규모(조원) : ('20) 0.7 → ('21) 2.1 <전년대비 3배>
- \* 가계 저축률(%), 가계동향조사, 1/4~3/4 평균) : ('19) 27.5 → ('20) 32.0 <전년동기비 +4.5%p>

▪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 등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투자는 설비투자가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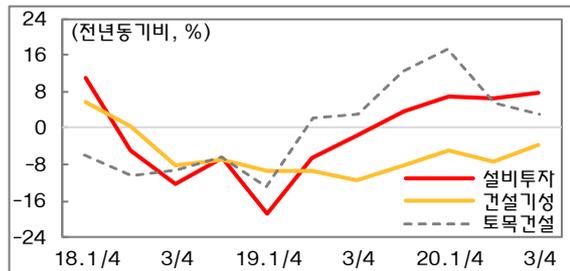
- \* 반도체 매출 증가율(%), WSTS<'20.12월>) : ('19)△12.1 ('20<sup>e</sup>)+5.1 ('21<sup>e</sup>)+8.4
- \* SOC 예산(조원) : ('20) 23.2 → ('21) 26.5 <전년대비 +3.3조원>

행태별 소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설비투자 및 건설기성 추이



\*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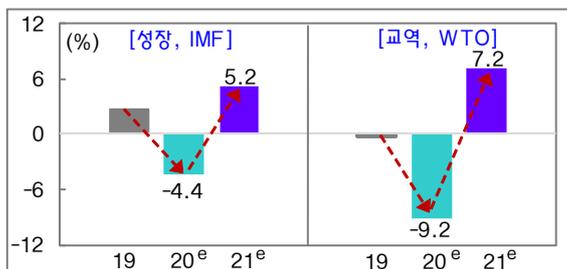
#### ② (수출)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 예상

○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 수출(전년동기비, %) : ('20.1/4)△1.8 (2/4)△20.3 (3/4)△3.4 (10)△3.8 (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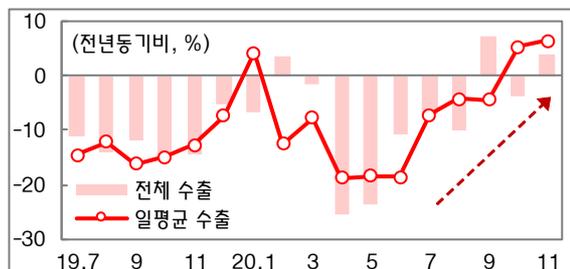
○ 다만,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전망



\* 출처 : IMF, WTO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추이



\* 출처 : 관세청

## ① [고용] 증가 전환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내수 및 제조업 경기 개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고용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일자리 예산(조원) : ('20) 25.5 → ('21) 30.5 <전년대비 +5.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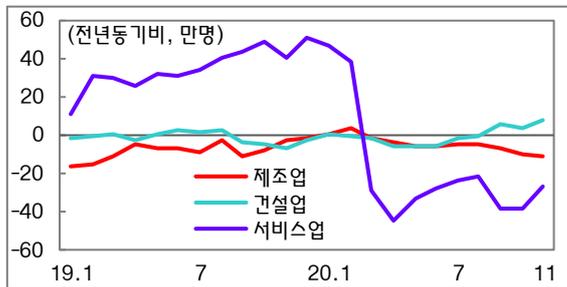
↳ 직접일자리 지원규모(만개) : ('20) 94.5 → ('21) 104.2 <전년대비 +9.7만개>

- 다만,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 등으로 고용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위기 이후 통상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약 6개월~1년 정도 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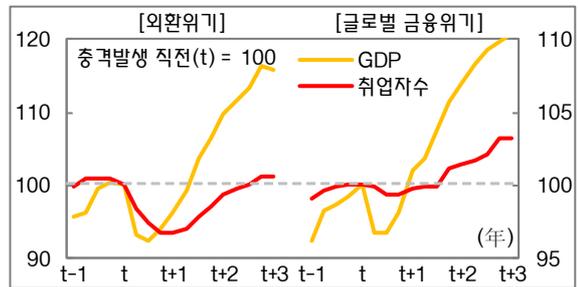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19) △5.6 → ('20<sup>e</sup>) △23.1 → ('21<sup>e</sup>) △22.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출처 : 통계청

과거 위기시 경기·고용 회복 경로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② [분배]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구조적 어려움 지속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는 분배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 : ('20) 180.5 → ('21) 199.7 <전년대비 +19.2조원>

- 다만, 취약계층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 고령화 심화 및 온라인 판매 증가 등은 1분위 등의 소득 개선을 제약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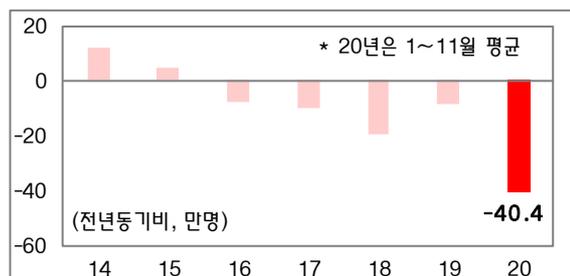
\* 임시·일용직(전년동기비, 만명) : ('19)△8.7 ('20.上)△45.6 (3/4)△39.3 (10)△32.0 (11)△20.7

주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 규모(조원)

	'20→'21년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1.9 → 50.5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16.5 → 20.1
기초연금 확대	13.2 → 15.0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1.3 → 1.5
노인일자리 확충	1.2 → 1.3

\* 출처 : 기재부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감



\*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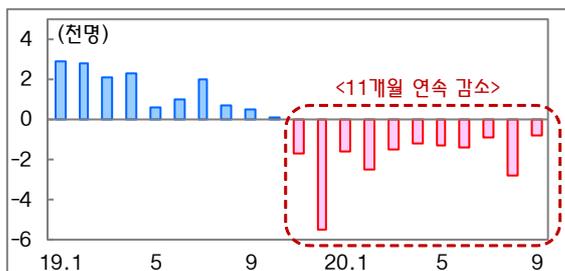
### ① [글로벌]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온라인소비·스마트워크·원격교육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위 선점 경쟁이 심화
  - \* (美) 바이든 정부는 5G·AI·바이오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3천억불 투자 공약
  - \* (EU) AI 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투자 예정
  - \* (中) 5G·데이터 등 新인프라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 예정
- 각국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안정·지속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
  - \* (美)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조불 투자 공약
  - \* (EU) '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그린딜 추진중 (30년까지 年 1천억유로 이상 투자)

### ② [국내] 인구·가구·지역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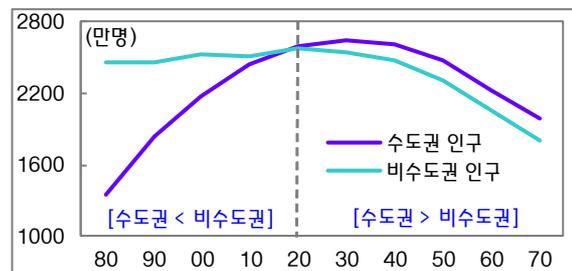
- 인구 자연감소 등 인구 충격 본격화, 1인 가구 비중 및 세대·가구 분화 급증 등이 소비·산업·주거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 촉발
  - \* 1인가구 비중(%) : ('00)15.5 ('05)20.0 ('10)23.9 ('15)27.2 ('20<sup>e</sup>)30.3
  - \* 서울시 세대수 증가율(%) : ('17)0.4 ('18)0.8 ('19)1.4 ('20.1/4)1.5 (2/4)1.7 (3/4)2.0
- 금년은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지역 인구를 넘어서고, 향후로도 수도권 인구 집종의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 확대
  - \* 수도권 인구(만명) : ('00) 2,175 ('10) 2,443 ('20<sup>e</sup>) 2,596 ('30<sup>e</sup>) 2,648 ('40<sup>e</sup>) 2,615
  - 지역 인구(만명) : ('00) 2,526 ('10) 2,512 ('20<sup>e</sup>) 2,582 ('30<sup>e</sup>) 2,545 ('40<sup>e</sup>) 2,471

인구 자연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 추이



\* 출처 : 통계청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전망



\*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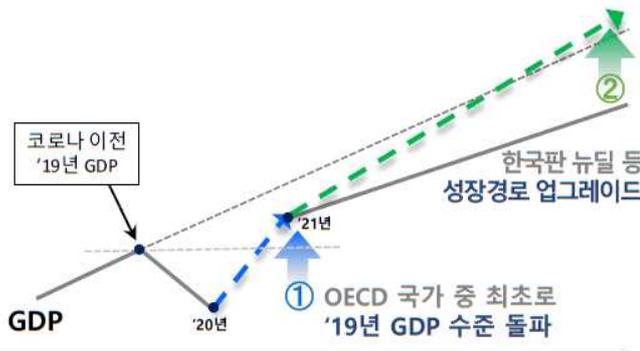
◇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 \* 금년말~내년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 하반기중 백신 상용화 예상  
→ 내년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진행, 하반기중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 본격 회복 전망

☞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잠재성장률)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긴요

# Ⅲ. 2021년 경제정책방향

## 2021년 경제정책 목표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3 + 3 정책 방향

- Post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 -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①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②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
- ③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

##### ②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①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②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③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 ③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②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③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④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④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①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 ②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 ③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 ④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 ⑤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탄소 중립)
- ②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③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④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 ⑥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①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②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 ③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Post  
코로나시대로  
빠르고  
안정적인  
이행과  
확실한 도약

###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집중적인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뉴딜펀드 등)

신속한 법·제도 개선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 목 차 〉

<b>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b> .....	<b>9</b>
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9
②.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 .....	11
③.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 .....	15
<b>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b> .....	<b>24</b>
①.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24
②.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26
③.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	32
<b>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b> .....	<b>38</b>
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38
②.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44
③.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47
④.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	52

#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① 재정정책은 확실한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확장 기조 지속

① (중앙)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기조를 견지하면서 집행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 추진

-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추진(목표: '20년 62%→ '21년 63%)

\* '21년 예산 총지출 558.0조원('20년 본예산 512.3조원 대비 8.9%)

\* 상반기 집행목표(%) : ('17) 58.0 ('18) 58.0 ('19) 61.0 ('20) 62.0 ('21) 63.0

② (지방) 상반기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는 등 확장적으로 운용

\* 상반기 집행목표(%) : ('17) 56.5 ('18) 57.0 ('19) 58.5 ('20) 60.0 ('21) 60.0

- 지자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절차 등을 1/4분기내 완료

### ② 통화·금융정책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① (통화정책)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는 가운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② (금융정책)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8조원까지 확대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

\* 정책금융(조원) : ('18) 408.6 ('19) 435.5 ('20) 478.8 ('21) 494.8

↳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지신보, 기보 등

-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가계·기업대출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

### ③ 외환정책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

#### 4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위기 대응조치 정상화 단계적 추진 검토

-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병행,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
-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 추진

-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 추진(~'21.1월 → ~'21.7월)
- ▶ 무보 수출보험·보증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를 '21년 상반기까지 연장(~'20.12월 → ~'21.6월)
  - \* 신규 유동성 대출, 금융보증 우대,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

#### < 주요 시한부 위기 대응조치 >

정책 대응		기한	
만기연장	은행권·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21.3월	
	무보 수출 보험·보증 만기연장	'20.12월	
유동성 공급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21.1.13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5종)	'20.12월	
	금융안정특별대출(증권사 및 보험사)	'20.2.3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 피해지원용 확대분(16조원)	'21.3월	
	금융권 규제 유연화	예대율 규제 (5~10%내 위반 한시적 적용유예 등) LCR 규제 (통합 : 100→85% / 외화 : 80→70%)	'21.6월 '21.3월
	기안기금 신청	'21.4월	
시장안정	공매도 금지	'21.3월	
	증권시장안정펀드	-	
	채권시장안정펀드	시장 안정시	
	캠코 개인채무자 연체채권 매입 신청	'21.6월	

## 2.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

### 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강화에 총력

####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확보 및 보급·개발 등 신속 추진 ]

① 코박스 퍼실리티<sup>1)</sup>(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sup>2)</sup>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

1)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2) 아스트라제네카: 선구매 계약 既체결

화이자 등 기타: 구매물량 확정 및 나머지 계약절차 신속 진행 예정

▪ '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면서 추가 필요 물량은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②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 접종전략 마련, 접종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접종시기 및 우선접종 대상 등은 코로나19 국내상황, 외국 접종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결정

③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 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비용지원도 확대('21.1~)

▶ (국내)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모델 마련,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국내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 (해외) 해외임상지원 종합포털 및 종합상담센터 구축 등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중심으로 해외 임상시험 지원 창구 통합

#### [ 감염병·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강 ]

○ 공공의료 분야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양성 지원

▪ 공공병원 등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 체계 구축

\* 전국을 17개 권역(시도)와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3개 권역,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2→15개 권역, 29→3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중중환자 치료병상 확충,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21.1~)

▪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접근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을 지원하여 진료 탐색 기회 제공 및 인력양성 유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 대응력 확충 ]**

- ① 공공 의료기관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 확대 추진
- ②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재난대응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 (예) 비상시 지역내 가용자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망 역할을 하는 기관(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 지정·운영

**[ 2] 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병존 가능한 新내수 활성화 방안 추진**

**[ 방역 친화적인 소비여건 조성 ]**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① 4+4 바우처·쿠폰(21년, 0.5조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서비스업 밀접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대상 확대  
 \* (예) 통합문화이용권 :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강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체육쿠폰 : 온라인 PT(실시간 영상교육),  
 농수산물쿠폰 : 온라인 구매,  
 외식쿠폰 : 비대면서비스(포장, 배달), 플랫폼(간편결제, 배달앱 등) 확대 등

▶ '21년 4+4 바우처·쿠폰 관련 예산 (단위 : 만명, 억원)

		내 용	인원	예산
4 대 바 우 처	농산물 구매지원	임산부·저소득층·초등돌봄학생 등에 농산물·우유급식·과일간식 등 제공	106	773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	177	1,261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	7.2	332
	근로자휴가 지원	국내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매칭 지원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10	110
4 대 쿠폰	농수산물쿠폰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 지원	1,140	1,160
	외식쿠폰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차기에 1만원 환급	660	670
	숙박쿠폰	온라인 숙박 예약시 2~3만원 할인쿠폰 제공	145	418
	체육쿠폰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60	180

- '20년 소비쿠폰 중 미사용분은 '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방역상황에 맞춰 예산 소진시까지 사용

② 방역수칙 위반업체·이용자 관리<sup>1)</sup>에 주력하면서, 선제적 방역강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방역우수시설 인증<sup>2)</sup>을 부여

- 1)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이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현재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중 → 일정요건 충족한 타업종에도 적용 검토·추진

▶ (참고) **안심식당 지정제**(농식품부, 지자체 협조)  
: 식사문화 개선 및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스티커 부착,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이용 장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 지정요건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 방역우수시설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예) 방역우수시설 위치정보 개방공공데이터포털, 방역컨설팅 모범사례 발굴홍보, 위생기점 부여 등

[ **新 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 ]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촉진을 위해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 (국내→해외) 국내에서 출발, 해외 영공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허용

▶ (구매·면세한도) 1인당 5,000달러 / 600달러  
\* 현행 여행자 휴대품 구매·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 (구매방법) 기내·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 모두 허용

▶ (사업기간) '21년 한시시행 + 추후 연장검토(출입국 제한 유지시)

▶ (사업주체) 개별 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 등

- (해외→국내) 해외에서 출발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 착륙후 출국장면세점 이용 허용

\* 현재 해외에서 외국인이 자국 공항에서 출국, 우리 영공을 비행한 후 다시 자국 공항으로 복귀하는 상품은 출시·운영 중

▶ (사업기간) '21년 한시시행 + 추후 연장검토

▶ (방역조치)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병행하여 추진

① 항공편 관리 : 상대국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류확대가능국가 등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항공운항 허가

② 공항내 방역 : 착륙·면세점 이용시 발열체크 실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객 동선 구분·관리 및 면세점 분리 이용 등 방역조치 검토

### ③ 경제·사회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병행

#### [ 경제·방역간 균형을 위해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정교화 ]

- ① 백신보급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주시하면서 방역과 경제·일상의 균형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설정
- ② 코로나19 상황 변화, 의료역량 확충 등을 반영하여 경제와 방역의 공존을 위한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 추진

#### [ 위험요인 예측 시스템 강화 등 선제적 대비태세 구축 ]

- 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기에 신속히 파악,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 구축(21.6)
  - 특히, 공식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시간 경제상황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속보지표 pool 등을 개선, 통합지표 개발 추진
    - \* 경제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민간분야 고빈도(high-frequency) 데이터 중심
- ② 국가적 위기상황(X-이벤트)에 대한 사전감시(Watchdog)를 강화하고, 회복력 보완을 위한 회복력 평가방안 등을 연구\*(21.3~)
  -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비교, 과거 위기와의 비교 등을 통해 회복력이 강한 시스템의 특성 분석 및 회복력 수준 평가방안 검토

#### [ 위기사 충격 최소화를 위한 완충능력 강화 ]

- ① (금융) 기업휴지보험<sup>1)</sup>, 계약철회(여행, 공연 등)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sup>2)</sup> 지원(21.1~)
  - 1) 조업중단(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및 수익 상실 등을 보상
  - 2) 보험개발원의 전염병 위험평가 모델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협의 추진
- ② (비축) 방역물자 비축 체계화를 위해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자 유효기간 관리 등 효율적 재고순환 방안 마련

### 3.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

#### 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 시중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생산적 분야 유도 ]

①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유인 제고

▪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 (도입개요) ①개인투자자 대상, 1인당 1억원 한도, ②10년물·20년물 형태로 발행 (원금·이자 만기시 지급), ③만기보유시 가산금리 및 세제 혜택

▶ (가산금리)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예 : 기본 이자의 30%) 지급

▶ (세제혜택) '21년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② 증시저변 확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 추진

▪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sup>1)</sup>하고 균등배정 방식<sup>2)</sup> 도입

1)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 및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을 일반청약자에 추가 배정

2)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

③ 건전한 증시 발전 및 기업공개(IPO) 선진화를 위해 주관사 책임성 제고방안 등 IPO 과정에서의 절차·관행 정비

\* (예) 수요예측 내실화 유도,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유도 등 검토

#####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지속하되,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유도, 고액 신용대출 중심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 既시행

- ②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21.1/4),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
  -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 대체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미래소득, 적용만기 합리화 등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 업권별 리스크 관리 강화 ]

- ① (은행 등) 대출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장 유도(21.1~)
  -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 ②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사모펀드 및 사모 자산운용사 전수점검 지속 실시
  - 점검과정에서 위법·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한 조치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
- ③ (증권) '20.3월과 같은 시장충격 발생시 증권사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 강화(21.1~)
- ④ (보험) 보험사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등에 대비한 영향분석·자본확충 유도 등 연착륙 방안 강구(21.1~)
  - \*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23년부터 시행 예정
- ⑤ (상호금융) 업권 간 규제 차이에 따른 자금쏠림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규제\* 도입
  - \* 여신 편중 방지를 위한 여신한도 규제(거액여신, 부동산관련업 등에 여신한도 설정), 유동성비율 규제(잔존만기 3개월 내 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 등
  - 증가 추세인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조합 단위 사전 심사 및 중앙회 사후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방안 마련

## ② 주택공급기반 지속 확충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한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에 만전 ]

- ①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를 차질없이 공급
- \* 지역별(만호) : (서울)36 (경기)76 (인천)15 / 유형별(만호) : (공공택지)84 (재건축재개발 등)43
- 서울 도심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1만호)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 수립('21.上), 캠프킴·과천청사 등도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 태릉CC: '21.上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용산캠프킴: '20.12.11일 부지반환(美→韓) 완료 → 기부 대 양여(국방↔LH)와 반환 부지 토지정화를 병행하는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후 착공
    - ▶ 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관련 지자체, 기관간 이전계획 등 협의 중
  - 공공성에 기반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조속히 지정
    - ▶ 공공재개발은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 대상으로 '20년 내 후보지 선정 및 신규·해제구역 56곳 대상으로는 '21.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1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후보지 공모 추진
    - ▶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21.2분기)
  - 서울 도심과 30분내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1년내 지구계획 확정, '22년 착공 추진
    - \* 남양주 왕숙(6.6만호), 고양 창릉(3.8만호), 하남 교산(3.2만호), 부천 대장(2.0만호), 인천 계양(1.7만호)
  -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2만호에 대해 '21.7월부터 사전청약 개시
    - ▶ 지구지정 → 지구계획 확정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 ▶ 사전청약 일정(천호)
      - ↳ <'21.7~8월> 인천 계양(1.1), 노량진 군부지(0.2) 등
      - <'21.9~12월> 남양주 왕숙(3.9), 부천 대장(2.0), 고양 창릉(1.6), 하남교산(1.1) 등
      - <'22년 이후> 남양주 왕숙(5.0), 인천 계양(1.5), 고양 창릉(2.5), 용산 정비창(3.0) 등
  - 공공분양주택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 마련('21.上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 \* 최초 분양가의 20~25% 취득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기간 중 전매 시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 공유
    - \* '23.上부터 서울 SH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하여 공급
  -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② 위기대응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3기 신도시 보상자금 흡수노력 강화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관련 세제지원 확대(‘21.1/4)

▶ (전매제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현물출자시 받은 주식에 대해 보유의무기간 신설(예 : 3년)  
▶ (세제지원)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전매제한 의무 적용)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상향(예 : 양도세 감면율 15→30%)

[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

-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21.1/4)

\* ‘21.1/4분기 중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149m<sup>2</sup> 이하  
▶ (개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149m<sup>2</sup> 이하

-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21.上)

\* ‘21.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현행)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에 1년 내외가 소요되어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곤란  
▶ (개선)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sup>1)</sup>하고,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 받도록 개정<sup>2)</sup>(‘21.上)

1) (현행)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선) 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 (현행) 리츠·부동산펀드는 신탁 의무가 있으나, 지방세법 상 납세의무자인 수탁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미적용  
(개선)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② 특히, 다수의 일반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시에는 추가적으로 지원

-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임대하고,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용자를 우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이율에서 0.2%p 인하

-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하여 제로에너지빌딩<sup>1</sup>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sup>2</sup>

1] '25년부터 30호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

2] (현행) 투자금 5천만원 이내, 세율 9% → (확대) 2억원 이내, 세율 9%  
(용적률 11% 이상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등도 추가지원)

[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 ]

① 주택 매매과정 쏠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既 발표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21.1~)

\* '19년 12.16대책, '20년 6.17대책, 7.10대책 등을 통해 既 발표

- ▶ (취득) 법인·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부담 가중을 위해 주택 취득세율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既 시행중)

\*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율 : (1주택)1~3% (2주택)8% (3주택 이상 및 법인)12%

- ▶ (보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유인 차단을 위해 법인·다주택자 등 대상 종부세율 인상('21년분 종부세부터 적용)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율 : ('20년분)0.6~3.2% → ('21년분)1.2~6.0%

- ▶ (처분) 투기적 거래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단기보유·다주택자·법인 대상 양도세 증과세율 상향 조정('21.6.1일(법인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중저가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등

② 향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적극 강구

\* 가격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도 병행 검토

## [ 임대주택 적극 공급 및 한계임차인 지원 · 임대차3법 착근 병행]

### ①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 주택, 非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연내 입주할 수 있는 7.5만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 '21년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계획(만호) : (전국)7.5 (수도권)4.3 (서울)2.0

↳ '21.上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계획(만호) : (전국)4.9 (수도권)2.4 (서울)0.9

- 또한, 공공임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선도단지 중심으로 본격 도입('21.1~)

▶ 사업승인 계획(만호) : ('21)0.1 ('22)0.6 ('23)1.1 ('24)1.5 ('25년 이후)매년 2.0

↳ (선도단지 6곳) 성남, 의정부, 의왕, 부천, 시흥, 대전 소재

▶ 거주기간 :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 계층 무관 30년

▶ 입주자 : 저소득층 중심 →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입주)도 포함

▶ 평형 : 중소형 위주 → 중형(전용 60~85m<sup>2</sup> 규모)도 공급

▶ 주거환경 : 분양주택 수준으로 마감재 상향, 분양+임대 소셜믹스 추진,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공급

### ② 임차보증금 리스크 완화 등 한계 임차인 보호 강화

-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료율을 인하<sup>1)</sup>하고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20년 34조)<sup>2)</sup>도 확대('21.1~)

1)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율 70% 인하 연장('20년말→'21년말),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 가입 허용 등

2) (가입대상)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보증금

-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적정성 검토

\* 현행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만원) : (서울)3,700 (광역시)2,000 등

### ③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12곳)<sup>1)</sup>,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sup>2)</sup> 등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 정비('21.1~)

1) ('20) 인천·청주·창원·서울 동부·전주·춘천 → ('21) 제주·성남·울산·고양·세종(대전)·포항 추가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증빙자료 등을 매도인(임대인)이 첨부하도록 양식 개정

### ③ 대외신인도 및 외환건전성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

- ① 해외투자자, 국제 신용평가사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등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강화
  - 코로나19 전개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추진
  -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신평사와 코로나19 대응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방향 등 상시 공유
- ② 국제금융시장·외채 동향, 외국인자금 유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필요시 외환건전성 제도(예: 선물환포지션 등)를 탄력적으로 적용
- ③ '21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연장\* 추진
  - \* (예: 한국-스위스) 106억불 상당(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 만기 '21.3월
- ④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 조달·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점검·보완('21.6)
  - 증권·보험업권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개선
  -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관련제도 정비 (예: 분할납부 횟수 및 분할납부 비율 조정 등)
    - \* 해외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과
- ⑤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21.4/4)
  - 고객(기업 등)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sup>1)</sup> 인프라 마련<sup>2)</sup>
    - 1) (현재) 고객이 은행(달러)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 2)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로 구성되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외국환중개사의 디지털정보 서비스망 구축, 은행들의 전용앱 개발 등 추진
  -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개선\*
    - \* (예) 은행간 거래실적 외에 대고객거래 실적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포함 등

#### 4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 종합 대외전략 수립 ]

-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방향 등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sup>(가칭)</sup>」 수립

##### [ 美 신정부 출범 계기 선제적·전략적 대응 ]

- ① 韓美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②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협력의제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의사결정
  - 거시경제금융회의<sup>1)</sup> 및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sup>2)</sup>」를 통해 분야·부처별 중점협력 과제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 마련

1) 기재부 1차관 주재,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2)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산업부·외교부·과기부·국토부·환경부·중기부 등(국장급)

##### [ G20 등 국제공조 강화 ]

- ① (G20)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서 G20 논의 주도
  - 우리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디지털 혁신,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 가속화 논의에 적극 참여
  -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 부채문제, 급격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디지털 화폐 등 논의 선도
- ② (ASEAN+3) '21년 공동의장국(韓,브루나이) 수임 계기 CMIM\* 개선 등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신규 협력과제 도출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 ASEAN+3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규모: 2,400억불)

- CMIM 자금지원시 美달러외 역내통화(예: 원화, 위안화, 엔화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

## [ 주요 통상현안별 대응전략 마련 ]

- ① (美中갈등) 양국간 무역 분쟁이 첨단기술 및 환경·노동 등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에 적극 대응
  - 반도체 등 업계와 소통 강화, 시나리오 및 경제영향 점검, 애로사항 접수 등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 ② (상계관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 및 각국의 對韓 수입 규제 조사·조치 지속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 \* 對韓 상계관세 조치·조사건수(누적, 건) : ('17)7 ('18)9 ('19)9 ('20.11)10
  - 상계관세 TF(관계부처 합동) 및 상계관세 조사대응 교육(공무원·공공기관), 법률자문 비용 지원(중소·중견기업) 등 대응역량 강화
- ③ (韓英통상) 英·EU간 협상 추이 및 경제적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韓·英간 통상협력 이슈 등에 선제 대응
  - '21년부터(21.1.1.) 발효되는 한·영 FTA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英측과 한·영 FTA 이행위원회를 구성
- ④ (다자주의) 美 신정부 출범 등에 따라 WTO 개혁을 비롯한 다자주의 회복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제도 선제 정비
  - RCEP<sup>1)</su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21년 중 조기 완료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하에 CPTPP<sup>2)</sup> 가입을 지속 검토
  -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과 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2)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 식량안보 기반 강화 ]

- 식량안보 강화 및 먹거리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주요 곡물(밀·콩)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식량계획(National Food Plan)' 수립
  - ▶ (국내 생산기반) 전문생산단지조성 등 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밀·콩의 국내 비축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 ▶ (위기 대응역량) 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곡물 위기대응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시장 진출 지원
  - ▶ (지역 자급기반) 농가조직화 및 소비접점(공공급식, 직매장 등) 확대 등 로컬푸드 순환 체계 확산

## 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1.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① 전방위적 인센티브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 강화

##### [ 세제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 ]

① '21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21.2)

\* (예) '20년대비 5% 이상 증가분 / 추가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기본 공제한도(200~300만원<'20년 230~330만원>)와 별도로 한도 추가 ←

② '21년 상반기(1~6월) 중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5→3.5%, 100만원 한도)

③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 시행(500억, '21.3~12)

\* (예)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환급

##### [ 소비 회복여건 조성 ]

① 지역사랑상품권(9조→15조원), 온누리상품권(2.5조→3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로 상품권 발행 확대('21.1~)

②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내 배달앱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사용 활성화를 권장('21.1~)

\* (서울시 사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③ '21년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일부(예: '21.상반기)를 동의를 전제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21.4~)

\*先日급 신청시 : (현행) 7월중 현금 지급 → (개선) 3월 이내 동의를 거쳐 상품권 지급

## ② 소비행사 분산 개최(상·하반기)로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① 「대한민국 동행세일」(20년 최초 개최)을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

- ▶ 범국가적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별 현장행사, 여행·외식·농축수산물 등 연계행사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캠페인 추진
- ▶ 중소기업·소상공인 판촉비용 지원, 각종 경품 이벤트 등 참여 업계·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② 내수 진작 및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 대규모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일) 적극 지원

- ▶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의 폭넓은 참여 유도로 체감 할인율을 높이고, 소비자 관심도 확보
- ▶ 역직구 등 해외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의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홍보 추진

## ③ 국내 관광 회복을 통한 내수활력 제고 뒷받침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중에 추진할 계획

①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등 본격 추진(159억원→383억원)

- ▶ (도시 종류) (국제관광도시) 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 ▶ (육성 전략) 지역 특화 관광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 공항·도시 연결 교통 체계 및 지역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

② 관광 소과정에 걸쳐 첨단기술 기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20년 신규 1개소 → '21년 신규 3개소)

\* (예) (여행전) AI 일정수립, 모바일 간편 예약·결제 등 → (여행중)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 모빌리티등 (여행후) 수집 데이터 기반 향후 관광일정 추천 등

③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도입

- ▶ (지원대상) 국제노선 운행 중인 지방공항을 보유한 광역 지자체(부산, 대구, 충북, 전남, 강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지자체
- ▶ (지원사업)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환승관광·생태녹색관광·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등

④ 창업 초기 중소 관광기업 및 관광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확대(300억→450억원)

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 2.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1) 투자 회복세 뒷받침

①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 110조원 규모로 확대

#### [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

○ '21년 공공기관 투자를 '20년 계획(61.5조원) 대비 3.5조원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

\* 공공기관 투자규모(조원) : ('19) 55 ('20) 61.5 ('21) 65.0

↳ '20년 중 투자계획이 1.5조원 확대(60.0 → 61.5조원)되어 '20년 당초 투자 계획 대비로는 '21년 투자규모 5.0조원 증가

▶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

▪ 투자 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투자집행점검회의(매월), 본사·지사간 집행 관리체계 효율화 등 적극 추진

▶ 집행상황을 본사에서 실시간 관리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체계 구축(~'21년말)

▶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까지는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 7일 이내 집행·계약(발주)실적 모니터링·집계가 가능하도록 관리

#### [ 민자사업 투자 17.3조원 ]

①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 총 13.8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까지 적극 발굴

▪ 신규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절차 단축,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제안보상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

▶ (신유형-포괄주의)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 ② '21년 3.5조원 규모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21.1~)

- 민자 적격성 조사 등 既통과·면제사업의 절차 신속 진행, 민자투자활성화 협의회를 통한 점검 등 집행관리에 만전

▶ '21년 준공 예정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 등 적기개통 추진  
계속 사업인 **GTX-A, 신안산선 사업** 등 공사관리 철저

## [ 기업투자 프로젝트 28조원 ]

### ① '21년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신규 발굴 추진

#### < 참고 : 프로젝트 후보과제(예시) >

- ▶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 → 적정입지의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 ▶ 석유화학공장 증설 → 산단 공업용수 공급설비 보강을 통한 용수부족 해결
- ▶ 복합쇼핑몰 개발 → 광역 환승통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조정 지원
- ▶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 건축물 높이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 既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21년내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고양 콘텐츠파크(1.8조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6조원), 데이터센터(3개소, 1.4조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0.5조원) 등

### ②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 개편(21.1~)

- (발굴·관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 통합 관리

\* 혁신성장 옴부즈만 외에 한국판뉴딜 정보허브 등 온라인채널 활용

- (해소·지원)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 뉴딜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투자지원회의(혁신성장추진기획단)를 뉴딜투자지원회의로 확대 개편

## ②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 집중

- ① 기업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21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한시 허용('21.1.1~12.31)

\*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내용연수 75% 단축)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내용연수 50% 단축)

- ②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한시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21.3)

\* (대상) '21년중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 ③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21.1~)

<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

산은	기은	신보	수은	중진공	기보	합계
8.75	6.25	4.50	1.50	1.15	1.00	23.15

▶ **혁신성장지원자금** : 시설투자(공장설립, 기계장치 구입 등)를 하려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20년 0.83 → 1.15조원, 중진공)

▶ **시설자금보증** : 사업용 공장 신축매입, 자동화 설비 구입·조성, 시설증설 등에 사용되는 자금 보증 ('21년 4.5조원 신보, '21년 1조원 기보)

▶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확대('19~'21년 2.5 → 2.9조원, 수은)

##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

- ①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합리화('21.6)

- (인정요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現 25%이상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지원대상 인정요건 개선

\* (현행) 해외생산 25%이상 축소 → (개선) **예외 인정**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 → (개선) **예외 인정**

- (보조금)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 추가 지원\*

\* (현행) 첨단산업, 지역 주력산업 등에 지원비율(투자액의 21~44%지원)에 2%p 가산  
(개선) **5%p로 확대**

## ② 수요기업과 부품 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 창출

-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시,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대폭 상향(21.6)

▶ **인정요건** (현행) 해외생산 25%이상 축소 → (개선) **10% 이상 축소**  
(현행) 동반복귀 기업간 국내 사업장 인접 → (개선) **요건 폐지**  
▶ **유턴보조금** (현행) 지역별로 투자액(입지·설비·이전비용)의 21~44% 지원  
(개선) **지원비율 최대 5%p 상향 조정**

## ③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대상) 투자·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측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의결로 선정

\* KOTRA(국내복귀지원센터)에서 수시 의향 타진 등을 통해 잠정 후보 선정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산업부장관/부처차관) 보고·의결을 통해 대상 확정

- (내용)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지원

▶ **주요 내용(안)**  
: ① **유턴기업 인정요건**(해외사업장 감축요건, 동일제품 생산요건 등)의 **유연한 적용**  
②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5%p 상향 조정**(비수도권 복귀시 복귀지역 무관)  
③ **정부 보조사업 참여 우대**(최대 3개)

## ④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외투기업은 투자·고용 등 세부기준에 따라 50~100% 감면을 적용中

## ⑤ 유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스마트화, 공정 자동화 추진

- (스마트化) 스마트공장과 로봇 사업을 연계한 공정 혁신을 위해 유턴 기업당 최대 11억원까지 지원 확대(現 9억→11억원)

\* (스마트공장) 유턴 기업당 최대 4억 → 6억원/1년, (로봇 제조혁신) 최대 5억원/1년

- (유망기술 발굴) 산업, 고용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턴 전략 품목'을 30개 발굴(21)하고, R&D 사업 등 집중 지원

## ⑥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이 어려운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20% 이상(제조업), 5% 이상(지식서비스산업)  
(개선) 유턴기업의 경우, 수출입액 비중과 관계없이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허용

## (2) 건설투자 보완 노력 지속

### ① SOC 26.5조원 투자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투자 뒷받침

####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SOC 투자 확대 ]

- ① '21년 생활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20년 대비 +0.5조원)
  - 생활SOC 복합화 사업 438개 선정·추진('20년 289개, '21년 149개) 등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 국비 30조원) 적극 추진('21.1~)
- ② 체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개선 추진

- ▶ 3기 신도시 학교공원: 학교가 신도시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을 미리 반영
- ▶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지역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LH 소유)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확충 (지자체 단독사업 → LH+지자체 협업사업)

#### [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

-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공공주택 확충 및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21.1~)
- '21년중 복합개발사업 7건<sup>1)</sup>(주택 약 1,400호, 6,900억원)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 지속 발굴<sup>2)</sup>

1) ('20) 3건 → ('21) 7건(서울4, 경기1, 부산2) → ('22~) 6건 착공예정

2) 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규모 등 세부계획 수립('21.上)

#### [ 주요 SOC 인프라 투자 차질없이 집행 ]

- ① (도로)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고속노선(신도시 등)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 (적격성조사) '20년 조사 의뢰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즉시 착수하여 사업추진 기간 단축
- \* 시흥~송파 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6개 약 11조원 규모

- (제3자 공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노선의 제3자 공고 신속 추진
  -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21.6월 공고 예정), 42.6km, 0.7조원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1.9월 공고 예정), 22.8km, 2.3조원
- (협약체결) 서창~김포, 오산~용인 실시협약 협상 신속 추진
  - \* 서창~김포 고속도로('21.12월 협약체결 예정), 18.3km, 0.8조원
  - 오산~용인 고속도로('21.12월 협약체결 예정), 17.2km, 1.0조원

② (철도) GTX, 신안산선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민자사업 검토

- ▶ GTX-A('23.말), 신안산선('24.말), 신분당선 신사~강남('22.上) 등 공사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사관리 철저
- ▶ GTX-B('21말 RFP 고시), GTX-C('21말 실시협약 체결) 등 현재 계획 중인 민자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관리 철저

③ (항만)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연내착공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등 항만 인프라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항만배후단지)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1년내 착공하고, 부산항 신항 옹동 배후단지 실시협약 체결 추진
- (항만재개발사업) 부산북항 재개발 등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sup>1</sup>에 따른 4개 사업<sup>2</sup> 투자 등을 차질없이 이행
  - 1] 14개 항만 19개 항만재개발구역 지정('21~'30, 6.8조원 투자)
  - 2] 부산북항 1단계, 인천영종도 투기장, 광양항 묘도투기장, 거제 고현항
- (항만개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새만금 신항 등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지역거점 항만 개발 지속 추진

④ (노후인프라)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강을 위해 안전·재해예방 투자 확대(5.4→6.1조원)

구분	주요 내용
도로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210개소), 설해 대비 자동염수분사시스템 구축(48개소) 등(1.5조→1.7조원)
철도	노후 선로시설 개량(341개소), 내진성능 보강(5개소), 선로전환기 개량(867개소) 등(1.6→1.8조원)
하천 저수지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0.5→0.6조원) 개보수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0.7→1.0조원)
성능 개선	총당금 적립 유도, 관리주체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성능개선비 지원(시범 20억원)

### 3.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 (1) 수출 개선 모멘텀 강화

##### ① 수출기업 현장 애로 해소,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에 총력

##### 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강화('21.1~)

-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 편의지원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개선

▶ (접수창구 개선) (현행) 산업부·중기부 등 12개 소관 부처  
(개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산업부(주요 제조업 등), 문체부(문화·체육), 농림부(농림·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해운수산),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식약처(식품안전·의약품·의료기기),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등), 복지부(보건·의료), 방사청(방위산업) 등

▶ (신청서류 개선)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필요서류 관련 유사서류 통합, 적정 소관부처 배분을 위해 신청서에 '분야' 항목 신설 등

-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추진

\* 기업인 대상 수요조사 실시(분기별 1회) 후, 국내외 방역상황 및 대상 국가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속통로 협상 대상국가 선정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20년→'21년말)을 통해 해외 출입국 정보 안내 및 원스톱 지원\* 지속

\*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접수,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에 대한 전세기 운항

##### ②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 국내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우선 제공\*

\* 국적선사 임시선박(월별 2척이상, 8천TEU) 추가 투입(~'21.2, 필요시 연장)

-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21년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우선 제공

\* '21년중 1.6만TEU급 8척(약 13만TEU 규모) 1분기내 조기투입 유도

- 장기운송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센티브(가점확대 등)를 강화하고, 중진공의 장기운송계약 대행 등 추진('21.2)

- ▶ 우수 선화주 선정시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화주에 가점 부여(해수부)
- ▶ 중진공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중기부)

### ③ 국적 선주사 육성, 컨테이너박스 조달 확대, 해외물류시설 확충 등 해운분야 수출입 물류지원을 강화

- (해외 물류시설 확충) 부산항만공사 등 주도로 국내기업이 저렴하게(50~80% 수준) 이용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

\*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21.3), 로테르담·바르셀로나항('21.9 잠정)

- (국적 선주사 육성)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소유권을 보유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운용리스 방식 도입('21.1~)
- (컨박스 조달) 해양진흥공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박스 4.3만개를 확보하여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 리스 제공

### ④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8조원을 집중 지원 (수은, 무보, 신보, 기보, 중진공 등)('21.1~)

<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

수은	무보	신보	기보	중진공	합계
72.1	167.0	13.0	3.2	0.5	255.8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0.3→0.5조원, 중진공)
- ▶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 :**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대보증 공급 (3.15→3.2조원, 기보)

### ⑤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및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현재 '20년말)을 '21년 상반기까지 연장

- ▶ (수은) ①신규 유동성 대출, ②금융보증 우대, ③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④긴급경영자금 대출, ⑤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
- ▶ (무보) ①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②보험·보증 만기연장

## ②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

### ①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 지원(기업당 1천만원 限)

- ▶ (현행) 오프라인 전시회 현장에 진열(체험)될 샘플 배송 비용(편도)만 지원  
(개선) ①온라인 전시회로 대상 확대, ②현장(화상)상담 후 사후관리를 위해 바이어에게 추가로 발송하는 샘플 배송비도 지원

### ②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 구축(KOTRA, '21.1/4)

\* 현재 주관 기관(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부서별로 화상 상담회 정보 등 산발적으로 제공 → KOTRA 중심의 종합 플랫폼 구축

- **공용 화상상담장(180여개) 관련 실시간 예약 현황·위치 정보 등 제공, 통역지원 예약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 **화상상담 신청 채널 연계\* 및 통합DB 구축으로 상담회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수산식품 온라인 수출통합 플랫폼('21년 구축), 농식품 플랫폼(agrotrade.net) 등 특화 분야 지원 플랫폼과 추가 연계 검토

### ③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온·오프라인)와 연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21.上)

-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공연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수출제품 온라인 홍보 및 즉시구매 지원**

### ④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sup>1)</sup>('20.11)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수출지원 추진단<sup>2)</sup>」을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보완

- 1) ① 온라인 수출플랫폼의 기능적 통합→대형화(입점기업 확대 등)→글로벌화 추진  
② 매년 1만개 수출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비대면·온라인 방식 수출기업화 추진  
③ 전자무역, 통관·인증, 법률상담 등 現 수출지원시스템 전면 디지털화

2) 관계부처,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단장: 산업부 무투실장)

- 특히,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기능적 통합과 글로벌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3대 플랫폼 연계·협력 추진단\*」 가동('21.1~)

\* 산업부·중기부, 무보, 3대 플랫폼(코트라·중진공·무역협회) SI 업체 등으로 구성

### ③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수출 강국 기반 강화

#### [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 ①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20년말→'22년말)  
\* (보험료) 10% 할인, (부보율) 중소기업 97.5→100%, 중견 95→97.5%
  - ②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  
\* (현행) 프랜차이즈, 스마트 헬스케어 등 → (개선) 에듀테크, 공유경제, 콘텐츠 등
  - ③ 바이오·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O2O) 전시회·박람회 개최  
\* (바이오헬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21.3월), (ICT) 월드 IT쇼(5월), (핀테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5월), (에듀테크) 에듀테크 코리아(9월) 등
- ICT 기업에 대해서는 'ICT 수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분야별 온라인 상설 VR전시관 개설('20년 413개 → '21년 1,000개社(누계))  
\* 분야별솔루션: Data, Network, AI, 자율주행, IoT, VR, AR, Cloud, Security  
기업용솔루션, 산업특화솔루션, 비대면솔루션, 스마트시티 플랫폼솔루션 등

#### [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보강 ]

- ①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권리확보, 분쟁 등) 해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추가 확대  
\* ('20) 9개국 15개소 → ('21)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멕시코시티) 추가
- ②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계약서 법률 컨설팅, 저작물 불법 유통 감시, 소송 지원 등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 ④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①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무·법률·기술자문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75→100억원, KIND\*)('21.1~)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②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20.9월 1.2조원 조성)의 당초 목표\*(1.5조원) 달성을 위해 추가 펀드재원(약 3천억원) 모집('21.1~)  
\* 모펀드(정부·공공기관) 0.6조원('19.10월 既조성) + 민간투자 유치 0.9조원 목표

## (2) 국제 협력에 기초한 수출지원 강화

### ① FTA 조기 타결 및 활용 제고 노력

- ① (FTA 확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남방·신북방·남미 등 신흥국과의 FTA 협상 진전 추진
  - (신남방) 한-필리핀 FTA,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 추진
  - (신북방)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지속
  - (남미)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
    -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남미 4개국 공동시장
- ② (FTA 활용) FTA 활용지원센터의 무료 컨설팅 대상 확대<sup>1)</sup>,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 선정<sup>2)</sup> 등 맞춤형 지원 강화('21.3~)
  - 1) (현행)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기업 → (개선)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
  - 2) (예) 경기(기계, 화학), 경남(철강금속, 전기전자), 전남(농림수산물, 바이오) 등

### ② 주요 거점국과 양자 실질 경험 강화

- ① (미국) 美 신정부와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보건·바이오 등 상호 관심이 큰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
  - 연료전지, 친환경차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개도국 시장 공동진출 등 다각적 협력 추진
    - \* 범부처 합동의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통해 분야별 협력방안 점검
- ② (중국)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린, 보건·방역,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 분야 협력 공고화
  - \* 2060년 탄소중립 선언('20.10), '21~'25년 내수확대 중점 추진('20.11 5중전회)
- ③ (신남방)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신남방 국가 협력 강화
  - \* 향후 5년간('21-'25)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문화·교육 분야 등 사람 중심 협력방안 마련(한-아세안 정상회의('20.11) 계기 발표)
  - 수도이전 사업(인나), 경험 산업단지 조성(미얀마), 사회주택단지 건설(베트남)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국과 협력관계 심화

**④ (신북방)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협력 성과 가시화**

\* (러)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회의  
(우즈벡)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 (러시아) '21년까지 연장된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sup>1)</sup>을 추진하고, 9개다리 행동계획 2.0<sup>2)</sup>을 통해 경험 고도화

1) 양국 각 160여개 사업 추진 및 중점 추진할 30대 공동브랜드 사업 마련中

2)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 (우즈벡)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EDCF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예)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EDCF),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등

**③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경험기반 강화**

**① 對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및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21.2)**

\* (예) 對개도국 민간기업 대출, 보증 기능 강화 등

**② 한국판 뉴딜, K-방역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대해 디지털·그린·보건 3대 EDCF 역점분야를 중점 지원('21.1~)**

- (디지털 EDCF) 기존 통신 사업(통신 인프라 현대화 등)과 더불어 중소득 국가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촉진

\* 수출금융·경험증진자금(EDPF) 등을 연계하여 혼합금융 지원을 통해 대규모 민간재원 참여를 촉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 개발

- (그린 EDCF)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 경쟁력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연계 확대\*

\* EDCF는 ADB(3.5억불, 그린 분야, '19.12월 체결), AfDB(6억불, 에너지 분야, '21년 중 체결 예정) 등 협조용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그린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 (보건 EDCF) K-방역체계 구축경험을 활용하여 EDCF 사업을 중심으로 유·무상 ODA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선순환 체계 구축

\* ①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무상) → ②의료 기자재 공급·병원 건립(EDCF) → ③교육·사후관리(무상) 등 종합패키지 지원

### 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① 민간 일자리 안정에 총력 대응

①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하고, '21년 고용 유지·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한시 개편('21.2)

▪ '20년 고용감소시에도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혜택 지속 제공

▶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 증가 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감소분 추징 +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미적용

▶ (개선) '20년 고용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② 업종별 고용시장 흐름, 기업의 고용애로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1/4분기중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20.12월→~'21.12월)하고 1/4분기 고용상황에 따라 8개업종 지정기간(~'21.3월) 연장도 검토\*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사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21.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밀집 지자체에 재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임차·운영비 등) 지원('21.2)

\* (예) 서울·부산·제주: 여행업, 인천: 항공지상조업 등 → 협회 및 지역 내 기업 등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 이직자 대상 교육·훈련·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지역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모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20.12월→'21.12월)

\*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총 7개 지역

③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지속 지원('21.1~)

\*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조원, 본예산): ('20) 0.04 → ('21) 1.4

- 파견·용역업체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sup>1)</sup>, 무급휴직지원금 지원요건 완화<sup>2)</sup>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21.1)

1) (현행) 사업주 단위로 지원하여 개별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 등은 지원 곤란  
(개선) 파견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2) (현행) 10인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지원금 미지원  
(개선)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장은 지원 가능

#### ④ 고용상황 악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확대(5→8개)(21.2)

- ▶ (인천) 뿌리산업 공정 자동화·기술혁신 컨설팅 및 맞춤형 입직 지원 등
- ▶ (경남) 미래자동차·방위·항공산업 기술혁신 지원, 의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 ▶ (경북) 스마트모빌리티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 (충북) ICT 융합·신에너지·신교통 산학연 연계, 유기농·식품 사업화 지원 등
- ▶ (전북) 농식품산업 패키지 지원, 미래형 친환경특장차·수소전기차 집적화 지원 등
- ▶ (추가 선정) 3개 광역-기초 지자체 컨소시엄 추가 선정 예정

#### ⑤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취업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수요자-기업 매칭을 통한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

\* (예) 주15시간 번역업무, 주20시간 경리업무, 주30시간 유선상담업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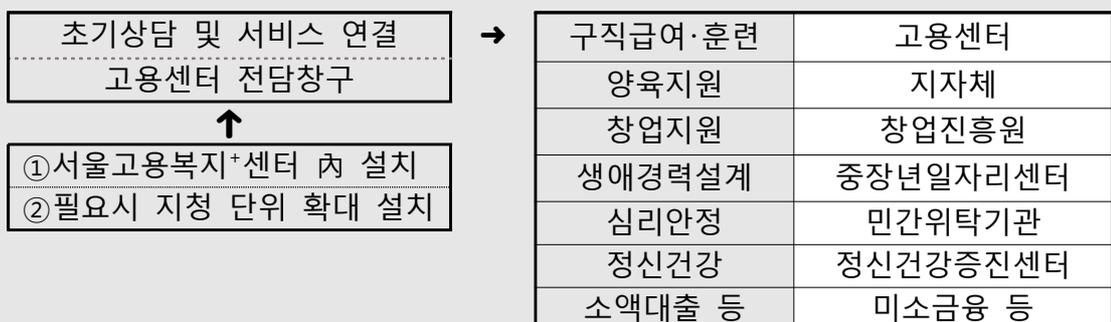
-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간제 일자리 매칭데이(분기별 1회) 추진

#### ⑥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 대상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예) 여행사가 밀집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고용센터 + 중장년센터·새일센터 + 여행업 협회·기업 등으로 구성된 '여행업 고용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지원 전담 상담사 지정

- 과거 전직·재취업 현황 분석 및 근로자대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전직지원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 지원(21.1)

#### < 서비스 전달 체계 >



## ②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박탈된 청년지원 확대

### [ 청년 일경험사업 등 고용지원 패키지 실시 ]

#### ① (10만명 청년일경험사업 도입)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8만), 공공부문(2만) 대상 일 경험 제공('21.1/4)

- ▶ (민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6만명)" 등 8만명 지원
- ▶ (공공기관)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 규모를 2.2만명까지 확대('20.9월말 기준 1.4만명)  
↳ 경영평가 만점기준 상향, 기관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해 확대 유도  
↳ '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청년일경험 추진 권고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기관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해 체험형일자리 확대 유도
- ▶ (기타 공공부문) "공공빅데이터 청년일경험(0.1만명)" 지원

#### ② (운영 내실화) 공공부문의 경우 '사전 계획수립 + 사후 실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 권고

##### ▪ (사전 준비) 단순 반복업무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중심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별 내실화 계획 수립

\*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실화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평가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

##### ▶ 주요 내용

- ① (업무 부여)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문제해결" 업무 수행과제 부여
- ② (기관내 교육)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내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 해당 기관 관할 행정기관(중앙정부·지자체) 직무 견학프로그램도 병행 운영
- ③ (멘토링 제도) 전담 멘토 지정 → 우수 멘토에 인사가점 등 부여
- ④ (보고서 작성) 멘토 지도 하에 既 부여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보고서" 작성
- ⑤ (수료증 발급) 기관장 명의 수료증 발급(성적 우수자의 경우, 별도 표기)

##### ▪ (사후 평가)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sup>1)</sup>하고, 「일경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 혜택 부여<sup>2)</sup> 및 우수사례 공유·홍보

1) 일경험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성과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2)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해당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상 혜택 부여 권고

#### ③ (채용 연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 우대<sup>1)</sup>,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연계<sup>2)</sup> 등 채용 연계 지원

1) (공공기관) '21년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의 5% 이상은 해당기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

↳ 단, 채용 최소요건 등은 기관에서 별도 설정 가능

(지방공기업) 우수 수료자에게 해당기관 채용시 가산점 부여 권고

2) K-Digital Credit(1인당 50만원, 내일배움카드)과 연계하여 디지털 직무훈련 지원

④ 청년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ESG 가이드스\* (한국거래소)」에 반영하여 기업들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2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규범 등을 토대로 작성한 권고지표, Best Practice 등을 제시→ 청년일경험 채용 현황 등의 공시를 지원할 계획

⑤ 정부의 정책대안 모색 및 문제해결 과정에 청년 참여기회 확대

▪ 정부 연구용역·출연(연) 자체과제 수행시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 등 시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출연 연구기관평가 지침 등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청년층에 출연연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R&D 연수기회 제공

[ 공공기관 청년 고용 확대 ]

①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② 고용여건 개선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21.1월 채용계획 발표 예정)

\* 연도별 신규채용 목표(만명) : ('17) 1.98 → ('18) 2.29 → ('19) 2.33 → ('20) 2.57

▪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

[ 청년 구직 창업, 진학지원 확충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제공) 시행에 따라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폐지\*(20.12)

\* (참고)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으로만 지원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

② 지역별 산업구조·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 제공(2.6만명)(21.1~)

③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sup>(가칭)</sup>」 마련('21.6)

\* 기업 인센티브 발굴·확대, 직업계고 학생 역량개발 지원 방안 등 포함

③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로 뒷받침

[ 일자리 예산 적극 집행 ]

-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21년 일자리 예산을 30.5조원으로 대폭 확대('20년 25.5조원 대비 +5.0조원)
- 일자리 예산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sup>\*</sup>(14조원<sup>잠정</sup>)을 설정하여 1/4분기 중 집중 추진(5조원<sup>잠정</sup>)('21.1~)

\* 고용유지지원금, 자활사업 등

[ 직접 일자리·조기 채용 등 역할 확대 ]

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21년 3.2조원)

▶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0.8만개 확대(3.7→4.5만명),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등

②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기조에 맞춰 '21년 1월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추진

▶ (대상) 노인일자리(43.3만), 노인맞춤돌봄(3.0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7만) 등  
▶ (절차) '20.12월중 사업계획 확정 및 모집공고 실시

③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채용 추진

-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3/4분기 중으로 채용 확정

\* 채용 확정규모 : ('20) 3/4분기까지 3% 수준 → ('21) 70% 이상

-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 ④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통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 ① (선정) 상생형 일자리 협약 既체결지역\* 중 미선정된 3개 지역을 조속히 선정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고용 유도

\* (선정완료) 광주('20.6.15), 횡성(10.20), 밀양(10.20), (선정추진) 군산, 부산, 구미

##### < 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

- ▶ (기업투자) 투자세액공제 우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등
- ▶ (직업훈련) 청년구직자 직무교육·훈련수당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숙련향상 등
- ▶ (근로환경) 기숙사 임차비 지원, 어린이집·문화센터 건립, 일터혁신 컨설팅 등

- ② (신규모델 발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상생협약 체결 지원

\* 신규 사업모델 발굴(일자리위원회), 상생요소 개발(고용부)

#### ⑤ 수요자 중심 채용정보 제공·고용상담 등 고용 인프라 보강

- ① 워크넷(www.work.go.kr)의 비대면·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채용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면접·상담이 가능한 화상대화시스템 구축('21.6)
-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적합한 일자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21.8)

\* (현행) 직무역량과 채용정보를 매칭하여 일자리 추천  
(개선) 직무역량 강화 위한 훈련과정 및 자격사항까지 추천

- ② 디지털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24<sup>1)</sup>로 개별 전산망 통합 및 고용센터 인력 보강·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sup>2)</sup> 추진

1) 상담·훈련, 취업알선, 각종 수당 및 고용지원금 등 개별 전산망을 「고용 24」로 통합

2)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제도 개편(검정형 → 검정형, 과정평가형 중 택1)

- ③ 고용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 제공·생산 고용통계에 계절조정 전월비교 방식 강화 추진

## 2.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① 코로나3차 확산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3조원+a 규모로 마련하여 시행
  -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 ②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 임대료 부담 완화

#### [ 민간 부문 ]

- 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21년 6월말까지 연장
- ②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20.12~'21.6)
  -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

\* (예)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 제외

(개선) 임대료 인하 수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인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 소상공인 진흥공단(11.12 既 발표)에 이어, 신보, 기은도 포함

#### [ 공공 부문 ]

- ①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을 '21년 6월말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지속 유도
- ② 지자체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고려('21.1~)

### ③ 세제·세정 및 재기지원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

#### 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 (현행) '20.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 → (개선) '21.1~3월분까지 포함

#### ②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세정지원 지속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4,800만원으로 상향

\*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

-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말까지 연장

\*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既시행중('18.8월~'20년말)

#### ③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21.12)

\* 금융위·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 ④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지속

- 자영업자<sup>123</sup> 프로그램(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21.3)

▶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  
(개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히 지원  
\* "'20.2월~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중 휴·폐업한 자영업자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21.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

▶ (대상) (현행) '20.2~12월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개선) '21.6.30일까지 6개월 연장  
▶ (운영) '20.6.29~'21.6.30까지 채무자·금융회사가 캠프에 매입 신청  
▶ (지원)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재기지원 강화**

-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 지원 확대**

\* (법률자문) '20년 3천건 → '21년 4천건 (사업화지원) '21년 1,200명 신규 지원

-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노하우 전수, 취업·재창업 기회 제공 등 확대 추진('21.1~)**

\* (예) 나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⑥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sup>1)</sup>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확산<sup>2)</sup>추진('21.上)**

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통상 3.2% 내외) 보다 1%p 이상 인하 추진

2) 소상공인 간편결제 탑재 유통채널을 늘리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 등 추진

**4 비대면 확대 트렌드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지원**

**① 소상공인의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용자 등(생활혁신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 포함**

\* (현행) 비과밀 업종 지원 → (개선) "비대면·혁신적 아이디어"는 업종무관 지원

**②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 마련('21.4) 및 시범운영 추진**

-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 구축**

**③ 소상공인 전용 채널인 가치샵시다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협업 운영 확대(500회)**

\* 주요 포털 및 플랫폼, e커머스社 등에 소상공인 제품 전용 기획전 확대 및 온라인몰 메인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④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상점(스마트상가 100곳 등 약 2만개)·공방(600개) 구축 확대('21.1~)**

**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온라인 창업지원 친화적으로 개편('21.1~)**

\* (현행) 오프라인 매장기반의 체험점포

(개선) 실시간 온라인 교육장, 영상·사진·음향 스튜디오, 스마트기기 교육장 등

### 3.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지속

- 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 추진(~'21.1 → ~'21.7)
- ②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대출·보증)을 지원을 301.9조원까지 확대('20년 대비 16.9조원 확대)

<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지신보	기보	합계
46.00	58.10	29.00	5.41	54.40	60.00	25.00	24.00	301.91

- ▶ 수출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앞 자금지원 확대('20년 28.1→29.0조원, 수은)
- ▶ 중소기업 보증지원: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산업,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20년 21.0→24.0조원, 기보)

#### ③ 신용보증기금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3천억원까지 대폭 확대

- ▶ (현행) 대기업 출연금을 활용하여 1호 시범사업(미래차) 실시('20년, 300억원)  
(개선) 신보 자체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 지원 확대('21~'23, 3,000억원)

-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군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심사·지원

#### ④ 저신용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20~'22년 11.7조원)를 차질없이 발행하여 자금조달 지원('21.1~)

#### ⑤ 산업위가지역 내 자동차 부품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1년 추가 연장(~'21년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②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별 피해 회복 지원

#### ① (항공) 여객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항공업계에 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 자금애로 해소 등 지원

- ▶ LCC :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P-CBO 등 정책금융 지원
- ▶ 지상조업사 :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및 항공사 연계 지원 등 자금지원

② (해운)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선박매입후 재대선 (S&LB) 확대 등 해운산업 코로나19 지원대책 지속 추진

\* P-CBO 해운사 비중 확대, 중소기업 회사채 매입

- 중소기업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해진공 보증범위 확대\*(21.1~)

\*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 보증 →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확대

③ (자동차 부품기업) 유동성 지원과 함께 사업재편도 병행 지원

- 취약 자동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2조원+a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

\*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캐코) 등 아직 개시하지 못한 일부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시

-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인력·R&D·컨설팅 등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20년 76개사 → '21년 100개사)

④ (석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단축하고(7~12→7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계편의 제고('21.7)

- 석유공사·석유관리원·가스공사에 분산되어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⑤ (면세점)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21.1~)

\*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종료시점은 추후 결정

③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 ]

① (제도 합리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21.3~)

▶ 수요-공급기업간, 異업종간 융합 등 공동 사업재편 유형,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구체화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

② (인센티브 강화) 수요-공급기업 공동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3종 세트 제공

-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의 요건 완화 추진

\* 현재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 3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 중

- 사업재편 전용 R&D 및 펀드 등 R&D·자금 우선 지원(‘21.1~)

▶ 사업재편 펀드(‘21년 200억원) 매칭, 전용 R&D(‘21년 100억원) 우선 지원 등

-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21.1~)

▶ 사업재편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주력 제조업 등의 설비투자 지원

\* (예)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21년 2조원, 산은), 시설투자대출(‘21년 3조원, 기은)

▶ 사업재편 기업의 수출 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1.5배이내, 100억원 한도, 무보)

**[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

① (발굴·승인)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 승인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지원(‘21.1~)

- (수요발굴) 한국판 뉴딜 업종별 간담회, 사업재편 수요 발굴 네트워크\* 신설 등 업종별·지역별 수요기업 적극 발굴

\* 업종 및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기관별 「사업재편 큐레이터」 지정

- (적용확대) 선제적 사업재편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 ‘과잉 공급 업종 판단요건’을 완화·확대

\* 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과잉공급에 포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3항) → 사실상 쏠업종 지원

- (신속심의) 사업재편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면심사 적극 활용을 통해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 (현행) 총 20P 이상 → (개선) 10P 이내(작성항목 통합, 필수 제출자료 축소)

- (제도연계)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간 협업체계 구축

▶ 가장 적합한 제도 추천을 위한 컨설팅, 신청기업 정보 공유

▶ 사업재편 기업 중소협력업체가 사업전환 신청 시 신속승인(15일)

## ② (사업재편 이행) 사업재편 초기 실행력 담보를 위해 기존 설비교체 지원 확대 및 세제 합리화

- (세제정비)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범위도 합리화(21.3/4)

### ▶ 부채비율 요건 완화

(현행)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자산(토지·건축물 제외) 취득 차입금은 금융채무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개선)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 건축물** 취득 차입금도 금융채무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 등록면허세 감면

(현행) 산업내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신산업 사업재편 미포함)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개선) 신산업 사업재편 기업 등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설비교체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매각시 사적 설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프 등 역할을 강화<sup>1)</sup>하고 관련 규정 신설<sup>2)</sup>

1) 사업재편 기업의 설비 중 기계거래소에서 보관·거래가능 설비에 대하여 기업이 신청할 경우 캠프에서 자체 평가가격으로 先매입(21년중 시범운영)

2) 사업재편 등에서 생기는 유희설비 유통지원 규정 신설(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등)

## ③ (사후지원) 사업재편 승인 이후 이행상황 점검·지원 및 애로 해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21.1~)

- (컨설팅) 산업·자금·고용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 촉진지원단을 구성해 기업과 맞춤형으로 매칭하여 주기적 점검
- (애로해소)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까지 지원

\* 애로사항 청취 → 소관 부처 확인 → 관련 애로사항 이관 → 문제해결 모니터링

## ④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체계적 정비

### [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보완 ]

## 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시장성 차입을 감안한 주채무계열 제도(20.12월 개편) 등 모니터링 체계 적극 활용, 기촉법·기활법·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점검 등(관계부처 TF 운영)

- ②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사후관리 유도('21.6~)
  - 코로나로 인한 산업·기업별 리스크 영향을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항목(산업위험, 영업위험 등) 및 평가기준 등에 반영
  -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극 유도

**< 워크아웃 사후관리 제도(기업구조조정촉진법 16조) >**

- ▶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후 3년 경과기업의 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및 지속 필요성 등 심의·평가  
(주채권은행 평가 → 경영평가위원회(외부위원 5인) 심의·평가)
- \* (예) 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과정에서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되, 경영성과 개선이 미흡할 경우, 다른 구조조정 방안 검토 등 채권은행의 신속한 결정 유도

**[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뒷받침 ]**

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조정 시장 마중물 역할 강화

-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전년대비 1조원 추가 확대 ('20년 2.7조원 → '21년 3.7조원)('21.4/4)
- 기업 차입수요 등 시장상황을 감안, 부채투자(대출·CB·BW 등) 전용펀드 비중('20년 30%) 확대 검토('21.4/4)
-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DIP금융<sup>1)</sup> 전용펀드('20년말 2,000억원 조성 예정) 인센티브<sup>2)</sup> 확대('21.4/4)

1) **Debtor In Possession(DIP)** :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2) 투자 대상기업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회생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시 성과보수 확대 검토(예 : 현행 70%이상 투자시 최대 10%→15% 성과보수 지급)

② 기업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21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21.4/4)

\* '20년 1조원 집행 목표 추진중 → '21년 1조원+α(민간투자 감안) 규모로 추진 (캠코 자본확충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

-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센터(캠코 운영)\*를 기반으로 기업자산에 대한 민간(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 활성화

\* 기업 자산에 대한 수요자(투자자)-공급자(기업)간 자본시장·투자정보 공유 및 매칭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

## 4.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 ① 지역균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 연내 성과 가시화

#### [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전략 ]

-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12.7조원) 신속 추진 ·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 지원 · ③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 본격 추진
-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장애요소 ·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 협의하는 제도개선 Fast-Track 도입

#### [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추진 ]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지역정책 등을 활용해 신속 확산('21.1~)
- 공모사업 선정시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뉴딜 해당여부를 고려하고, 균형발전 요소 반영\*
- \*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하여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 부여
- 디지털 · 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21.上, 現 24개), 규제자유특구 펀드(350억원)를 통한 투자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디지털 · 그린 뉴딜산업 육성을 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추가 발굴('21.上, 지역특구법 개정)
-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을 거쳐 시 · 도별 주력산업을 재편하고 ('20.12) 지역사업 집중 지원('21년, 중기부, 지자체)
-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디지털 · 그린 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3~+10%p)
- \* (현행)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등에 대해 +2%p (개선) 디지털그린업종 등에 대해 대기업 +3%p, 중견 +5%p, 중소기업 +10%p

## [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 지원 ]

-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인센티브 시행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수시' 심사 등 절차 간소화(연간4회 심사→ 수시심사)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지방채 초과발행 신청시 심의위원회 즉시·수시 개최(11월~) 및 협의절차 단축(신청시 1개월 이내 협의결과 통보)
  -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 평가('21.5)후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 부여('21.7)
  - 지역균형 뉴딜 분과<sup>1)</sup>를 활용하여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자체 애로사항 신속 협의·추진<sup>2)</sup>('21.1~)

1) 행안부장관(분과장), 기재·산업·중기·환경·과기부·균형위 1급, 17개 시도 부단체장

2) (예) 수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실화(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 '21.2)

↳ (현행) 모든 수소차 운전자는 안전교육(3시간) 이수 의무화

(개선)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 수소버스 운전자는 안전교육 유지

## [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투자 ]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 지원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sup>\*</sup>」('20.9~) 등을 통해 협업과제 추진상황 주기적으로 점검
    -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균형위, 기재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뉴딜사업 추진 실적 반영
  - 지역소재 민간·공공기관\* 및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
    - \* 여유자금(기본재산·수익 등) 보유한 공공기관이 운용수익 확대 차원에서 자율참여

## 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既 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설계·착공(19개 SOC), 실증·사업화(4개 R&D)를 차질없이 지원('20년 0.4조→'21년 0.7조원)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1년 예산(억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예산
계			7,474
SOC	기본설계 마무리	▪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건	1,739
	착공소요 반영	▪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건	2,516
R&D		▪ 특화산업 R&D 실증·사업화 등 4건	3,219

-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총사업비 3.4조원 규모)의 경우 연내 착공소요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 서남해안관광도로(총사업비 1.0조원), 영종도~신도평화도로(0.1), 국도위험구간 등(1.4), 동해선 단선 전철화(0.5),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0.1), 공공하수시설 현대화(0.4)
-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총사업비 19.2조원)는 기본·실시설계 마무리 등 관련 절차 조속 추진
  - \* 세종-청주고속도로(총사업비 1.0조원), 남부내륙철도(5.0),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0), 충북선고속화(1.3), 제2경춘국도(1.1), 석문산단인입철도(1.0), 대전도시철도2호선(0.7) 등

### [ 혁신도시 시즌 2 ]

- ①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약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 적극 추진(485억원)

####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 |                          |                         |
|--------------------------|-------------------------|
| ①(부산)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 ②(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
| ③(울산)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 ④(경북)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
| ⑤(경남)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 ⑥(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
| ⑦(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 ⑧(강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 ⑨(충북)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 ⑩(제주)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

- ②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4개소 착공 등 생활 SOC 설립 지원

\* 총 11개소 중 '20년 중 7개소 既착공, '21.上 3개소, '21.下 1개소 착공

###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체계 정비

#### [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

- ① (규제자유특구) 정부가 사업분야를 제시하는 Top-down 방식<sup>1)</sup>을 병행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 지정 확대<sup>2)</sup>

1) (현행)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신청 → (개선) 기존 방식 + 중기부에서 사업분야를 Top-down 방식으로 제시하면 지자체가 구체화하여 신청

2) 그린에너지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25년 20개)

- ②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특구 내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21.3)

\* (목표) '20년 1,001개 → '21년 1,200개, (지원) 초기-도약-고도화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기획형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4개)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③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착수('21.9)

#### [ 지역내 산업단지 환경 개선 ]

- 산단 근로자 근무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가칭)」 건립 시범사업(2~3개소) 추진('21.下)

-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대상 확대(10→21개\*)

\* 영화관, 체육관(문체부), 산학융합지구(산업부), 국공립어린이집(복지부) 등

- 문화·복지관련 사업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단일 건축물에 다수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 추진

\* 현재 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은 부처별로 1개 사업, 1개 시설을 지원하여 개별 공급

#### ④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경제 활력기반 보강

##### [ 도시재생 사업 성과 창출 ]

- ①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쇠퇴한 구도심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1.8조원 투자, '21년내 40개소 이상 준공 추진

- ▶ 기금 출·용자(0.9조원) : 민간 상업·주거복합시설, 소규모주택정비 등
- ▶ 국비지원(0.9조원) : 구도심 생활SOC, 주민공동이용시설,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

- ② 도시재생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개별 운영·유사 역량 강화사업<sup>1)</sup>을 통합한 도시재생 예비사업<sup>2)</sup> 추진(80여곳)

1)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화지원, 소규모재생사업 등

2) 절차 : 단기(1년 이내)에 완료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10인 이상 지역주민) → 국토부 신청(지자체) →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 지원(국토부, 1곳당 최대 2억)

- ③ 도시재생 모태펀드(총 625억원)를 활용하여 쇠퇴한 구도심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발굴·투자도 본격 추진

- ▶ (제1호 250억원) '20.6월부터 투자 착수(4개 중소·벤처기업에 39억원 투자 중)
- ▶ (제2호 250억원) '20.11월 운용사 선정 → '21.上 투자 착수
- ▶ (제3호 125억원) '21.上 운용사 선정 → '21.下 투자 착수

#####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활성화 ]

- 既定정한 토지개발 후보지(15곳)<sup>1)</sup> 대상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sup>2)</sup> 방식 도입 추진

1) 사업계획 승인: (~'20) 4건 완료 → ('21) 4건 → ('22~) 7건

2) 토지개발로 조성된 부지 일부를 민간에 장기 임대하여 민간이 시설물을 건축·운영, 운영기간동안 임대료 납부

#### 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살기좋은 농촌 조성

##### [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

- ①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운영 확대('20년 1개소 → '21년 12개소)('21.1~)

\*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교육 및 커뮤니티·창업공간 조성,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②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된 지방이주·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합, 맞춤형으로 제공(~'23년)

▶ 현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자체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중('20.10~12월, 4개 시군)

### [ 한국판 뉴딜 구현 공간으로서 재정비 ]

- ①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 디지털 기반구축·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  
\* 농촌지역 현황 분석,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농촌 공간 정비('21년 신규)
- ② 공공기관(농어촌공사, LH 등) 전문성을 살려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업지원도 병행  
\* 관련 기관간 MOU, 관련 부처 사업간 공모사업 가점제 등 시행
- ③ 관광·일자리·SOC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뉴딜사업을 우선 고려하는 등 지역개발-뉴딜간 연계 강화

### [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확산, 농축수산물 유통 온라인화 ]

- ①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 개선,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농업인 대상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21.1~)
- ② 「스마트팜 AI 경진대회」 단계적 발전\*을 추진하고, 경진대회 결과에 따른 Post R&D 활동 등 사업화 연계 지원('21.下)  
\* ('21) 축산·온실 데이터 활용 AI 경진대회(해커톤 방식) 개최 → ('22) 농장 실증 등 기술 실효성 파악 → ('23~) 국제대회로 격상
-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sup>1)</sup> 준공·가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부처 패키지 R&D 사업<sup>2)</sup> 추진('21.4)  
1) 임대온실 제공, 청년 보육 기자재 실증 등 제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준공)  
2) 스마트팜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 고도화 등 445억원, 119개 세부과제
- ④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 확대\*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추진(~'21.12)  
\* ('20) 양파·마늘·사과 → ('21) 1~2개 주요 채소·과일 추가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 목 차 〉

<b>4.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b> .....	59
①.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59
②.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65
③.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70
④.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77
<b>5.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b> .....	81
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탄소 중립).....	81
②.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86
③.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97
④.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102
<b>6.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b> .....	105
①.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105
②.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108
③.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112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114

## 4.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1.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 ◇ 디지털 뉴딜을 위해 '21년 중 총 12.7조원 투자(국비 7.6조원)  
→ D.N.A 및 비대면경제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체감 성과 창출
  -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6G 핵심기술 선점,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비대면전환 지원 등 다각적 노력 병행

#### (1) D.N.A. 생태계 강화

#### ① 데이터 경제 기반구축 및 데이터 축적·활용 지원 강화

#### [ 데이터의 축적, 활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 ① (거버넌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21.1)

- ▶ 現 민간위원장 체제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
- ▶ 범정부 민관합동 데이터 정책조정 기구이자 민관협력 구심점 역할을 하는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정책 현안과 주요사업을 조율

#### ② (법제정비)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

- \* 데이터의 개념정의,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마련,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데이터관련 분쟁조정 규정 등 포함

#### ③ (축적·활용) 통신·농식품 등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활용을 다각적으로 지원('21.1~)

- ▶ 농식품, 해양수산 등 '21년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누적 16개)
- ▶ 헬스케어 등 新서비스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개방
- ▶ 산업·제조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표준모델 확보를 위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 및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21.3~)
- ▶ 국가지식정보, 교육콘텐츠 등의 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하고, 검색 및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21 정보화계획 수립→'22~'23 플랫폼 구축)

####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21.8) 및 민관 협의체\* 발족('21.11)

- \* 유동인구,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의 확보 등 지원

#### ▪ (스타트업)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2,040→2,580건)

## [ 마이데이터 플랫폼 확산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

- ① (금융) 양질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sup>1</sup>를 도입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sup>2</sup> 마련('21.2)
  - 1」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업권간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갈등 방지
- ②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관리하고(통합·열람·다운로드)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기반 구축\*
  - \* ('21) 공공기관 의료데이터 → ('22) 민간 의료데이터 점진적 확대
- ③ (교통 등)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유통 분야 등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21년 8개 과제)
  - \* (예) 공공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혼잡도 예측 등 제공
- ④ (공공) 본인의 행정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sup>1</sup>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sup>2</sup>('21.2)
  - 1」 (예) 정보주체 동의시 제3자(他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별도로 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2」 정보주체 요구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가능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시범서비스 실시('21.2~)

## ② 5G 확산 촉진 및 6G 핵심기술 선제 확보

- ① (5G 구축)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제·행정지원 등 확대
  -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sup>1</sup>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sup>2</sup>('21.2)
    - 1」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현행) 5G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 등  
(개선) 5G 기지국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추가
    - 2」 통합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시설 투자분) 대1%/중견3%/중소10%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 대3%/중견5%/중소1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20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지속 적용
  - 체육관, 학교 등 생활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 구축시 시설소관 정부·지자체에서 협조공문, 장소제공 등 설치지원('21.上)

**② (5G 활용) 공공분야, 미래산업 등에 5G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 ▶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선도 적용('20~'22년 15개)
- ▶ 정부기관의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5개 기관 실증)
-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드론·로봇 등 중소·벤처기업의 5G 융합서비스 개발·시험을 위한 28GHz 장비·단말 등 테스트베드 구축·고도화('20~'23년)

**③ (6G 확보) 5G 한계를 넘는 6G시대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확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등 본격 개시**

- (핵심기술 개발) 6G 관련 6대 중점분야<sup>1)</sup>를 대상으로 2단계 롤링플랜 방식<sup>2)</sup>의 R&D 투자사업 본격 개시('21~'25)

1)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2) 시장수요, 국제표준 등 불확실성을 고려 시행 3년 후 사업 방향의 일부 재설정 가능

- (국제표준 확보) 美·中·日·EU 등 해외 연구기관과 표준협력회의 등을 개최하고,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등 지원('21.4~)
- (산업기반 조성) 6G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핵심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산업체간 산학협력 등 지원('21.4/4)

**③ AI 활용기반 강화 및 쏘산업 AI 융합 확산**

**① (법제정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 추진('21.下)**

\*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② (활용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200개 지원('21.6~)**

**③ (R&D·실증) 자동차, 선박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AI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 추진('21.1~)**

'21년 주요 추진내용	
핵심 산업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 등 Lv.4 자율주행 기술개발,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 기술개발, 스마트팜·양식, 지능형 로봇 등
보건 의료	중환자 특화 예후예측 분석, 암 전문 병리진단 AI 개발, 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 2.0') 개발 등
공공 분야	보건, 재난, 치안 등 공공지능정보화 분야의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추진('21~'23) 정부서비스 신청, 고지·납부 등을 익숙한 채널(메신저, 문자 등)로 미리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9→39종)

**④ (AI 융합) 대규모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학습 지원을 통한 AI+X 7대 프로젝트\* 알고리즘 개발('21.1~)**

\* ①군 의료 지원, ②감염병 대응, ③해안경계, ④산단 에너지 효율화, ⑤불법 복제 판독, ⑥지역 특화산업 혁신, ⑦국민안전 확보

## (2) 비대면 경제 선도 및 SOC 디지털화 촉진

### ①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분야별 인프라 구축

- ① (의료)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sup>1)</sup> 구축,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sup>2)</sup>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 고도화('21.1~)  
1) 중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 치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2)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 등 위해 ICT 활용 의료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확산
- ② (돌봄)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돌봄로봇 개발<sup>1)</sup>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sup>2)</sup>('21.1~)  
1) 이동보조, 욕창예방, 배설 및 식사보조 등 서비스모델 연구개발  
2)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 → 맥박·혈당·활동 등 감지 + 말벗·인지기능 지원
- ③ (교육)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 콘텐츠 확충(170개)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대상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8만대)
- ④ (유통) 지역 거점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을 통한 비대면 유통혁신\* 추진('21년 2개소)('21.3)  
\*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지역슈퍼 등이 비대면 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유통물류인프라(상품주문~배송과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재고관리 등) 구축
- ⑤ (금융)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 조건을 확인·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허용('21.3)

### ② 국민안전, 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SOC 디지털화 촉진

- ①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딜사업 가속화('21.1~)
  - ▶ (도로·철도) '21년말까지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에 전기설비 IoT 계측기 설치
  - ▶ (공항·항만) '21년 중 4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 (수 자 원) '21년말까지 국가하천 57%에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21년 중 지방상수도 27%를 스마트化
  - ▶ (재난대응) 실시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未정비 재해위험 지역 340개소(~'21) 등에 대한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구축
- ② 전국 3D지도<sup>1)</sup>, 정밀 도로지도<sup>2)</sup>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본격화('21.1~)  
1) ①3D 지형지도를 전국 도심지에 구축, ②3D 건물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21년에 자율 주행 지원을 위한 일반국도 약 11,670km 구축

### (3) 뉴딜금융 확충 등 금융혁신

#### ①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

① (정책형 뉴딜펀드)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적극적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유인체계 도입

- (인센티브)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별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자금의 출자비율을 차등화 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뉴딜 산업별 성숙도, 투자 위험도, 민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정·정책 자금을 25%~45% 범위(평균 35%)에서 출자비율 차등화

- (보수체계)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의 적극적 투자집행과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선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보수체계 도입안(예시) >

보수 종류	일반적 산정방식	개선안
관리보수(management fee) : 운영비용 성격	펀드 조성액 × 2% (매년 지급)	3년차부터 약정액이 아닌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 수익에 따른 성과급 성격	[펀드수익률 - 기준수익률] × 20% (펀드청산시 지급)	관리보수를 하향과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상향

- (성과공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 조성('21.3~)

②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등 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21.3)

\* 집합투자기구 유형, 펀드 투자대상 등

▶ (펀드유형)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및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

▶ (투자대상) 한국판 뉴딜분야 관련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

▶ (운영방식)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 뉴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③ (민간 뉴딜펀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② 뉴딜 등 혁신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① (뉴딜분야 정책금융 본격지원) '21년 중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총 「17.5조원 +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추진('21.1~)

\*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뉴딜 연계 품목(200개)

< 기관별 공급 계획(단위: 조원)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중진공	무보	기보	합계
4.5	2.6	5.0	5.4	0.6	0.8	1.0	17.5+α
17.5('21~'25년 100조원 공급 계획)				α (2.4조원 등 추가 노력)			

### ▪ (5개년 100조 달성 프로그램) '21년 중 17.5조원(5년간 100조원) 공급을 위해 대출·보증 공급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 신설

< 대표 프로그램(안) >

- ▶ (산은)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신설 등 (4.5조원)  
\* 한국판 뉴딜 숲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우대금리 최대 △0.8%p 적용)
- ▶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  
\* ①뉴딜 중점분야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우대(최대 △1.0%p)  
②차주별 통합한도 설정을 통한 개별단계 신속 지원
- ▶ (기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대출 등(2.6조원)  
\* 신·기보와의 MOU를 통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특화 지원추진(금리우대 최대 △1.0%p)
- ▶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5.4조원)  
\* ①자금수요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지원  
②우대지원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 최대 △0.4%p 차감)

### ▪ (기타 프로그램) 중진공·무보·기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자금지원 확대 (2.4조원+α)

- ▶ (중진공) 제조현장 스마트화(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6조원)  
↳ 스마트공장 보급 등 참여 중소기업 대상 (한도 100억원)
- ▶ (무보) 5G 사업 해외진출 지원 보증 (0.5조원)  
↳ 통신장비 수출시 해외 수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패키지 제공  
신재생 프로젝트(태양광 등) 참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0.3조원)  
↳ (해외 신재생에너지: 0.2조원) 해외 태양광, 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수출기반 구축: 0.1조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출업체의 원자재 구매 등 지원
- ▶ (기보) 스마트제조·서비스 및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1.0조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및 보증료를 감면(최대 △0.3%p) 등
- ▶ (기타) 차세대반도체·헬스케어·수소에너지 금융지원 등 강화 (수은)

### ②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57.3조원 집중 공급('20년 대비 9.1조원 확대)

- ▶ 혁신성장산업 지원: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의 수출, 해외진출, 수입 등에 필요한 대출 및 보증 지원('20년 8.5→12.0조원, 수은)
- ▶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혁신품목 수출 창업·벤처기업 보증료 우대(△50%) 및 잠재력 위주의 심사 지원('20년 1.4→1.6조원, 무보)
- ▶ 정부6대 신산업 보증공급: D.N.A(Data, Network, AI) 및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원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20년 0.6→0.7조원, 기보)

## 2. 벤처·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 (1)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 ① 신기술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① (공공기관 선도)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 추진('21.上)

- 기관별로 제공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One-Stop 지원 서비스(접수→제공→확인서 발급) 제공

\* (예) K-테스트베드<sup>공항공사</sup> : 항공·관제 기술, 안티드론기술 분야 등  
K-테스트베드<sup>한국수자원공사</sup> : 수력·친환경 에너지 기술, 댐 관리 기술 분야 등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공공기관 혁신을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통보 → 기관별 혁신계획·추진 → 경영평가를 통한 실적 점검(혁신성장 가점 지표 연계)

② (민간참여 유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및 협회 등도 K-테스트베드 체계로 편입하고 참여 인센티브 제공 추진('21.上)

\* (예) 동반성장 평가 기준 중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③ (연계지원 제공) 'K-테스트베드'를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 지원

- 실증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적극 연계\*하여 수의계약·구매면책 등 조달시장 진입 지원('21.上)

\* K-테스트베드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능을 확인한 시제품의 경우, 패스트트랙II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시, 일부 혁신성 평가 항목 간소화

- 무역협회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상사 등과 매칭하여 해외 실증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21.下)

## ②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 [ 벤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 ① 뉴딜분야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의 연계 추진(‘21.4~)
  - \* (예) 유망 벤처기업(비대면혁신벤처) 등은 해외 현지실사, 현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사업 선발 시 우대
- ② 국제기구와 국내 벤처육성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내 벤처와 해외 벤처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지원(‘21.6~)
  -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매칭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모태펀드의 글로벌펀드를 통해 후속투자를 유도

###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 ]

- ①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D-8-4) 및 기술창업준비(D-10-2) 비자 발급요건 확대(‘21.6)
  - (기술창업(D-8-4)) 고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법인의 대표(외국인)에게도 발급
    - \* 법무부 및 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한 사업
  - (기술창업준비(D-10-2))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보조금 수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발급
    - \* 법무부 및 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한 대회, 보조금사업, 해외 지재권
- ② 창업비자점수<sup>1)</sup> 산정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지재권 보유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하고(‘21.6) 온라인 창업비자교육을 개설하여<sup>2)</sup> 접근성 제고(‘21.3)

1) 총 448점 중 80점 이상 획득시 기술창업 비자 발급

2)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

#### < 창업비자 관련 개편방안(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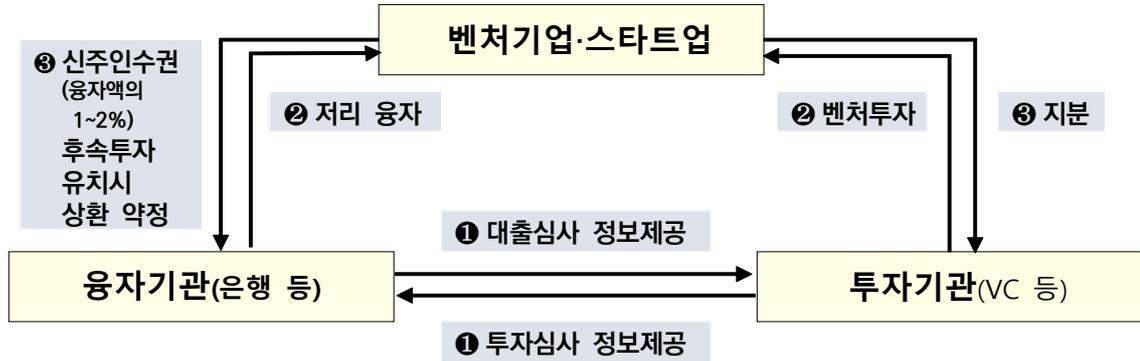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선
기술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이민점수제 80점 이상</li> <li>* 국내 지재권 보유·출원시 득점</li> <li>▶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참여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이민점수제 80점 이상</li> <li>* 국내·해외 지재권 보유·출원시 득점</li> <li>▶ 좌동</li> <li>▶ 고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추가)</li> </ul>
기술 창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출원</li> <li>▶ 창업비자 교육, 창업계획서 심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출원</li> <li>▶ 좌동</li> <li>▶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추가)</li> <li>▶ 일정금액 이상 창업보조금 수혜(추가)</li> </ul>

### ③ 벤처자금 공급저변 확대 및 육성지원기반 강화

#### [ 벤처투자-대출 연계 강화 ]

#### ①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용자제도\* 도입

\* 용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용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



#### ▪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운용을 실시('21.下)

\* (예) ①벤처투자 유치기업에 한하여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근거 마련  
 ②용자-상환이 벤처투자자와 상호 연동되도록 VC와 용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 ▪ 향후 他 공적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 추진

#### ② 벤처투자계약의 절차비용 완화를 위해, 벤처투자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벤처투자 표준계약을 공동으로 마련·보급('21.6)

\* VC협회, 엔젤투자 협회, 엑셀레이터 협회

#### [ 벤처기업의 R&D 사업 활성화 ]

#### ○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요건을 개선('21.1)

#### ▪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인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부채는 정부 R&D사업 신청기업의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현재 부채비율 1,000%(중기부) 또는 500%(산업부) 이상 기업은 참여 제한되나,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부분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로 인식

\* 상환전환우선주(RCPS) :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잔여재산 분배 등에 우선권을 보유한 주식

## [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이행 ]

- ①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을 목표로 '21년 200개를 발굴하여 부처간 협업방식\*으로 지원

\* 협업체계 : 창업기업 선정(분야별 부처), 사업화 자금·금융지원 등(중기부), 기술·인증 컨설팅 등 특화 프로그램(분야별 부처)

- ②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25년까지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6조원 조성을 목표로 '21년 1조원 조성

- ▶ (비대면 펀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 ▶ (바이오 펀드) 진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 ▶ (그린뉴딜 펀드) 그린 스마트 스킴,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 ③ (K-유니콘프로젝트) 아기유니콘<sup>1)</sup>→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sup>2)</sup>('21.1~)

1) '21년 지원 규모 확대(40개→60개사), R&D·정책자금·보증·투자 연계지원

2) 복수의결권 도입, 점프업 펀드 조성,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 운영, 혁신 벤처기업의 유입 촉진을 위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

## [ 대기업의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플랫폼 본격화 ]

- 기존의 사내벤처 개념을 확장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여 대기업-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 완비('21.1~)

\* 대기업이 풀지 못한 과제를 스타트업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

-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상시 문제 발굴·선별 체계 구축 및 분기별 경진대회 개최
- ▶ 우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과 정부의 후속 지원을 연계 하여 대기업-스타트업간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

\* (대기업) 고가장비, 네트워크, 보육 프로그램 등 / (정부) 사업화, R&D, 기술보증 등

## [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등 마련 ]

- ①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21.6)

- ②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 보완을 위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21.1/4)

\* 플랫폼 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플랫폼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및 프로토콜(규약) 합의를 통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추구

## (2) 유망 신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

### ① 로봇, 이차전지, 드론 등 미래먹거리 확보

- ① (로봇) 바이오 산업 등으로 로봇도입 분야를 지속 확대<sup>1)</sup>하고, 5G와 연결되는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sup>2)</sup> 추진('21.上)  
1) (현행) 뿌리산업, 섬유, 식음료 등 → (개선) 바이오, 화학, 항공, 조선산업 등  
2) 실증환경 구축 및 실증시험, 인증 등 본격 추진
- ② (이차전지)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R&D 예타를 추진하고('21.上), 전기차·ESS용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센터 구축('21.下)
- ③ (드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내에서 드론 물류배송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21.2)
- ④ (XR<sup>1)</sup>) XR-타산업 간 융합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제조·의료 등 실감기술 적용 효과가 큰 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영역 확장을 위해 「XR 플래그십 프로젝트<sup>2)</sup>」 추진('21.4)  
1) XR(가상융합기술, eXtended Reality):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등을 통칭  
2) (예) 제조 현장 설계·운영·관리, 의료 분야 진단·예측·치료 등에 XR 활용 지원
  - XR 디바이스의 개발·보급 가속화를 위해 수요산업 맞춤형 핵심 부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리빙랩 구축\*  
\* 5G 기반 VR·AR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 VR·AR 기기 및 서비스 실증기반 구축

### ②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한 수소 생태계 구축

- ① (수소발전) 수소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수소법 개정)
- ② (수소산업) 수소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sup>1)</sup>을 지원하고, 수소경제펀드<sup>2)</sup>를 통한 관련 산업 투자 지원도 병행('21.1~)  
1) 연료전지, 충전소, 수전해 등 수소 핵심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21년 120억원)  
2) 수소경제 초기기업 육성펀드(최소 340억원 규모)를 통해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③ (수소차)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수소차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보급을 지속 확대('21.1~)  
\* (수소차) '21년 2.6만대, '22년 6.7만대, '25년 20만대, '30년 85만대 보급(누적)  
(수소충전소) '21년 188기, '22년 310기, '25년 450기, '30년 660기 확충(누적)
- ④ (수소도시) 수소도시법을 제정하여 수소도시 계획수립, 도시 내 인허가 특례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21.9)

### 3.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 (1) BIG3 성장동력화

##### ①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 성과 창출에 집중

- 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BIG3 성장동력화를 강력 추진
  -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기업 애로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해 3+1 분과회의 설치
  -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업계·기업의 소통창구로 역할



- ▶ (구성)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복지·금융위(5개부처 장관) + BIG3 산업별 기업·전문가
  - \* 다른 관계부처는 사안에 따라 참석
- ▶ (운영) 격주단위로 정례 개최하여 ①추진상황 점검, ②민간소통·애로해소, ③종합적 적기대응 중심으로 운영

- ②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BIG3를 연계하여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핵심과제 등을 선정해 집중 추진

- ▶ (육성지원)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 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 집중지원
- ▶ (규제혁파)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
- ▶ (생태계 조성)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 ② BIG3 성장동력화를 위한 차질없는 지원 지속

### [ 미래차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

#### ① (자율주행차) 다부처·대규모 R&D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로, 제도 등을 완비

\* (범부처 기술사업단 운영)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공동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1~27, 1.1조원)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SW, 안전성평가기술 등 개발

- ▶ (도로) C-ITS(車-車, 車-도로 등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공유해 주는 시스템)를 전국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21~25)
- ▶ (제도)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21~24),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21.12),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시범운영

#### ② (전기·수소차)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sup>1)</sup>,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상향<sup>2)</sup>, 전기차 보조금 개편<sup>3)</sup> 등 수요기반 지속 확충

- 1) 렌트카 등 대규모 수요자 의견수렴 및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법 개정 추진(21)
- 2)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 '21년 80%→ 단계적으로 상향
- 3) 환경개선 효과 개선, 차량성능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 ▪ 국민 생활·이동거점 위주로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 확충

\* (전기차충전기) '21-'25년간 급속충전기 7,500기 추가 구축  
(수소충전소) 수도권 수소충전소(13→ 53기) 보급

#### ③ (생태계 구축) 미래차로의 사업재편<sup>1)</sup> 및 중소·스타트업 등 지원<sup>2)</sup>

- 1) 미래차로의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21년중 100개 이상 발굴하고 R&D 등 지원
- 2)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2,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 조성 1,500억원 「BIG3 펀드」 본격 투자

### [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 ① (분야별 육성) 화이트·그린·레드 등 바이오 분야별 지원 강화

<b>White Bio</b> (화학·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요소기술 확보 및 제품화 R&amp;D 지원</li> <li>▶ 식품, 화학, 환경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화이트바이오 연대 협력 협의체*를 구축(21.上)</li> </ul> <p>* 한국 바이오협회 주관, 타 산업의 협회와 협력 수요 발굴 및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p>
<b>Green Bio</b> (농수산업 식품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중점산업) 마이크로 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육성을 위한 R&amp;D, 제도개선 등 중점지원</li> <li>▶ 종자, 식품, 미생물, 해양소재 등 분야별 육성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지원 등 관련 인프라 및 솔루션 지원(21.3)</li> </ul> <p>* (예) (미생물) 발효탱크, 제형화장비 등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등</p>
<b>Red Bio</b>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분야의 시제품 생산·실증 등을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예타 중), 원활한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기준 강화 등 추진</li> <li>▶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시범사업(20~21년), 본사업 예타 신청(20.11)) 및 보건의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인력양성·증장기 전략 수립(21.上)</li> <li>▶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보완 등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제도기반 마련 추진</li> </ul>

② (클러스터 강화) 既 구축된 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추진<sup>1)</sup> 하고, 클러스터간 인프라 공유<sup>2)</sup> 등으로 보유 자원의 상호 보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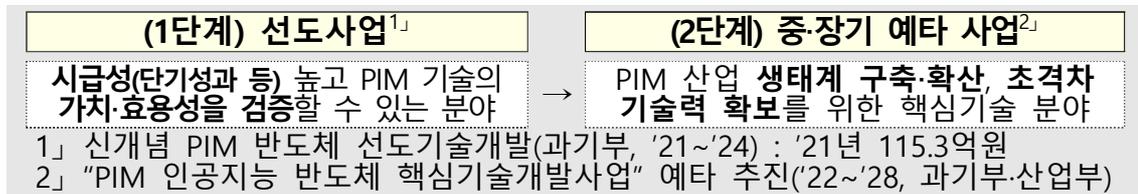
- 1) (오송·대구 첨복단지) 창업기술 상용화 센터 추진, 미래의료 산업 원스톱 지원 등
- 2) 기업수요가 많거나 성장유망 분야 지원 시설·보유 기관 기능맵 제작·보급

③ (인재육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23년 완공)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교육 실시(100여명, '21.下)

\*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 processing Research Training): 첨단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

**[ 시스템반도체 육성으로 반도체 新격차 창출 ]**

① (기술) 세계 최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저장(메모리)+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PIM) 기술개발 추진('21.4~)



② (인프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內 지원기업을 확대하여 (10→20개사), 국내 팹리스 육성 지원 강화

③ (기업) 수요기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간 시너지 창출<sup>1)</sup> 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도전하는 유망기업 집중 육성 추진<sup>2)</sup>

- 1) 융합얼라이언스2.0 운영(자동차, 가전, 바이오,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6개 분야)
- 2) ① 미세공정 전환, 신규 IP 개발·활용 등 집중육성 프로그램 신설('21년 55.2억원), ② 산·학·연 연계 응용기술개발 지원 확대('20년 18.5→'21년 70.1억원)

④ (투자) 인공지능,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하위펀드) 조성('21.8)

⑤ (세제) 첨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⑥ (인재) 기업 맞춤형 인력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형 인력양성\* 추진

\* '22~'31년간 정부 1,500억원, 민간 1,50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 예타 추진

⑦ (협력) 팹리스-IP기업, 디자인 하우스-팹리스간 연대·협력 및 상생지원을 위해 공동 R&D 사업 등을 적극 지원('21.1~)

\*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핵심IP개발 등 신규 R&D 과제 기획시 협력 강화

⑧ (환경)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 추진('21.12)

\* 반도체 장비 클리닝용 공정가스, 식각 공정용 신물질 등 원천기술 개발

## (2) 주력 제조업 혁신 강화

### ①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초 토대 확충

- ① (디지털화) 제조업 전반에 D.N.A를 적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외부효과가 큰 제조업 업종내, 업종 간 협업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21.上)
  - \* (예) 신소재 개발(철강·바이오·섬유·화학 등), 생산공정 혁신(조선·철강 등)
  - 산업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1.上)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산업데이터 활용·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선도사업 발굴·지원, 표준화, 실태조사 등의 근거 마련
  - \* 민간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체계 마련을 위한 협업지원센터 구축
- ② (친환경화) 투입·공장·순환 등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산단 내 사업장의 생산단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21년중 클린팩토리 300개 구축('21.1~)
  - \* 산단내 중소·중견 사업장에 대한 공정진단 및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 생태산업 개발, 재제조 시장 확대, 희소금속 회수·재자원화 등 산업부문 순환경제 적극 활성화('21.1~)

### ②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 가속화

- ① (스마트공장) 선도형 스마트 공장인 K-스마트등대공장 본격 구축('21.1~)
  - \* ('21) 10개(신규)→ ('22) 25개→ ('23) 45개→ ('24) 70개→ ('25) 100개(누계)
  - 스마트 공장의 레벨(고도화)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여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유도
  - \* (현행) 고도화 1.5억원 → (개선) 공장수준에 따라 2억원 / 4억원으로 차등
  - 노후설비 문제로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설비교체·S/W 업그레이드 지원(630개사)
- ② (스마트기계) 뿌리산업 3대 제조분야(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반기계의 지능화·로봇화<sup>1)</sup> 및 CNC<sup>2)</sup> 국산화 추진('21.上)
  - 1) 지능화·로봇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성능평가 방법 개발 등('21~'26)
  - 2) 동작기계의 모든기능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Computer Numerical Control)
    - ↳ 제어기, 구동계 및 인터페이스 통합개발 및 실증 추진('20~'25)

- ③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 도입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절차 신설<sup>1)</sup>, 지자체 출자특례 마련<sup>2)</sup> 등 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21.上)  
 1) 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30일 이내에 소관 부처에 확인받아 신청자에 통보  
 2) 국가시범도시 SPC 설립시 지자체 출자 근거 및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배제 특례 마련
- ④ (친환경도시) 지자체 주도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21~'22)  
 \*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패키지)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 지원
- ⑤ (스마트 그린산단) 제조과정을 디지털화 하고 산단내 그린 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산단(3개 내외) 조성('21.下)  
 \* (디자인) 혁신센터, (시제품) 시뮬레이션 센터, (제조) 스마트 공장, (물류) 지능형 물류망 스마트 산단 에너지 플랫폼 및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등 구축
- ⑥ (스마트선박)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단계별 실증<sup>1)</sup>을 추진하고,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만연계 시스템<sup>2)</sup> 개발('21.3)  
 1) 시뮬레이션('21~)→소형시험선('22~)→실해역 실선('24~'25) 3단계 추진  
 2) 자율운항선박을 자동으로 안벽에 계류시키고 능동 제어하는 시스템
- ⑦ (친환경선박) 친환경 관공선 9척 건조, 민간 보조금(최대 20%) 지급, 국가 인증제도 운영\* 등 친환경 선박 전환 확산('21.1~)  
 \* 기술 난이도·국산화율 등을 고려한 등급 부여 후, 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

### ③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특구제도의 전면 개편 및 혁신

- ① 경제자유구역 운영방향을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까지 확대하고,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입지 인센티브\* 지원('21.上)  
 \*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전용용지 입주 등 지원
- ②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 표준공장\*, 스마트물류센터 등 SOC 핵심 인프라 구축  
 \* 지역 수요에 맞추어 입주공급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축
- ③ 중장기적으로 경제특구의 인센티브 개선, 경제특구간 연계·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제도 효율성제고 방안 강구

### (3) 소부장 2.0 성과확산

#### ① 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 및 기술 확보 지원 강화

#### [ 소부장 분야 국내 밸류체인 공고화 ]

- ① (핵심전략품목 공급 안정화) 對세계 338개+a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해외 M&A, 해외투자 유치 등 공급 안정화 지속 추진
  - 시급한 對日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21년내 공급 안정화 완료
- ②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강화)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패키지 지원 추진
  - 산업 공급망에 핵심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21년중 총 20개 이상의 신규 협력모델 추진
  - \* 공동 R&D, M&A, 합작법인 신설, 사업재편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 발굴
  -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한 상생모델도 확대(5년간 50개)\*하고, R&D 지원규모 상향(6→20억원) 등 지원제도 강화
  - \* 공기업 등까지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단기-국산화 뿐 아니라 중기-글로벌투자까지 지원
- ③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글로벌 수요기업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

#### < 소부장 특화단지 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

<b>인센티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모델 R&amp;D우대, 실증비용(1억원) 지원</li> <li>• 32개 공공연 Test-bed 우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조금 지원</li> <li>• Cash grant 지원</li> </ul>
<b>규제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자유특구와 연계 : 200여개 규제 Free화</li> <li>• 핵심소재 개발·생산 및 긴급수급대응을 위해 환경 Fast-track 강화</li> <li>• 규제애로에 대한 즉각 검토(15일내)</li> </ul>	
<b>공동인프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소요비용 30%)</li> <li>• 공동 비축시설(토지 무상임대, 소요비용 일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조달 다변화 지원</li> <li>•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li> </ul>

- ④ (사업화 단계별 지원확충) 테스트베드, 양산평가, 신뢰성보험 등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완비하여 생산역량 확충('21.下)

\* '21년 테스트베드 154종 구축, 양산 및 신뢰성 평가 등 620억원 지원

## [ 기술확보 및 특허관련 지원 강화 ]

- ① (기술개발) 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여 현재 공급망 안정(R&D 핵심품목) 및 미래 공급망 창출(미래선도품목) Two-Track 전략 추진
  - (R&D 핵심품목) 공공(연)과 공급기업이 함께 완성도 높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국가핵심소재 연구단\* 확대(32→57개)
    - \* 소재+공정+부품시스템 패키지 개발, 사업기간 내 수요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등
  - (미래선도품목) 향후 5년 이후 미래 공급망(GVC) 창출에 핵심적인 품목을 선제 발굴하여 초격차·도전적 R&D 지원
    - \* (예) AI 반도체, 전고체전지, 마이크로 LED, 상온초전도체, 위상물질 등
- ② (분쟁지원)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센터」에 '소부장 특허분쟁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여 원스톱 특허분쟁지원 프로그램\* 제공('21.3)
  - \* ①소부장 특허분쟁 집중 모니터링, ②분쟁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전략 지원
- ③ (특허지원)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IP-R&D를 의무화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 강화('21.3)
  - \* ①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②지식재산 공제, ③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④ (세제지원)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지정<sup>1)</sup>되는 차세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sup>2)</sup>('21.2)
  - 1) 對세계 338+α 품목 중 GVC 핵심기술 선정 및 추가(산업부)
  - 2) 핵심전략기술 중 세액공제 대상 검토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기재부)

## ②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① (으뜸기업 육성) 국내 공급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21년 20개 이상 선정하여 집중 지원

R&D	정부 R&D 지원(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대기업) 67% 이상→35%, (중견) 50% 이상→35%, (중소) 33% 이상→20%
실증 자금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Test-bed 개방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 정책금융 설비투자 대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우선지원
규제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 ② (글로벌 협력 확대) 국내 공급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구매조건부 R&D 및 해외 공급망 참여 지원\*('21.1~)
  - \* 해외 표준·인증 획득 지원(최대 1억원), 한·독 기술협력센터 운영 본격화 등
- ③ (기술규제 극복)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10×10 정보맵」 구축('21.6)
  - \* 의료방역용품,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포스트코로나 관련 소부장 품목 우선 선정

## 4.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 (1)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 ① 서비스 R&D 등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

#### [ 서비스 혁신 제도기반 공고화 ]

- ① (중장기 전략)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 최근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1.1/4)
    - 5G,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발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 교역 활성화,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 분석·진단
    - 유망서비스업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고도화와 함께 R&D 확대, ICT 활용, 표준·통계화 등 기초인프라 혁신 병행
  - ② (제도적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
  - ③ 한걸음 모델을 제도화하고 신규과제 선정 등을 지속 추진
    -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新사업 진입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을 제도화\*(‘21.上)
      -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의 후속조치(법령 개정, 실증특례 개시 등)를 이행하고, 신규과제를 선정(‘21.1/4)하여 추진
- \* ①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②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③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 [ 서비스 R&D 확충 ]

- ①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R&D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21.1~)

\* '16~'20년 4조원 → '21~'25년 7조원('21년 1.51조원)

- ▶ (비대면 서비스) 원격교육, 원격엔터테인먼트 등 비대면 ICT 특화기술 개발
- ▶ (제조-서비스 융합) 의료기기·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등 개발
- ▶ (신비즈니스 모델)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 기반 유망 비즈니스 모델 개발

- ②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新사업모델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21.1~)

- ▶ 온라인경제, 공공 분야 등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150개사)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위한 R&D 지원
  - \* 비대면스마트워크, 로봇자동화, 물류·고객관리, 온라인의료·교육, 업종공통솔루션 등
- ▶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53개, 130억원)

-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유지를 위해 연구활동비 및 고용유지비(최대 2명) 지원(190개 과제)('21.上)

## ② 유망 신서비스 산업 발굴 및 서비스산업 혁신 지속

- ① (외환) 환전·송금 위·수탁 등 새로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sup>1)</sup>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sup>2)</sup>를 지속 운영(분기별)

1) '20년 적용사례 : 환전대금 편의점 수령, 외국인관광객의 송금대금 ATM 수령 등  
2) 외환분야 신사업의 규제 유무를 신속히(30일 이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상 규제를 면제

- ② (반려동물) 반려동물 관련 제품(사료 등) 및 서비스 산업(펫 보험 등)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下)

###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 주요 추진과제(안) >

제품	반려동물 사료(펫푸드)에 특화된 관리기준 마련
서비스	동물진료의 표준화*를 추진 후, 해당 표준화된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행) 진료 표준화 부재 → (개선)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

- ③ (물류) 중소기업을 위한 거점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3개소), 첨단물류설비 확충을 위한 용자 프로그램 신설('21.5)

\* 첨단 물류장비 및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상품 운영, 이차보전(2%p)

## (2) 문화강국 도약 프로젝트 추진

### ① 한류성과가 지속·도약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집중

- ① (신한류) 콘텐츠 다양화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신한류 진흥
  - 온라인 K-Pop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 음향, 조명, 송출설비 등을 갖춘 전문 스튜디오 조성(1개소)
  - 드라마 등 OTT 관련 영상 콘텐츠, 실감콘텐츠 제작 등 지원('21.1)
  - 콘텐츠 해외거점\* 등을 활용해 콘텐츠 수출을 위한 화상상담을 지원하고('21.1~), 재외 문화원의 한국문화제 개최(10개소)('21.下)
  - \*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7개소(중국 북경·심천, 일본 동경, 미국 LA, 프랑스 파리, 인니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및 마케터 1개소(UAE 아부다비)
  - 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펀드(250억원) 및 모험투자펀드(873억원→1,500억원) 추가 조성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
- ② (1인 미디어) 우수 1인 미디어 제작자를 적극 육성('21.7)
  - \* 1인 미디어 전업종사자를 위해 사무공간, 제작시설을 갖춘 특화인프라 조성
- ③ (게임)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 및 5G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실감형 게임 등 제작 지원('21.1)
  - \* (예) 보안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게임에 분산형 데이터 저장, 블록체인 등 활용
- ④ (문화예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및 인프라 지원 강화
  - 실감형 공연 콘텐츠 등 비대면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국립극장 등 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 운영기간(일몰) 연장('20.12월말 → '22.12월말)
  - 문화도시 조성\*, 유희시설 문화재생 등 지역 문화기반 확충
  - \* ('20년) 1차 도시 7개 선정 → ('21.1) 2차 도시 추가 지정
- ⑤ (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온라인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장비<sup>1)</sup> 및 비대면 전시, 교육 플랫폼 등<sup>2)</sup> 지원('21.1)
  - 1) 전문 인력(ICT 인력, 스토리텔러 등), 장비 대여비
  - 2) 소장품 검색 대형 터치스크린, 전시관람 및 교육 어플 등

## ⑥ (스포츠) 산업육성 및 비대면 수요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존 거점\*을 총괄(감독, 사업연계, 통합 상담 등)하는 「스포츠종합지원센터」 개소(21.2)

\* 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 기관), 지역거점(창업 외 마케팅, 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스포츠산업지원센터(선진 기술·인력 공급 전문기관)

- 초실감·몰입형 비대면 스포츠서비스 기술 개발<sup>1)</sup>을 추진하고,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육성 등 지원<sup>2)</sup>(21.1~)

1) 초실감 스포츠 중계 기술, 비대면 다자 참여형 스포츠 경기 기술 등

2) 비대면 스포츠코칭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공, 인력양성, 사업재설계 등

- 유망 스포츠기업 지원을 위해 스포츠펀드에 출자(130억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지원(1,061억원) 실시

## ⑦ (K-뷰티) 피부과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sup>1)</sup>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sup>2)</sup>(21.1~)

1)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등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2)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홍보·판매장 및 팝업부스 확충 ((20) 판매장 3개국, 팝업부스 4개국 → (21) 판매장 4개, 팝업부스 5개)

## ②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 문화향유, 창작기반 확대

###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20) 171만명, 1인당 9만원 → (21) 177만명, 1인당 10만원

### ②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sup>1)</sup> 및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sup>2)</sup>

1)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학, 전시, 공연 등의 창작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2) 등단은 했으나,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예술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유지 위한 기반 마련

## ③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지속 발굴·추진

- 한류성과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문화적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추진(21.1~)

\*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 문화·관광 균형발전, 콘텐츠산업 육성 등

-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차원에서도 문화소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5.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탄소 중립)

- ◇ 그린 뉴딜을 위해 '21년 중 총 13.2조원 투자(국비 8.0조원)  
→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 등 본격화
-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고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 병행 추진

#### ① 2050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 [ 3+1 추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본격화 ]

- '탄소중립-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구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3대 정책방향 10대 정책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	주요내용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 인허가 통합 One-Stop Shop 구축
	② 고탄소 산업 혁신	· 제조업 르네상스 2.0(多배출 업종 저탄소 구조 전환) · 多배출 중소기업장 공정개선·설비보급
	③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
	④ 도시·국토 저탄소화	· 탄소중립도시 조성, 국토계획에 탄소중립 반영 · 농림·해양 생태계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① 新유망산업 육성	· 이차전지·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육성 · 그린서비스, CCUS 등 혁신기술 조기 산업화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그린 예비유니콘 등 혁신기업 육성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③ 순환경제 활성화	· 제조·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이용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①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②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③ 국민인식 제고	· 국민 대상 환경교육·홍보 강화 ·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양방향 소통 강화
+		
제도적 기반강화	① (재정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 ②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 인프라 정비 등 ③ (기술개발 확충) 핵심기술(CCUS 등)개발 집중 지원 실증단계까지 지원범위 확대 ④ (국제협력 강화) P4G 정상회의의 서울선언,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등	

##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및 분야별 전략 마련]

- 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가칭)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체계 완비
- 녹색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을 통합하여 시너지 창출
  - 탄소감축 정책 개발·이행평가, 통계 인프라 강화 등 부처별 탄소중립 정책 역량 강화 신속 추진

- ② ①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上), ②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21.下), ③국가계획 반영(22~23) 순서로 질서있게 준비·추진
- 감축잠재량·기술수준 등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上)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21.下)하고,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22~23)

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21.6)	②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2021)	③국가계획 반영 (2022~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을 위한 <b>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b></li> <li>· 탄소중립 복수시나리오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b>분야별 전략 마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b>법정계획 정비</b></li> <li>*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li> </ul>

- ③ 산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지지를 확산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

\*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정부-산업계 고위급 간담회 등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②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가속화

### ① (녹색인프라)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가속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건축 및 SOC 조성관련 기술투자\* 지속(‘21.12)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개발 지원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속 추진(‘21년까지 누적 9.2만호(+8.3만호) 추진)
-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등) 1천동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 ▶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전기획 착수(761동)
- ▶ 국민체감형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구축,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21.3), 자연환경 복원사업 절차 체계화\* 등 환경 보호체계 확충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후보지 목록작성→복원사업 계획승인→실적보고→모니터링)

### ② (녹색에너지)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투자 확충,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 지속 추진

- 에너지 혁신기업 대상으로 혁신조달 연계형 R&D\*를 지원(‘21.下)

\* 공공 조달 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를 지원

-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5만호),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21.1~)
-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sup>1)</sup>하고 주택·건물·지역 등에 대한 보급 및 확산 지원<sup>2)</sup>

1)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2,839억), 수소에너지 혁신기술(141억) 등 개발 지원

2) 주택·건물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보급지원,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등

### ③ (녹색산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녹색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 가속화

-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21.下) 그린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21~‘22년 2개소)

\* ①청정대기(광주), ②생물소재(인천), ③수열에너지(춘천) ④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자), ⑤자원순환(탈플라스틱) → 녹색산업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

-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sup>1)</sup>을 신속히 선정(30개)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30개), 「그린 스타트업 2000<sup>2)</sup>」 신설(400개) 등 지속 추진

1)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등 3년간 최대 30억원 집중 지원

2) (중기부) 예비·초기창업패키지에 그린 분야 전용트랙 마련(‘21~‘25, 1000개)  
(환경부) 환경분야 전용 창업 프로그램 ‘에코스타트업’ 신설(‘21~‘25, 1000개)

### ③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 RE100 등 친환경·저탄소화 지원

#### [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을 통한 제로화 적극 추진 ]

- ① 재활용이 어려운 분야(음식물 용기, 1회용 수저 등)에 대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 개발·사용 실증사업 실시
- ② 플라스틱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sup>1)</sup>를 부여하고 수요 제고를 위한 장기 의무 사용률 설정<sup>2)</sup> 추진

1) 재생원료 사용 시 EPR 재활용 의무량 경감 등 인센티브 제도화

2) 장기 의무사용률 설정 방안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 ③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전방위적 관리기반 강화

- ▶ (수거강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 투입(7척), 드론 활용 확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수거 체계 스마트화
- ▶ (어구·부표)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및 어구·부표 수거관리 강화\*  
\*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 일제회수제 등을 법제화
- ▶ (자원순환) 해양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친환경 처리·재활용 시스템 구축
- ▶ (거버넌스) 해양쓰레기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참여 위원회(해양폐기물위) 설립 추진 및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21~'30) 수립

#### [ RE100 이행 지원 ]

- 산업계 등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한 RE100\* 이행 지원 본격화('21.上)

\* 글로벌 RE100 :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  
→ 이행 지원체계 가동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계약시스템 구축 등 신속 추진

#### < RE100 이행 지원체계 개요 >

이행수단	개요
① 녹색 프리미엄제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
②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③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④ 지분 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⑤ 자가 발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 ④ 녹색금융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적극 추진

### [ 녹색금융의 제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

- ①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21.6)
  - \* 제조업(친환경자동차, 저탄소 기술제조 등)·건설(저탄소 도시개발, 그린리모델링 등) 등 '10대 산업분류별 81개 하위 경제활동(안)'으로 분류
- ② ESG 평가의 환경부문 표준화를 위해 환경성 표준평가체계(지표, 산식 등) 마련\* 연구용역(~'21.4) 및 시범사업 실시
  - \* ESG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평가  
↳ (예)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등 에너지 산업 핵심지표 및 평가 산식 구축
- ③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21.3~)
  - \* (예)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 ↑ → 자동차보험손해율 ↑
- ④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융자, 후속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그린 금융 패키지 공급
  - \*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증(기보), 융자(중진공), 벤처투자(한국벤처투자) 등 패키지금융 지원

### [ 제3차 배출권 할당 추진 및 거래시장 활성화 ]

- ① (제3차 계획이행) 3차 배출권 할당계획('21~'2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을 병행('21.2~)
  - \* 유상할당비율 확대(3→10%), 배출 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적용(7→12업종) 등
- ② (시장참여 확대) 현행 업체外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를 허용하고, 제3차 계획기간('21~'25) 중 단계적으로 확대
  - \* 배출권 수급악화 우려로, 단계적 확대(예: 증권사한정 → '23년 이후 추가 참여)
- ③ (파생상품 도입)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 마련\*
  - \* 최종 결제방법(예: 실물인수도), 결제주기, 최소 거래단위 등 선물거래 제도 세부 사항을 확정하여 제3차 계획기간('21~'25)내 파생상품 도입 추진

## 2.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1) 사람투자

- ◇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를 위해 '21년 중 총 0.8조원 투자(국비 0.7조원)  
→ 디지털·그린분야 인재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등 지속 추진
- 사람투자의 효과 제고를 위해, 미래변화 대응·산업현장 수요 반영 등 직업훈련제도의 혁신 및 포용성 제고 노력 등 병행

### ①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 [뉴딜 인재 30만명 육성 등 본격화]

#### ① '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할 분야별·수준별 인재 30만명 양성\*을 위한 노력 본격 개시('21년 3.6만명)('21.1~)

*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21년 1.6만명	('25년까지 누적 10만명)
(녹색융합 기술 인재)	'21년 0.3만명	('25년까지 누적 2만명)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21년 1.7만명	('25년까지 누적 18만명)

#### ▪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25년)의 차질없는 이행('21년 1.6만명)

- ▶ 석·박사급 AI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8→10개)
- ▶ 박사급 고급연구인재 연구단(KIURI) 2개 추가 선정(4개→6개)
- ▶ SW 중심대학을 통해 교육 혁신을 고도화하고 확산(40개→41개)
- ▶ 전국 5대 권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산업 맞춤형 AI·SW 개발자 양성(6,800명)
- ▶ 기업 관리자급에게 AI융합서비스 도입 관련 교육(1,800명)
- ▶ 개방형 협동연구 및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교육 연구허브 구축

#### ▪ 환경, 생물자원 등 그린 분야 미래 인재 본격 육성('21년 0.3만명)

- ▶ 그린 뉴딜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그린 뉴딜분야 녹색융합기술 특성화 대학원(44개) 운영
- ▶ 그린 뉴딜분야 중·단기과정의 실무연계교육 운영(7개→12개)

#### ▪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K-Digital Training)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21년 1.7만명)

#### ②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개방·공유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K-Digital Platform 5개소 구축('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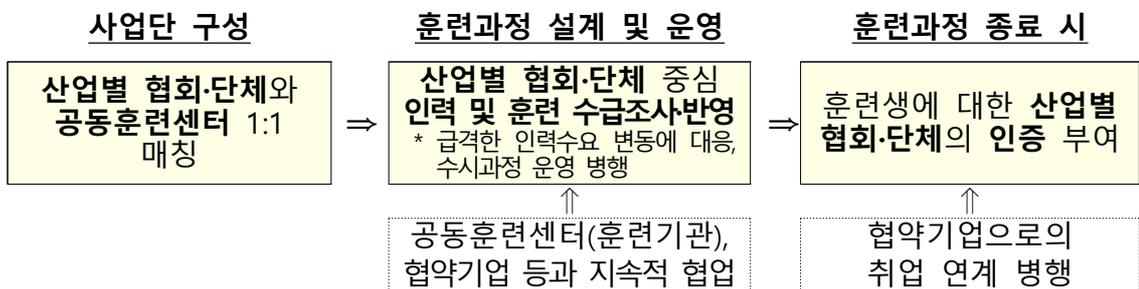
#### ③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 지원(50만원)하는 K-Digital Credit 신설('21.2)

## [ 직업교육·훈련과 뉴딜, 신산업과의 연계 강화 ]

- ① 산학연 협업을 통한 한국판 뉴딜관련 신기술 전문 교육·훈련 및 채용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계 수요 중심 교육·훈련 확대(’21.1)
  -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전형 문제 해결을 통한 직업훈련 및 참여기업 채용연계 지원
- ② 폴리텍 대학 학과를 러닝팩토리\*,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신설 및 개편(’21.12)
  -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한 융합기술교육시스템
- ③ 미래 신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비하여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12개)\* 선정(’21.上)
  - \* 전문대학의 전문성·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산업변화 및 직무역량분석 등을 토대로 개별 기업, 지역사회 등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
- ④ 한국판 뉴딜 관련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범부처 협의회)을 토대로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화하고 인력양성 트랙 구축
  - \* 관계부처 추천 산업계 등 전문가 TF 구성 → 21개 디지털그린 분야 인력수요전망(~’21.4)

## ② 직업능력 개발을 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

- 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훈련 전 과정에 산업계 역할을 확대하는 ‘산업계 주도형(Industry-driven)’ 인재양성 방식 확산(’21.1)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2,700명)을 통해 협약기업 연계, 훈련생 모집 등 훈련전반에 걸쳐 산업 특화성 제고



- 공학교육혁신센터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공학 교육과정 개발(’21) 및 활용(대학생교육+재직자훈련, ’22~)
  - \* 융합산업·디지털전환 등 실험적인 교육과정 도입 및 지역기업 수요와 연계한 재직자 재교육과정 등 운영

## ② 산학협력 실적을 마일리지화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집중

- (마일리지 부여) 기업의 다양한 산학협력활동<sup>1)</sup>에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정부의 기업대상 지원사업<sup>2)</sup> 참여 시 가점 부여('21.12~)

1) 인력양성(대학생 현장실습,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산학연계 교육과정 이수학생 채용, 공용장비 활용, 교육장비 기부 등

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등

- (우수기업 인증) 일정 마일리지 이상 기업 중 연간 100여개 기업을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인센티브 제공

### < (예)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 >

항 목	주요내용
공공입찰 가점 부여(조달청)	'산학협력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입찰 가점 부여 검토
WORLD CLASS 300(산업부)	WORLD CLASS 300 선정시 가점 부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③ 직업훈련 제도의 민간 자율성과 효과성 제고

### [ 직업훈련 제도의 민간 자율성 제고 ]

- ① 다양한 산업·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도\*의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21.12)

\* 기업이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는 저지원-저규제 모델로 '21.10월 2기 시범사업 훈련종료 후 성과평가 예정 →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모델 개발

- ② 자치단체 및 지역산단 등의 수요를 반영하고 고도의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특화 일학습 병행패키지」 사업계획 마련('21.12)

\* 재직요건(1년 이내), 완화, 훈련시간·기간 자율성 등

### [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성과중심 운용 강화 ]

- ①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보가 One-Stop으로 제공되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 고용부) 플랫폼을 확대·개편('21.4)

\* 개인훈련 진단·상담, 직무·기술·수준별 훈련체계 등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21.4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서비스 개시)

## ② 직업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 형성(‘21.12)

- ▶ (성과정보 공개) 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 ▶ (평가자 다양화) 현행 심평원 단독 통합심사 체계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사전평가 및 산업계·구직자 등 수요자 평가 반영
- ▶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디지털 등 신기술분야 훈련비 지원 강화
  - \* (현행) 난이도 등에 무관하게 직종별 훈련단가×시간 동일 적용
  - (개선)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비 차등 지원

## ④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포용성 확충

### ① (지역인재)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 마련(‘21.下)

\*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성인학습자 재교육 등

###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훈련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확대 방안 검토(‘21.10)

\*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고용부)하고, 지자체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50% 지원

### ③ (고졸취업) 일반고 진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특화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방안 마련(‘21.上)

\* (예) 일반고 특화과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과정 확대, 직업계고-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검토 등

### ④ (고용취약계층)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21.上)

### ⑤ (저소득층) 직업훈련 기간중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생계비 대부분 지원을 확대하고(67~9천명), 필요시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21.上)

\* 3주이상 직업훈련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

## 5 유망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 [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

- ① 개인의 역량개발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무능력 은행제\*(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nk, NCS Bank) 도입방안 마련('21.上)
  - \* NCS 기반의 교육·훈련·자격 등을 축적, 개인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개인역량(NCS Bank)과 산업요구역량(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SQF)을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경력개발 경로 제공 시스템 구축
    - \* (현행) 직업훈련 상담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후 직업능력개발 (개선) 구직자의 역량과 산업별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경력개발 경로 제시 등
- 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21.下)
  - \*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중심으로 교육부, 고용부 등 범부처 협의

### [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기반 강화 ]

- ① 학교 내 원격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무선 Wi-fi를 설치\* 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21.1)
  - \* 무선환경 구축 교실(누적) : ('19) 8.2만실 → ('21) 일반교실 등 27.2만실 → ('22) 교과·특별교실 등 35.2만실
- ②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교과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내용 추가 반영 검토('21.1~)
  - \*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해 및 표현능력(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 ③ AI기반 수요자 맞춤형 경제교육 Digital Library\*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21.上)
  - \* AI와 Big Data를 활용하여 민간·공공의 경제교육 자료를 발굴·축적·분류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온라인·쌍방향 경제교육이 가능한 플랫폼
- ④ 초중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을 위해 EBS 활용 콘텐츠 및 인공지능(AI) 학습관리 프로그램\* 보급('21上)
  - \* 학년별·과목별 학습수준 진단·평가 → AI 분석 →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2) 규제혁파

### 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 신속 이행

#### [ 디지털 뉴딜 ]

##### ① D.N.A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법제 구축

-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본법 + 산업, 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활용 지원 법률 제정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기 스마트제조법 제정)
- ▶ 국민의 행정정보 이용편의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전자정부법 개정)
- ▶ 정밀도로지도 제작용 3D정보 온라인 활용 허용(국가공간정보법 개정)

##### ② 교육, 금융, 의료, 물류 등 분야별 비대면 경제 육성기반 마련

	주요내용
교육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 기반 마련(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
금융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의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감염병예방법 등 개정)
물류	생활물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시 금융지원을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해당여부에 대한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등

#### [ 그린 뉴딜 ]

##### 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그린뉴딜의 법적기반<sup>1)</sup>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기반<sup>2)</sup> 구축

- 1) 그린뉴딜 관련 기본법 제정 등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개정

##### ② 자율주행차<sup>1)</sup>, 수소차<sup>2)</sup> 등 미래 모빌리티 촉진 기반 마련

- 1) 자율차 정의, 운전자 의무 등 자율차 도입 제도적 기반 마련(도로교통법 개정)
- 2)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여객/화물자동차법 개정)

③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상생기반 확립

	주요내용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PPA)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상생 지원	원전·석탄발전 관련 사업자·지역·산업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

④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sup>1)</sup>, 오염물질 측정감시 단계적 의무화<sup>2)</sup>, 녹색분류체계 마련<sup>3)</sup> 등 녹색산업의 법적 인프라 확충

- 1)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근거법 제정(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
- 2) 사업장 대상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개정)
- 3) 기업환경정보 공개 확대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환경기술산업법 등 개정)

[ 안전망 강화 ]

①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기반 구축

-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1년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 '22년까지 폐지 완결(기초생보 지침 개정)

② 디지털, 그린 등 뉴딜 인재양성, 교육강화 등을 위한 제도 구비

- ▶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디지털포용법 제정)
- ▶ 디지털·그린 등 고속연 전문기술인재 양성 마이스터대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 ▶ 전국민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근거 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개정)

## ② 민간 수요 중심의 한국판 뉴딜 규제개선 추진

- ① 민간 뉴딜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21.1~)
  - 경제계·당·정부가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통해 경제계 등의 현장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 \* 그간 24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검토 중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 허용, 금융사 재택근무 규제 개선 등)
- ② 한국판 뉴딜 「민간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뉴딜 사업에 직접 반영(21.上)
  -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부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관련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

## ③ 전방위적 규제혁신 노력 강화

### [ 핵심 신산업 5대 분야 규제혁신 ]

-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신산업 5대 분야 등 핵심 규제혁신 지속 추진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뉴노멀, 탄소 중립 등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한국판 뉴딜 뒷받침
- 분야별 개선과제 연중 발굴·발표

< 핵심 신산업 5대 분야 >				
① DNA 산업	② 비대면 산업	③ 가신업 스마트화	④ 그린 산업	⑤ 바이오의료산업
①빅데이터	①가상·증강현실	①스마트도시	①신재생에너지	①디지털 헬스케어
②인공지능	②원격교육	②스마트그린산단	②친환경차	②유전자 검사·치료
③지능형 로봇	③디지털콘텐츠	③SOC 스마트화	③녹색 인프라	③新의약품·의료기기
④핀테크		④자율주행차	④친환경 농어업	
		⑤드론		
		⑥공유경제		

## [ 국민생활 밀접분야 민생 규제 애로 해소 ]

- ① 영업·국민생활 중 규제 불편·부담이 큰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개선('21.1)
- ② 중소기업 음부즈만, 혁신성장 음부즈만 등이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작아도 절실하게 제기하는 현장규제·애로 지속 해결('21.1/4)
- ③ 산업단지, 미래차·모빌리티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밑줄: 未발표분야)

## [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

- ① 규제샌드박스 2주년 계기 성과보고대회('21.1) 등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성과\* 확산
  - \* 규제샌드박스 총 364건 승인('20.12.1 기준):  
9,801억원 투자유치, 396억원 매출증대, 1,742명 고용창출 등
- ②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5法 정비 신속 추진
  - \*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국회 既발의('20.9~, 의원입법), 정보통신융합법 입법추진 중 → 법 개정시 시행령 등 후속 정비

현행	개선
임시허가(법령정비시까지 연장)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 → 실증특례 기간(2+2년) 내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관련 5법의 정비 필요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법제화 → 안전성 등 조기 검증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전환근거 신설 → 사업중단 방지 관련 절차 진행 중 유효기간 미종료 간주

- ③ 실증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지연된 과제는 한걸음 모델, 해커톤 등을 활용하여 해결방안 모색

### (3) R&D 혁신

#### ① R&D 사업체계 효율화 및 성과 제고

##### ① R&D 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R&D 사업을 지속 확대 ('20 5.0%→'21 6.6%)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21.3)

\* (예시)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21년, 145억)

↳ 복지부(재활기기·서비스)+문체부(생활체육서비스)+과기부(플랫폼)+산림청(재활서비스)

##### ② R&D 우수성과의 신속한 확산 및 추가발전을 위해 부처 간 이어달리기 체계\*를 본격 시행('21.1~)

\* ①성과후보 발굴·추천(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 ②대상선정 및 전략수립(범부처 협의회) → ③전략확정 및 실적점검(과기관계 장관회의) → ④예산지원(과기혁신본부)

- 범부처 협의회에서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반기별)하고, 유형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전략(R&D/비R&D) 수립·이행('21.下)

▶ 성과 발굴대상 : ①추진 중인 R&D 사업 우수성과  
②'R&D우수성과 100선' 선정  
③사업평가(중간평가) 결과 및 특정평가 결과 우수성과,  
④출연연구기관의 우수성과 등

##### ③ 대형 연구시설·장비 사업 효율화를 위해 민간의 종합사업 관리\*(PM) 제도를 도입하여 '21년부터 시범운영

\* (PM: Project Management) 사업범위, 비용, 일정, 변화 등 핵심요소에 대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 ④ 공공기관들이 타기관의 연구현황을 파악해 협력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R&D사업 정보의 연계\* 추진('21.10)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R&D 관련 정보시스템 종합연계 추진

## ② 차세대 핵심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 임무 기반의 과감한 R&D를 추진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21.1~)
  - \* 既 선정된 5개 연구테마별 사업기획·예산확보 및 신규 연구테마 5개 선정(21.12)
  - 민간 전문가에게 초고난도 연구과제 발굴, 임무지향적 기획, 자율적 전주기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 \* 동일과제를 여러 연구자가 수행하는 경쟁형 R&D, 정책지정, 기술구입 허용, 해외 전문가 평가, 과제 목표 재조정, 조기종료 등 허용
- ② 여러 부처가 연계되고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음에도 R&D 투자전략이 미흡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21.3)
  - \* ①기후에너지 ②소재 ③센서 ④양자컴퓨팅 ⑤뇌연구, ⑥감염병, ⑦그린바이오 ⑧자원기술 등을 중심으로 우선 수립
  - 각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목표, 중점투자분야, 인프라구축·실증·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 R&D 투자전략 마련

## ③ 민간의 R&D 부담완화 및 참여 촉진

- ①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R&D 참여 연구비의 민간부담률을 '21년말까지 하향조정\*
  - \* 민간부담률 : 중견 40~50 → 35% 중소 25~35 → 20%(창업성장 등은 최대 10%)
- ② R&D 전주기적 민·관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선도기업 중심으로 산업별 협의체<sup>1)</sup>를 구성하고, 민관혁신포럼<sup>2)</sup> 운영(21.1/4)
  - 1) 요소산업별로 2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CTO)로 구성·운영(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 2) 산업별 협의체, 혁신본부, 주요 R&D 수행부처 등으로 구성·운영
- ③ 정부 R&D 종료 후 R&D 성과를 활용한 수입 발생시에만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악화시 면제 또는 감면(21.1)
  - \* 기술실시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에 단순 비례하여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폐지(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 3.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①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 추진

#####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① 「한국형 재정준칙\*」(20.10월 발표)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 국회제출(20.12) 및 후속조치 등 추진(21.12)

- \* ①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을 결합하여 상호보완적 설계
- ② 위기시 준칙 적용 면제,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등 보완장치 마련
- ③ 3년간 유예기간 후 '25회계연도부터 준칙 적용

▪ '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수입확충, 재원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21.9)

- \* '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을 거쳐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② 재정 투자성과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지출효율화

- 인구·경제·산업 구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관행적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21.12)
-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정비 추진(21.12)

##### [ 재정성과관리 강화 및 참여예산 활성화 ]

① 재정 성과계획서·보고서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하여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21.4)

-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21.4),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21.9)

② 적극적 사업발굴을 통해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질적 제고노력도 병행(21.9)

- \* 토론형 국민참여에 부처 주관의 주제 선정·토론 진행 방식을 신설해 관심 확대 유도

#### ② 혁신조달 강화 및 전략적 조달체계 운영

①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수를 지속 확대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21.1~)

- \* 혁신제품 수 : (20) 345개 → (21 목표) 800개 이상
- \*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 (20) 293억 → (21) 530억

② 국가과제 해결에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 추진을 위해 「공공조달 3개년(‘21~’23) 계획」 수립(‘21.6)

-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판 뉴딜 등 예산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 강화\*

\* 주요사업과 혁신조달 연계 시범사업 발굴, 혁신구매 실적 집중 관리 등

- 혁신·공정·유연성 제고 등 3대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체계적 제도개편\* 추진(‘21.6)

\*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 조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성과평가 방안 마련, 통계 정비 등 정책 인프라 강화(‘21.6)

\*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부처 간 상이한 조달통계 집계방식 조정 등

③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26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21~’23년)

④ 공공조달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등 新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계약·조달시스템의 디지털·비대면화 추진(‘21.1~)

- 대상서비스 선정 및 홍보 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정착을 통해 민간 디지털서비스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계약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 시대 맞춤형 계약제도 지속 발굴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를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 허용

⑤ 조달 참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수의계약 확대, 계약 보증금 인하 등 계약특례 시행기한 연장(‘20.12→’21.6)

- ▶ 수의계약 확대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1억원, (종합공사) 2→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등
- ▶ 보증금 인하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 지급기한 단축 : 검사(14→7일), 대가지급(5→3일) 기한 단축

③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출자기관 배당제도 합리화

① 노후 국유건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국유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선도사례 제시

\*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고성능 단열, 고효율 조명·냉난방장치 등 활용

- **광화문 KT빌딩, 소규모 리모델링 2건**(대전 선화동, 대구 동인동)을 시범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단계적 확대 검토
  - \* ①위치(도심 역세권), ②노후도(준공 후 15년 이상), ③이용현황(높은 공실률) 등 감안
- ② **생활SOC 복합화 사업<sup>1</sup>에 국유지 사용을 적극 지원<sup>2</sup>하여 국유지 활용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국민 편의 증진**(21.1~)
  - 1]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1개 부지에 건립
  - 2] 폐하천, 구거 등 국가 단독사용 실익이 낮고, 생활 SOC 복합시설지로 개발이 바람직한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등을 추진하여 적기 사업시행 지원
- ③ **철도 유휴부지(폐선부지, 교량하부 등)\*를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
  - \* 전체 부지(약26백만㎡)의 64%만 활용중이며, 이 중 27%만 주민편의시설 용도로 활용
  -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감면요건·요율 구체화
- ④ **국유재산 대부·매매 관련 계약서, 입찰공고 등의 공정성 제고**
  - **국유재산 매각·대부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전수 조사
  -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여 법령·약관 등 개정 추진**(21.12)
    - \* (예) 현행법 상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인의 손해를 미보상 → 시설 이전비, 남은 기간 손실액 등 보상
- ⑤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DB 연계를 강화하여 재산 분석, 맞춤형 개발·활용 등 의사결정을 지원**
  - \* 차세대국유재산시스템 개발(21.6) → 시범운영(21.12) → 정식운영(22.1~)
  - **기존에 연계가 미흡한 공적장부\*와 캠프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유휴재산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 대법원 등기 소유권, 국토교통부 토지건물, 특허청 무체재산 정보 등
- ⑥ **정부 출자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방향 마련**(21.6)
  - \* (현행) 전기관 공통 평가기준 → (개선)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추가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한 중기 배당목표 설정

#### 4 공공기관 재무, 인력 등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 [ 공공기관 재무구조 효율화 ]

- ① 연료비 등 원가의 변동이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 검토
- ② 사모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과도한 운전자금 운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자산운용 세부지침을 제정('21.6)
- ③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하여 대규모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 증액시 타당성 검증 의무화('21.1)  
\* (타당성재조사 요건)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경우, 예타 대상규모에 미달하다가 예타 대상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등

##### [ 인력운용 효율화 ]

- 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21.6)  
\* 임금피크제 인사관리 노력 등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② 공공기관 인사운영 및 임원·감사 선임관련 절차 등 개선
  - ▶ 특별승진·인사고료·개방형직위 제도관련 보완방안 마련('21.3)
  - ▶ 공공기관 임원 선임 지연 방지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한 및 임원 후보자 추천기한을 구체화\*('21.1)  
\* 임기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 추천
  - ▶ 회계사·변호사, 감사관련 경력자 등 감사 자격요건 신설('21.1)

#### 5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노동시장 혁신 지원

##### [ 채용·임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① (채용 공정성 제고)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확립을 위해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 등 공정채용 지원\* 추진
  - \* 소규모 공공기관 밀착 컨설팅, 면접관 Pool제 운영, 취업준비생과 공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온라인 매칭을 통한 1:1 컨설팅
  -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공정채용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도 채용 컨설팅 지원(250개)('21.下)

- ② (임금 공정성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완화(‘21.1~)
  - ①기관별 특성 반영, ②노사합의·자율, ③단계적·점진적 도입 원칙하에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 \* ‘20년 경영실적평가부터 기관의 직무급 도입준비 및 도입수준 평가 예정
  -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sup>1)</sup>, 임금정보 제공<sup>2)</sup> 등을 통해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 지원
    - 1)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20년 11종) 확대,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실시
    - 2)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규모·산업·직종·직급 등에 따른 임금정보 제공
- ③ (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인사관리 체계 정립
  -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21. F)
  - 종합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인사·노무 관리 제도 개선(‘21. F)

##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등 노동시장 상생여건 조성 ]

- ①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및 점검 등 강화(‘21.1~)
  - (50~299인 기업) 근로조건 자율개선<sup>1)</sup>, 노무관리 지도<sup>2)</sup>, 근로감독 등을 통해 법 준수 지도 및 주 52시간제 안착 유도
    - 1)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2)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확인, 노동법 준수 맞춤형 예방지도
  - (5~49인 기업) ‘21.7월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sup>1)</sup>,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sup>2)</sup> 등 지원
    - 1)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희망 기업에 노무사 무료상담 지원(‘21년 1,400개소)
    - 2)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 1인당 20만원×6개월 지원(‘21년 375개소)
- ② 주 52시간제 보완 및 건강권 보호 추진(‘21.3)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sup>1)</sup>하고,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도 완화<sup>2)</sup>하여 활용도를 제고
    -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2) (현행) 일단위 근로시간 사전확정 → (개선) 주단위 사전합의+2주전 일단위 통보
  -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1→3개월)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

## 4.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마련

- 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생후 12개월 내 + 부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에게는 장려금 최대 월 200만원 지급
- ② (영아수당 신설)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25년 50만원)
  -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
- ③ (첫 만남 꾸러미)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
- ④ (공공보육 확충) '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 ⑤ (다자녀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등

-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1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

### ② 제3기 인구정책 TF 본격 가동

- ①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21.上)

-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 마련
-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고령층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 내 비중이 감소하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등을 통해 마련·추진

- ② 제1기('19년), 제2기('20년) 인구TF 발표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과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노력

\*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착수(복지부), 고령자 고용활성화 논의개시(고용부) 등

### ③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돌봄부담 등 완화

#### [ 난임 및 출산 지원 강화 ]

- ① (난임 휴가지원)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최대2→3일)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부문 난임치료 휴가 개선방안 검토
- ② (임신·출산지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보건소 확대(21→50개소)(‘21.7~)  
\* 산후우울평가 등 임신부 건강관리·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양육교육 등
- ③ (육아휴직 지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중소 10→30, 중견 5→15%)  
\*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1년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1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 [ 유아 돌봄지원 확충 ]

- ① 지역주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268→332개소)하고, 주민돌봄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확대(33→43개)(‘21.1~)
- ② 0~2세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 보육료 지원단가(천원/월) : (0세) 970 → 1,012, (1세) 686 → 713, (2세) 527 → 547

####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충 ]

- ① (신혼부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지속(‘21.1~)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 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등
- ②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대상 매입(1,500호)·전세임대(2,500호)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내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 지원(30개소)(‘21.1~)

#### 4 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성 제고

#####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

- ①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여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고령자 맞춤형 새일자리<sup>(가칭)</sup>) 도입 추진  
\* (예)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해도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은 그대로 유지
- ②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22년)를 기초로 '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및 고령자 고용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가칭)고령사회 고용개선위원회 논의 추진('21~)

##### [ 노인돌봄 서비스 개선 ]

- ①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sup>1)</sup>하여 대상자를 확대(43→50만명)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sup>2)</sup>('21.1)  
1) 읍면동에서 통반장·이장 등의 협조를 얻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동 불편 및 독거노인 명단을 취합하고 서비스 신청을 안내  
2) 응급상황 대처가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신형장비 보급
- ② 각 지역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 노인돌봄 모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선도사례는 타지역으로 확대 추진('21.12)  
\* 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등 서비스 모형 개발(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 선도사업 실시 중)

##### [ 고령친화사업 육성 ]

-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확대·구성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21.12)  
\* 기존 고령친화기업 외 보건산업진흥원, 로봇·자동차 등 기간산업 기업도 포함
- ②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3개소)를 통해 고령친화 시제품의 상용화, 실증을 위한 사용자·전문가 연계 등을 지원('21.6)
- ③ 신약·의료기기·치매치료 서비스·가정간편식 등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한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 지원  
\* 웨어러블 인슐린 자동주입시스템, 이동보조기기 개발 등
- ④ 유망 고령친화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마케팅 등을 지원(20개)
- ⑤ 중소기업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21.12)  
\* 중소기업 유통채널(아임스타즈)를 활용하여 국공립 요양원·병원 등 중심 실시

## 6.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1.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1년 중 총 5.4조원 투자(국비 4.7조원)  
→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4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병행

#### ①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 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21.1~)
  - \*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40만명, II 유형(現 취업성공패키지): 19만명
  -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18~34세는 120%)인 만15~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단계적 확대 추진
  - \*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21.上)를 토대로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21.下)
- ②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건전성 확보 등 추진('21.1~)

#####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주요 내용(안) >

- ▶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 ↳ (1단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 → (2단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추진 예정
- ▶ 가입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지원·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제도 도입 지원방안(두루누리사업, 보험사무 대행지원사업 등)
- ▶ 소득파악 제도개선·소득정보 공유DB 구축 등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소득파악 체계) 소득파악 주기 단축, 기관간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소득파악 개선
- (재정건전성 확보)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21.上)
  - \* 지출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우선 추진,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일용근로자 등 적용누락 확인 및 직권가입 확대
- (특고)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 등 고려, 직종별 적용시기 규정, 특고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도입

\* (보험가입) 소득으로 적용기준 결정, 이중취득 인정, (실업급여) 기여기간 차등화, 일정 수준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 수급자격 인정 등

**③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1.1)**

\* ('20.7) 9→14개, ('2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 간병인 등 검토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sup>1)</sup>하고('21.7), 특고·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sup>2)</sup>을 개편('21.上)

1)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20.12.9. 관련법안 국회 통과 →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21.7))

2)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개선)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방안 마련

**④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21.1), '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

**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21.1~)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⑥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정된 적격투자상품으로 자동 운용

**②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4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

**①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하여\*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21.6)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격(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조)을 갖춘 특고·프리랜서 업종별 단체 등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햇살론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합리화('21.2)

\* (현행)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개선) 6개월

② 정책서민금융-사회서비스 및 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추진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 제공(‘21.6)

\* 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조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하여 자력 성실상환을 지원(‘21.3)

\* 30일 이상 원리금 미상환 시 대위변제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지고용서비스 및 프리워크아웃 특례(코로나19로 연체우려 시 6~12개월 원금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제도 안내

③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하고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21.7)

-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 4대 사회 안전망 확충 ]

① (생계) 기초생보, 긴급복지 등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확충(‘21.1~)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u>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u> 하고 <u>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u>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등 <u>위기가구 지원 확대</u> (10.4→11.5만 가구)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u>지급급여 인상</u> (+1.5%)

② (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 (건강보험)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급여화
- (요양보험)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2,772억원)

③ (주거)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등도 현실화

- (공적임대) 청년(4.5→5.4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도입(0.4만호)(‘21.12)
-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90→95(‘21년)~100%(‘22년))

④ (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2·3학년→전학년)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sup>1)</sup>, 장학금 지원<sup>2)</sup> 등도 확대(‘21.上~)

1) 교육급여 단가인상(평균 +24%) 및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 대학생 근로장학금(10.9→12만명), 고졸 후학습 장학금(11.2→13천명)

## 2.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 ① 필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① (공통)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방역물품·위생시설 및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 지원

\*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강화(종사자의 질병, 육아휴직,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 ② (개별)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돌봄) 공공돌봄 종사자, 가사도우미 등 처우 개선

돌봄종사자 공통	돌봄시설 종류·대상별 방역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확충(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신규인력(3,127명) 채용 지원, 국고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21년 인상률 1.9~3.9%)
요양보호사	권리침해 상담, 건강관리 등 지원센터 운영('21년 3개소), 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 등 집중 근로감독('21.上) 실시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지원시간(720→840시간)·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확대
보육교사	임금 부적정 지급방지·심리지원 등 권리보호 체계 강화(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21년 5.8만명)
가사·육아도우미	민간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가사근로자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시간당 13,500→14,020원)

- (보건)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일 5만원)·교육수당(15만원) 지급
- (운송서비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보호 강화

버스기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자격취득, 실무 등 훈련과정 지원
대리기사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 구축('21.1), 렌터카 사고시 구상청구 방지를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유통배송종사자	배송 종사자 실태조사('21上) 및 산재보험 적용 방안 검토
화물차주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향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관리,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협의회 구성, 산업 제도화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배달라이더·퀵서비스	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후 등록제 법제화 검토,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업 등록제 검토, 보험제도 합리화 추진

- (환경미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원 근무환경 개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전용차량 사용기준 마련 및 100L 종량봉투 제한
재활용품선별원	노후시설 교체 및 플라스틱 선별지원금 한시('20.9~'21.2) 인상

- (콜센터) 휴게시간 명시 등 관리지침 개선, 체온계·칸막이 등 방역설비 지원 및 휴게시간·휴가未보장 등 근로·안전감독 실시

## 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충 ]

#### ①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 제도를 개편('21.2)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
-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인하(연4.5%→연2~3% 수준)

#### ②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학력보강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학교 안·밖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학교내 다중지원팀<sup>1)</sup> (담임+상담교사 등)을 확대하고, 외부 학습센터<sup>2)</sup>와 연계를 강화

1) 맞춤형 지원 두드림(Do-Dream) 학교 : ('20) 4,801교 → ('21) 약 5,000교

2)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전국 130개소)와 학교 간 협업(코칭지원 등)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1수업2교사제 등 보조인력(예비교원, 교원자격소지자 등)을 활용한 협력수업·지도 모델 확대(약 1,000개교)

#### ③ '또래 튜터\*' 참여 인센티브(봉사활동 점수 부여)에 대한 적극홍보 등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21.1~)

\* 또래 멘토링, 학습 도우미, 이웃돕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며, 학습·진로·독서·운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친구가 도와주는 제도

#### ④ 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이 소유한 양질의 불용 PC·프린터를 지원하는 불우서민 무상지원 사업 개선('21.3)

\* (현행) 국가기관(기부기관) 외 지원단체를 별도 선정, 지원단체가 수혜자에게 전달 → 배송·설치 및 수혜자 선정 등을 지원단체가 부담하여 운영상 어려움 존재

\* (개선) 국가기관(기부기관)에서 배송·설치를 담당하고(물품관리 종합평가 가점 부여),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수요학생(수혜자) 매칭 지원

### ③ 아동 및 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지원 확충

#### [ 아동 및 청소년 ]

##### 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해 부모 인식제고 및 발달장애 조기개입 및 발달재활서비스 활성화 추진('21.1~)

▶(인식제고)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병원 등에서 출산 부모에 배포하는 것을 의무화

▶(조기진단)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모델 구축

▶(재활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 재활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20) 6.1만명 → ('21) 6.5만명)

\*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위해,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기관(71→81개)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76→91개)를 확대('21.1~)

##### ③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하고(9→15개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활동비\* 등을 신규 지원('21.1~)

\* (쉼터 입소 시) 연 최대 50만원(실비) → (쉼터 퇴소 시) 월30만원X최대 36개월

#### [ 청년 ]

##### ① 청년저축계좌 지원인원을 확대하고(8,000→13,400명) 청년특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방안 마련('21.2)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1,500호)('21.1~)

##### ③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확대(2.3→2.5조원)('21.1~)

##### ④ 직업계고 졸업생, 대학생 등을 위한 취업·장학지원 확대('21.1~)

\*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1→3.1만명), 교외근로장학금(4.9→6.0만명), 인문100년장학금(2.4→3.4천명), 꿈사다리장학금(2.4→3.2천명)

#### [ 노인 ]

##### 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 확대('21.1~) (소득 하위 40%이하 → 70%이하)

##### ②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21.1~)

\* 치매안심센터 내 비대면 치매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 ③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목표(당초 '22년) 조기 달성(74→80만명)

#### ④ 장애인, 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추진

- ①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sup>1)</sup> 연금지급 단가 인상 등 소득지원 확충<sup>2)</sup>(‘21.1~)
  - 1) 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75→90개소)
  - 2)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 인상(25→30만원), 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0.6만명, ‘21.4)
- ② (체불근로자)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소액 체당금 지급시 소요기간을 단축<sup>1)</sup>하고 재직자 체당금 제도 도입<sup>2)</sup>(‘21.下)
  - 1) (현행)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약 7개월 소요)  
(개선) 고용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만으로 지급(약 2개월 소요)
  - 2) (현행) 퇴직자에 대해서만 소액체당금 지급  
(개선)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급
- ③ (여성) 재직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단절예방)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고용위기 여성의 경력단절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21.1~)
    - \* (현행)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수행기관 60개소, 기관당 전담인력 1명  
(개선) 수행기관 15개소 내외 추가, 경력단절예방 팀(2~3명) 구성·운영
  -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sup>1)</sup>하고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구축<sup>2)</sup>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21.1~)
    - 1) 창업(온라인 창업, SNS 홍보, 온라인 스토어 창업), 이론교육(국제무역, 디지털 콘텐츠, 공연·예술 기획자 양성), 직무소양(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전략 등)
    - 2) 훈련생의 수강, 출결관리, 성적, 실시간 소통 등 학습관리 종합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경험 지원을 확대(6.2→7.8천명)하고, 지원 종료 후 계속고용 유도를 위한 새일고용장려금 신규 지급(‘21.1~)
    - \* (현행) (기업)인턴지원금 240만원, (경단여성)취업장려금 60만원  
(개선) (기업)현행 +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경단여성)근속장려금 60만원
- ④ (농어민)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sup>1)</sup>하고(‘21.1), 고령어업인, 소규모어선, 친환경양식 등 대상 수산공익 직불제 도입<sup>2)</sup>(‘21.3)
  - 1) (현행) 기준소득금액 97만원 / 월 최대 43,650원 지원 → (개선) 100만원 / 45,000원
  - 2)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어업인에 年 150만원 지급,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 등
- ⑤ (정보소외 계층) 읍면동 디지털 배움터 운영(1,000개소) 및 도서벽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574개소) 등 정보격차 해소노력 지속

### 3.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 ① 공정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 [ 공정경제 3법의 제도적 착근노력 지속 ]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제도 착근 노력 강화
  - 적용대상·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 등 시행령 제·개정 추진

##### [ 납품 하도급 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보호 강화 ]

- 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sup>1)</sup>하고, 조정신청 사유<sup>2)</sup>도 확대('21.1~)
  -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 2) (현행) ①공급원가, ②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 변동 시 조정신청 가능 (개선) ①+②+단계적 대금 인하계약 체결 후 원가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 신청 가능
- ② 가맹점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센터 개소·운영('21.5~)
  - \*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갈등 예방 및 완충, 영세 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 ③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12→18개 업종)('21.12)

#### ②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

- ① 플랫폼기업-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추진('21.1/4, 국회제출)
  - \*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표준계약서·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 ② 플랫폼거래 등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21.上)
  - \* 플랫폼의 거래관여도 등을 반영한 책임규정 정비,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충 등
- ③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시 엄정하게 조치('21.1~)
  - \* (예)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 등
- ④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21.上)
  - \* 상생협의회 운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지원 등

### ③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 등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 마련(‘21.下)
- ②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21.上)
  -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만료 1년전부터 만료 전까지 적합업종 신청 가능  
(개선) 대·중소 간 상생협약 파기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추진

### ④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

- 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21.1)
  - \* 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①역량진단, ②기초역량 강화(맞춤형 교육) 후, ③성장 집중지원(R&D·판로 등)
- ②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지원 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우대(‘21.6)
  - \* 보증 심사시 활용중인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신보 개발)의 평가등급 활용
- ③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 및 민간 투자비율을 확대(‘21.9)
  - \* 한국성장금융+KB 출자액(비율) : (현행) 200억원(80%) → (개선) 300억원(60%)  
민간부문 출자액(비율) : (현행) 50억원(20%) → (개선) 200억원(40%)
- ④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를 확대(‘21.3)
  - \* (현행) 2억원 이상 구매 시 가점 부여 → (개선) 2억원 미만 구매 시에도 부여

#### [ 지역 단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 ]

- 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21.2~)
  - \* 민관협의체가 심의결정한 금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필요사업에 지원(‘21년 30개소)
-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SOS랩<sup>1)</sup>」 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sup>2)</sup> 부여
  - 1) 지역주민 스스로 대기환경·재난대비·아동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조직(Solution in Our Society Lab)
  - 2) 사업자 선정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

## 4.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 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국가 구현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지속 추진 ]

①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고 (0.8단계)(21.12),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등

② (산재예방) 위험기계·공정 개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시설 용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첨단 사고 감시시스템도 도입

▶(미인증 3대 위험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교체(4,911개)

▶(뿌리산업 위험공정) 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공정 개선(921개소)

▶(산재예방 시설용자) 300인 미만 사업장 용자(1,830개소)

▪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단 내 적외선 카메라·인공지능·드론 등을 접목한 화학사고 원격감시 시범사업 추진

\* 사업장 신고 이전에, 적외선 카메라·인공지능을 통해 원격에서 화학사고를 감지하고 드론이 먼저 출동하여 신속한 사고현장 지휘 추진

③ (정신건강)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21.7~)

\*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인 205명 신규배치 등

#### [ 재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강화 ]

① 디지털 기술(IoT)에 기반한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21.12)

\*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 관측·계측하여 문자 알림(모바일), 마을 경보(옥외), 가정용 무선 안내방송 등 제공(21년 170개소)

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 통합관리시스템<sup>1)</sup> 및 지역통합관리센터(7개 시·도) 구축<sup>2)</sup>(21.1~)

1) 공급망관리시스템, 통합물류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

2) 각 시·도에 광역거점센터와 개별비축창고로 구성된 관리센터 구축지원

③ 노후·위험 시설에 대한 디지털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21.1~)

\* 지역내 노후·위험시설(교량, 육교, 지하도, 붕괴위험 건축물 등) 80여개소에 IoT센서(진동, 온도, 크랙, 기울기 등) 550여개(시설당 약7개정도) 설치 추진

## ② 미세먼지, 먹는 물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노력 지속

① 미세먼지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감축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 평가(지역·배출원별) 고도화\*, 지역 배출원 맞춤형 대책 등 추진(21.6)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NEAS) 성능개선('21~)

② 사업장·노후차량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운행제한 등에 대한 이행 지원사업을 확대(21.1~)

\* 소규모 사업장 배출방지 시설 지원(3,000개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34만대), 등

③ 도시에서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생태복원 추진(멸종위기종 생물서식공간의 확대 등)(21년 신규 6개소)

▪ 환경부-지자체-학계-업계 협약 체결\*(“도시생태복원 25+” MOU(가칭))

\* (학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 (8개 지자체) 경기도, 대전시, 대구 달서구, 청주시, 고창군, 밀양시, 곡성군, 화성시(25년까지 25개로 확대)

④ 안정적 수자원 공급 및 먹는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노후 상수관 및 정수시설 고도화(9개소) 등 추진

\* 광역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23개 시설),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6개) 등

## ③ 소비자 편익 제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배달앱, 렌터카 등 민원이 빈번한 생활밀착형 시장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을 제·개정\*(21.4/4)

\* 사전통지 없는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 법률책임의 부당한 면책조항 등 시정,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고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예방 등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소비를 위해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1.3/4)

\* 이·미용업, 학원업 既시행중, 체육시설업 등 우선검토 후 적용업종 확대 추진

## IV. 2021년 경제전망

◇ 내년은 금년보다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 전망

- ① (성장) '21년 GDP는 금년 역성장( $\Delta 1.1\%$ )에서 벗어나 **3.2% 성장** 전망
  -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의 동반 개선** 예상
- ② (고용) 경기 개선, 일자리정책 효과 등이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취업자수는 **15만명 증가** 전망
  - 취업자 증가 전환에 따라 고용률(15~64세)도 '20년(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 예상
- ③ (물가) 수요 회복,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20년(0.5%)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 전망
- ④ (경상수지)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 증가하면서 '21년 흑자규모는 **630억불** 수준 예상
  - 수출(통관)은 반도체·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8.6% 증가**, 수입(통관)은 **9.3% 증가** 전망

### 2021년 경제전망

	2020년	2021년
■ 경제성장률(%)	$\Delta 1.1$	3.2
■ 취업자증감(만명)	$\Delta 22$	15
- 고용률(% , 15~64세)	65.8	65.9
■ 소비자물가(%)	0.5	1.1
■ 경상수지(억불)	680	630
- 수출(% , 통관)	$\Delta 6.2$	8.6
- 수입(% , 통관)	$\Delta 7.5$	9.3

1. '20.12월 주요 추진과제 - 24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20.12→'21.6월)	산업부
■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연장(~'20.12→'21.6)	금융위
■ IPO시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 방식 도입	금융위
■ 3.9만호 규모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국토부
■ 공공전세 및 신축 매입임대 매입약정 공고	국토부
■ 非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거품질 관련 세부기준 마련	국토부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대상지 확정·통보	문체부
■ 5개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 협력형 유턴에 대한 사업장 인접요건 폐지 (12.22일 유턴법 개정안 공포 예정)	산업부
■ 기업인 출입국센터 운영기한 연장(~'20.12 → '21.12) 및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센터로 일원화	산업부·중기부 등
■ 무보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일몰 연장(~'20.12 → ~'22.12)	산업부
■ 기업 신규 설비투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기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시행에 따라 졸업후 2년 이내 요건 폐지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	고용부
■ 착한 임대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대(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기부
■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20.12→'21.6)	기재부·행안부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대상 확대('20.2~12월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 '21.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	금융위
■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운용방안 마련, 자펀드 모집공고	금융위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가동(1차 회의 개최)	기재부 등
■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확정·발표	환경부
■ 2050 LEDS 정부안 확정 및 UN 제출	환경부
■ 한국형 재정준칙 관련 법안 국회 제출	기재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방안」 마련	고용부 등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고용부

## 2. '21.1/4분기 주요 추진과제 - 100개

### (1) 1월 - 3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채·CP 매입기구 매입기한 6개월 연장 추진(~'21.1→~'21.7)</li> </ul>	한국은행·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휴지보험, 계약철회 손해배상 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 착수</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sup>(가칭)</sup>」 수립</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국내선사 임시선박 2척 이상 추가 투입 및 선복량 50% 수출 중소·중견기업 배정(~'21.2, 필요시 연장)</li> </ul>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사항 시행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조정 우려 업종 대상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 시행</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민간부문 청년 일경험 사업(8만명) 시행</li> </ul>	고용부·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1월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중 50만명 이상 채용</li> </ul>	고용부·복지부·행안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에 대한 3조원+α 규모 맞춤형 지원 관련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상점(연중 2만개 목표), 스마트공방(연중 600개 목표) 등 구축 개시</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20.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 → '21.1~3월분까지 포함)</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한 임대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대(신보.기은 소상공인 정책자금)</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자유특구 펀드(350억원) 투자 개시</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시행</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국회 제출</li> </ul>	공정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li> </ul>	4차산업혁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X 7대 프로젝트 알고리즘 개발작업 착수</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뉴딜분야 정책금융 17.5조원 + α 규모 공급을 위한 대출·보증 공급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 신설·운영</li> </ul>	산업부·중기부·금융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부채를 정부 R&amp;D 사업 신청기업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산업부·중기부 관련지침 개정)</li> </ul>	산업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운영</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걸음 모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문화도시 지정</li> </ul>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gital Platform 5개소 선정 및 구축 착수</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li> </ul>	국조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발표</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한부모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보 지침 개정)</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관리 계획 수립</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발달장애 매뉴얼 개발·배포 및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모델 구축작업 착수</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위40→70%)</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 인상(25→30만원)</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및 조정신청 사유 확대(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제출)</li> </ul>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단계별 종합지원을 위해 성장 집중지원 사업 도입</li> </ul>	중기부

## [2] 2월 - 21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은 등 공공부문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li> </ul>	기재부·산업부·국조실·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상향조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별도 추가 소득공제 적용(조특법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운송계약 유도 방안 마련 (우수 선·화주 인센티브 제공, 중진공 운송계약 대행 등)</li> </ul>	해수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시행</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중대세액공제 제도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년 고용감소시에도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혜택 지속 제공)</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체험형 일자리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경영평가 편람 개정</li> </ul>	기재부·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3개 컨소시엄 추가 지정</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중인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 포함(비대면 혁신적 아이디어는 업종무관 지원)</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시범서비스 실시</li> </ul>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시설투자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 (조특법 시행령 개정, 취득비·공사비 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도 적용)</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용 개시</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시행령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추가지정되는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 R&amp;D 세액공제에 추가(조특법 시행령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종합 지원센터 개소</li> </ul>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 참여 구직자 대상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 지원하는 K-Digital Credit 신설·지급 시작</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햇살론 지원 요건 완화 (대출전 2개월간 소득증빙 필요 → 대출전 6개월간 소득증빙)</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비 대출제도 개편(저신용·저소득층 대상 학원비 등 사교육비 대출,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인하)</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방안 마련</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li> </ul>	행안부

### [3] 3월 - 41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권역 3개 / 지역 6개)</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 우수시설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구체화</li> </ul>	문체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회 회복력 평가방안 연구 착수</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정비 및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 상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li> </ul>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토보상권 리츠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예: 양도세 감면율 15→30% / 현물출자 주식 전매제한 의무 신설 이후 추진)</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해제 구역 56곳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 시행</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중 중소·중견기업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 확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견 : 30→50% / 중소 50→70%)</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중소기업 온라인 전시회 및 샘플 사후 배송비용 지급 시작</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서비스업 O2O 전시회·박람회(3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 5월 코리아핀테크 위크, 월드 IT쇼 / 9월 에듀테크 코리아)</li> </ul>	복지부·금융위·과기부·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 상정</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체험형 일자리(2만명) 채용계획 수립</li> </ul>	기재부·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제시</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공급기업간 동반 사업재편 관련 기업활력법 시행령 정비</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sup>123</sup> 프로그램(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업력 1년 이상 → 코로나에 따른 휴·폐업자는 업력 무관 지원)</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 완화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용 건축물도 비율 산정시 제외)</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등에서 생기는 유희설비 유통지원 규정 신설을 위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등 개정</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병원 증장기 과제 계획 및 확산방안 마련</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을 통한 비대면 유통혁신 사업 시작</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금융회사별 대출조건 확인·비교 플랫폼 구축 완료</li> </ul>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의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를 위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조성 추진</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완료(조세특례제한법 등)</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창업비자 교육과정 개설</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 스타트업 2000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1000개, 환경부 1000개)</li> </ul>	중기부·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특구내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마련</li> </ul>	중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장 원스톱 특허분쟁지원 프로그램 실시</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 선정 완료</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실시</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부처 협력 R&amp;D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R&amp;D 투자전략 수립</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기업 중심 산업별 R&amp;D 협의체 구성 및 민관혁신포럼 운영 시작</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2·3학년 → 전학년)</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불용 PC·프린터 나눔 개선을 위한 종합평가 계획 수립</li> </ul>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1월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3월부터 접수)</li> </ul>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업종 확대(12→18개)를 위한 구체적 업종 선정 및 계획 수립</li> </ul>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형 뉴딜펀드(4조원 목표) 조성 개시</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서민금융-사회서비스 및 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실직·질병 등 상환 곤란시 복지·고용서비스 연계)</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범위 확대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li> </ul>	조달청

### 3. '21.2/4분기 주요 추진과제 - 79개

#### (1) 4월 - 14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 45%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li> </ul>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 및 멕시코시티에 IP-DESK 신규 개소</li> </ul>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 추진계획 마련</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기술고도화를 위한 다부처 패키지 R&amp;D 연구수행 시작</li> </ul>	농림부·과기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연구기관과 6G 표준협력회의 등을 개최하고,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등 시행</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개념 반도체(PIM) 기술개발 선도사업 추진 (중장기 예타 사업의 경우 '22년부터 산업부·과기부 공동 추진)</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소재 연구단 15개 선정</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박사급 AI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 2개 추가 선정</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급 고급연구인재 연구단(KIURI) 2개 추가 선정</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포털(HRD-NET) 플랫폼 확대 개편</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딜분야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해외진출 지원(액셀러레이팅) 연계 운영</li> </ul>	중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성과계획서·보고서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하도록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개정</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개소 추가 선정</li> </ul>	과기부

## [2] 5월 - 13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3D 기본계획」 수립</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연결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 실시</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물류설비 확충을 위한 0.5조원 용자프로그램 신설</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 분야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실시 (대상은 4월 중 선정 완료)</li> </ul>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사 선정 완료</li> </ul>	환경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생태공장 30개 선정 완료</li> </ul>	환경부·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RE100 플랫폼 구축 및 본격 시행</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 뉴딜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 선정</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취업 특화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방안 마련</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능력은행제 도입방안 마련</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고충해결을 위한 종합센터 개소</li> </ul>	공정위

### (3) 6월 - 52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	기재부·금융위
■ 분할납부 횡수·비율 조정 등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기재부·한국은행
■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파악·대비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및 통합지표 개발	기재부·통계청
■ 방역 우수시설 지정 시작 및 대국민 홍보	문체부 등
■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주관사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금융위
■ 태릉CC(1만호)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국토부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	국토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기부
■ 스마트관광도시 3개소 추가 선정 완료 (2개소는 '20.12월에 선정, 나머지 1개소는 6월에 선정)	문체부
■ 「중소기업 비대면 수출 고도화 방안」 마련	중기부
■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제공하는 10x10 정보맵 구축 완료	산업부
■ 첨단산업 및 협력형 유턴 등의 인정요건 완화, 유턴보조금 가산 지원을 위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유턴보조금 고시 개정	산업부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마련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개정	해수부
■ 온·오프라인 한류행사 연계 수출 지원 (중소기업 수출제품 온라인 홍보 및 즉시구매 지원)	문체부·중기부
■ 워크넷에 화상상담 서비스 메뉴 개발 및 서비스 시작	고용부
■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sup>(가칭)</sup> 」 마련	교육부·고용부
■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사후관리 유도 본격 추진	금융위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금융위
■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지역(김제, 상주) 준공	농림부
■ K-테스트베드 체계 마련	기재부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	산업부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착수	국토부
■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중기부
■ 경제자유구역 개편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산업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실적 반영	기재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200개 지원 시작	과기부
■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중기부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D-8-4) 및 기술창업준비(D-10-2) 비자 발급요건 확대	법무부·중기부
■ 벤처투자 민관협의체 구성, 표준계약서 공동 마련·보급	중기부
■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중기부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한걸음모델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제정 또는 개정 본격 추진	기재부
■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환경부·산업부·기재부 등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중기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환경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 발표	해수부
■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마련	과기부
■ 디지털·그린분야 인력양성 트랙 구축 (21개 디지털·그린 분야 인력수요 전망은 4월까지 완료)	고용부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선정	교육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개정	국토부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체계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징수법 시행령 개정 등)	고용부
■ 「공공조달 3개년(21~23) 계획」 수립	기재부
■ 중장기 배당정책방향 마련	기재부
■ 공공기관 자산운용 세부지침 제정	기재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임금피크제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 강화	기재부
■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3개소) 개소	복지부
■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	고용부
■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업종별 단체 미소금융 대출 도입	금융위
■ 정책서민금융-사회서비스 및 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컨설팅 이수시 우대금리 혜택 제공)	금융위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한도 우대 실시	금융위
■ 미세먼지 정량평가 고도화, 지역 배출원 맞춤형 대책 등 마련·추진	환경부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용부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상생협력과 권리구제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중기부

#### 4. '21.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27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2만호 사전청약 개시(7월~)</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li> </ul>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 3/4분기 중 채용 확정</li> </ul>	인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넷 AI 기반 진로지도 서비스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시작(8월~)</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7월)</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완화 등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범위 합리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li> </ul>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재편 유희자산 처분시 캠프 선매입 프로그램 가동</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9월)</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8월)</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 대상 기업 선정(7월)</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하위펀드 조성(8월)</li> </ul>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소재 연구단 10개 선정(7월) (4월 15개에 이어 '21년중 총 25개 확대)</li> </ul>	과기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시범교육 실시</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내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구축(7월)</li> </ul>	과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국유재산시스템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추진</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7월)</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시범보건소 서비스 개시(7월)</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7월)</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및 한계차주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체당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li> </ul>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 마련</li> </ul>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투자펀드 500억원 추가 조성(한국성장금융, ~'21.9)</li> </ul>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li> </ul>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단내 적외선 카메라·AI·드론 접목 화학사고 원격감시 시범사업 본격 실시(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중 완료)</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업 우선으로 단계적인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완료)</li> </ul>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항만 공동물류센터 개장 (3월 인니 프로볼링고항, 9월 로테르담, 바르셀로나항)</li> </ul>	해수부

## 5. '21.4/4분기 주요 추진과제 - 40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재부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21.12월, 22년 공사 착수)	국토부
■ 수도권 전역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	국토부
■ API기반 외환전자거래 서비스를 원/달러 현물환시장에 도입	기재부·한국은행
■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개선	기재부·한국은행
■ 「국가식량계획」 수립	농림부 등
■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1~15일)	산업부·중기부 등
■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용부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검토,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12월)	금융위
■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전년대비 1조원 확대하고, 부채투자 전용펀드 비중 확대 검토	금융위
■ DIP 금융 전용펀드 인센티브 확대 (회생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시 성과보수 확대 검토 등)	금융위
■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용자제도 시범운영 실시	중기부
■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농림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지역(고흥, 밀양) 준공	농림부
■ 스마트팜 AI 경진대회 개최	농림부
■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1단계 플랫폼 기반 마련	복지부
■ IoT·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지자체 시범사업 착수	복지부
■ 6G 시제품 개발 및 핵심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산업체간 산학협력 지원	과기부
■ 국도 45%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토부
■ 4개 공항에 대한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설치 완료	국토부
■ 국가하천 57%에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및 지방상수도 27%를 스마트화 완료	국토부·환경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	산업부
■ 자율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보안 기준 마련	국토부
■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완료(3개 내외)	산업부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완료 및 투자 개시	중기부
■ 탄소중립 관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산업부 등
■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 완료 (나머지 1개소는 '22년중 조성 완료)	중기부
■ 산학협력 실적 마일리지화를 완료 및 우수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방안 확정	교육부
■ 전문대학 중심으로 지자체·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 마련	교육부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고용부
■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및 확대	고용부
■ 폴리텍 대학 학과를 디지털·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	고용부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도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10월중 시범사업 종료 및 성과평과 이후 12월중 우수모델 개발)	고용부
■ 기업특화 일학습 병행 패키지 사업계획 마련	고용부
■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유재산 대부·매매 관련 법령·약관 등 개정 추진	기재부
■ 고품질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산업부
■ 중소기업 고품질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복지부
■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국토부
■ 배달앱·렌터카 등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완료	공정위
■ IoT 기반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완료	행안부

## 별첨 2

## 2021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 ◇ 국민들은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민생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응답
- ☞ '21년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활력 복원과 동시에 Post-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총력

### 1. 경제상황 평가 및 '21년 경제정책방향

① (경제상황 인식)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21년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바라보는 모습

\* '20년 경제상황 : 전문가 94.5%, 일반국민 86.1%가 나빠졌다고 평가  
'21년 전망 : 전문가(43.2%)와 달리 일반국민 72.7%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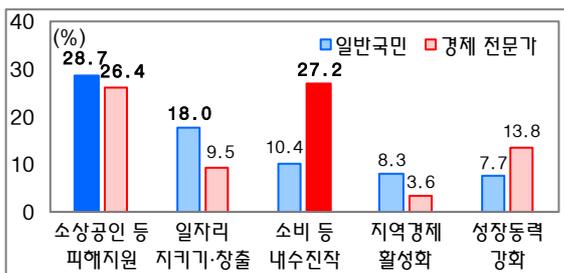
○ 설문 응답자들은 백신 보급 지연,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대외리스크(일반국민, %) : ①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51.2), ②미중 갈등 장기화(21.6)  
대내리스크(일반국민, %) : ①코로나 사태 장기화(35.5), ②고용악화 및 양극화 심화(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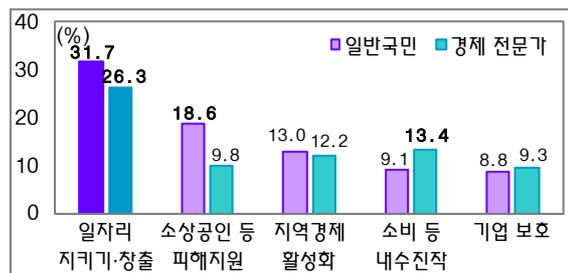
② ('20년 정책 평가)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을, 경제 전문가는 '소비 등 내수 진작'을 금년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 다만, '일자리 지키기·창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보완을 주문

2020년 잘한 정책(상위 5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상위 5개)



③ ('21년 경제정책방향) 일반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모두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우선순위로 지목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일반 국민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전문가는 "성장동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응답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경제반등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포용성·공정성 강화
일반국민	<b>32.0</b>	9.0	29.3	5.7	<b>12.5</b>	10.3
전문가	<b>41.1</b>	25.9	8.4	<b>14.6</b>	7.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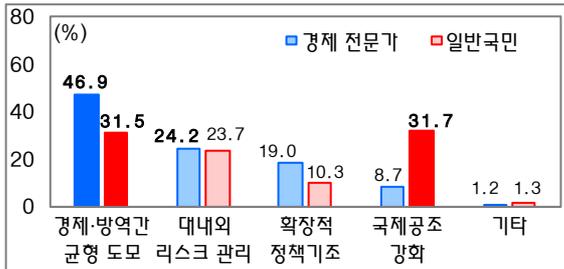
## 2.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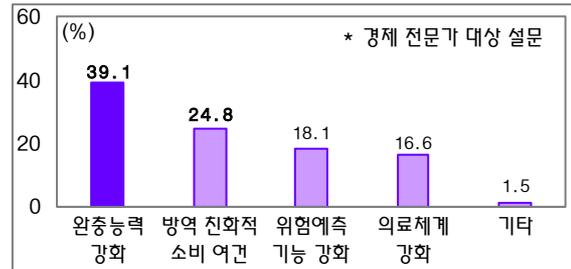
①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를 우선순위로 주문

○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방역간 균형 도모’를 위한 핵심과제로 재정·금융 완충능력 강화와 방역 친화적 소비여건 조성을 지목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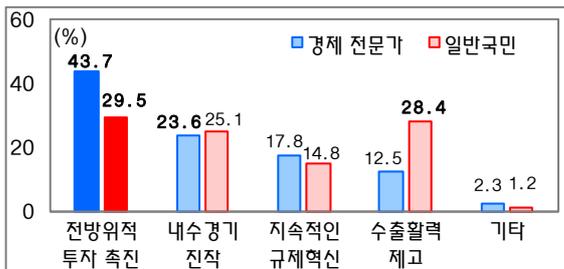
경제·방역간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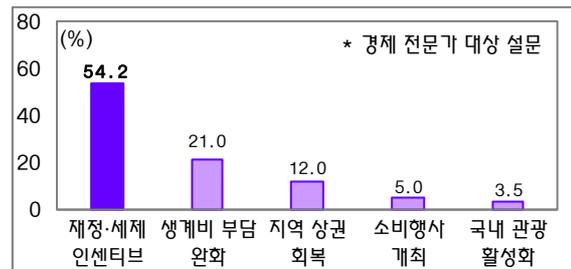
② “경제반등”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전방위적 투자 촉진’과 ‘내수경기 진작’ 등을 중점정책으로 지목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세계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 소비 촉진을 지목

경제반등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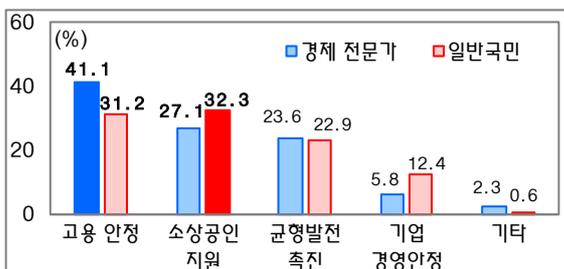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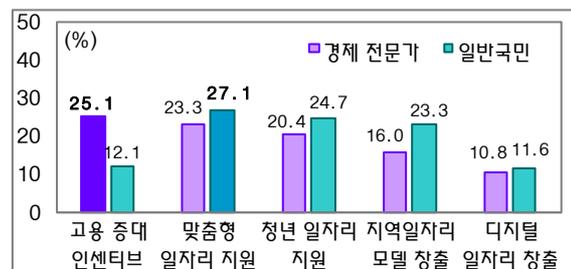
③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경제 전문가는 ‘고용 안정’을,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정책으로 응답

○ ‘고용 안정’을 위해 경제 전문가는 고용중대 인센티브 확대를, 일반국민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핵심과제로 주문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정책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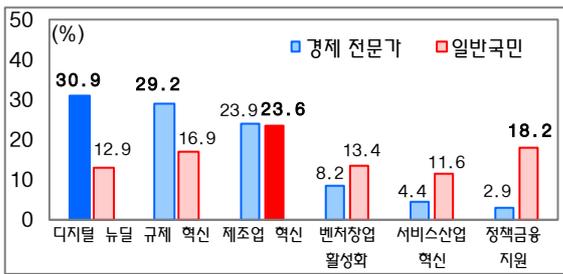


##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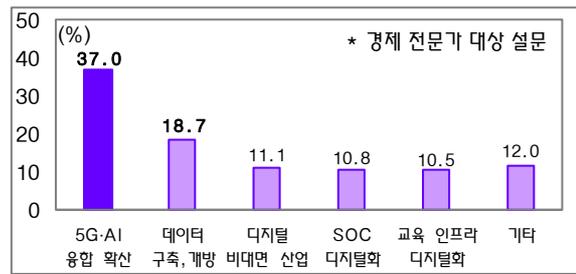
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 경제 전문가는 디지털 뉴딜을, 일반국민은 Big3 등 제조업 혁신을 강조

-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해 경제 전문가들은 핵심과제로 **제조업 5G·AI 융합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등을 주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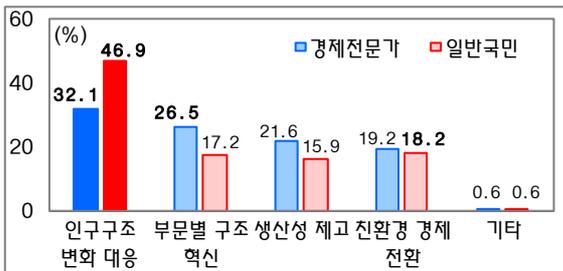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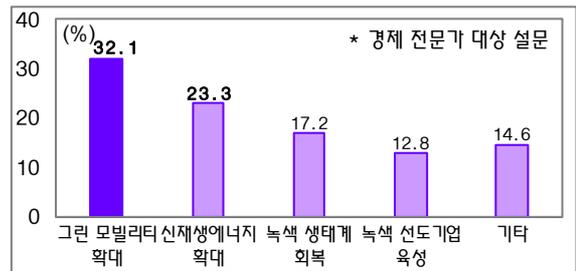
②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우선순위가 높은 모습

-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과제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지목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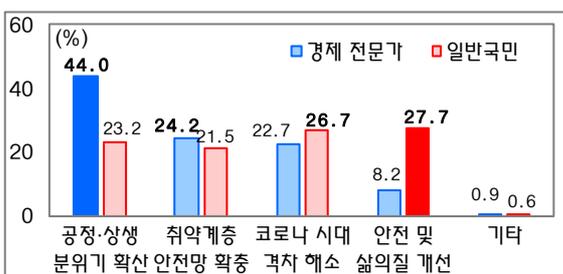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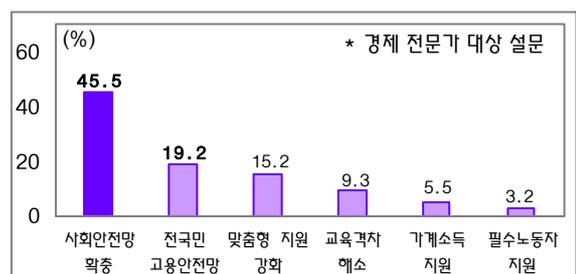
③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강조

-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생계·의료·주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문

포용성·공정성 강화 중점정책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



##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위한 2021년 실행계획

### 〈 목 차 〉

<u>I. 2020년 성과 및 평가</u> .....	135
<u>II.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u> .....	137
1. 분야별 주요 계획 .....	137
① 디지털 뉴딜 .....	137
② 그린 뉴딜 .....	140
③ 안전망 강화 .....	143
④ 지역균형 뉴딜 .....	145
2.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계획 .....	147
① 재정투자.....	147
② 민간자본 활용 .....	148
③ 법·제도개선 .....	150

# I. 2020년 성과 및 평가

- ◇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
  - 3차 추경(국비 4.8조원), 법·제도개선 과제 발굴, 민간자본 활용 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기반 구축

## 1. 분야별 주요 성과

### ① [디지털 뉴딜] 지능형 정부, 비대면 의료 구축 등 변화 시작

#### ① (D.N.A 확산) 데이터·네트워크·AI기반 경제·사회활동 촉진

- ▶ 유통소비 빅데이터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카드소비 x 이동통신 데이터 결합상품 등을 활용한 관광·소비정보 연계분석 실시
- ▶ 언제 어디서든 정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5G 국가망 도입을 위해 과기부 등 5개 시범기관 대상으로 실증사업 실시
- ▶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AI·클라우드분야 바우처(2,911건) 제공

#### ② (비대면 경제) 의료·물류 등 생활 밀착분야 비대면기반 확충

-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블루투스 연계 혈압계, 스마트워치, 건강관리APP 등을 활용하여 투약 및 걷기실천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 인공지능 진료지원 SW(닥터앤서) 진단을 통해 3세 어린이가 가진 소아희귀 질환(선천성 근무력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1개월 간의 치료 후 건강 회복
- ▶ 동네슈퍼에서 심야 무인운영으로 추가 매출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 ③ (SOC 디지털화) 도시 디지털화 등을 통한 서비스만족도 제고

-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지자체에 조기 보급(당초 '22년→'20년), 112·119 출동, 안심귀가 등 스마트도시안전망 혜택 내 국민 비율 60% 달성

### ②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돌입

#### ① (녹색인프라) 국민생활 밀접 공간의 녹색 전환 가속화

- ▶ A보건소는 그린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구축, 냉난방비 30% 절감
- ▶ 광역 상수도 스마트화 전환으로 물관리 체계 효율화

#### ② (녹색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 확충

- ▶ 주민 D씨는 장기 저리융자(변동, 1.75%)를 받아 주민참여형 육상풍력단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사업에 따른 지속적 수입 기대
- ▶ 수소 충전소를 찾아 다른 곳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던 세종시 주민 E씨는 8월에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설치로 편의성 증대

### ③ (녹색산업) 녹색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창업·성장기틀 마련

- ▶ G사는 폐활성탄 재생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핵심기술**을 지원받아 **활성탄 재생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 및 기업 성장 기대
- ▶ 그린뉴딜 특구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지게차 등 활용 가능

## ③ [안전망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사전준비 본격화

### ① (고용·사회안전망) 전국민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착수

-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20.12)
- ▶ 특수고용직 5개 직종(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방문교사) **산재보험 가입**(’20.7)
-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전북,경남,경북,인천,충북 5개 지역)

### ② (사람투자) 디지털·그린인재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본격화

- ▶ **인공지능 대학원 3개 선정** 및 정원 확대(’19년 80명→’20년 260명)
- ▶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통해 디지털 역량 향상도 24.7% 달성

## ④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체계 정립 및 시행

### ① 지역균형 뉴딜 분과 및 시도 뉴딜 추진단 출범(’20.10), 지방투자 심사 간소화, 지방채 발행지원, 특교세 등 인센티브 구체화

### ②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담은 자체 뉴딜계획 발표 지속

- ▶ 서울시 등 13개 광역지자체 자체 뉴딜 추진계획 발표 등 확산 지속 중

## 2. 평가 및 시사점

### □ 뉴딜에 대한 민간의 참여시작 및 국제사회의 관심 등 확산

### ①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 발표\*, K-뉴딜 지수를 활용한 민간 뉴딜펀드 본격 출시

\* 5G 구축 25.7조원 투자, 데이터센터 2조원 투자, 수소충전소 35개 설치 등

### ②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표적 국가발전전략 사례로 한국판 뉴딜을 높게 평가\*

\* OECD: 디지털 그린 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 뒷받침 평가

## Ⅱ.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4개 축으로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집중 지원
  -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민간·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대전환 기반완성

### 1. 분야별 주요 계획

#### ① [디지털 뉴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디지털 뉴딜을 위해 '21년 중 총 12.7조원 투자(국비 7.6조원)
  - D.N.A 및 비대면경제 육성, SOC 디지털화 등 체감 성과 창출

#### [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데이터 시장 규모	16.9조원('19말)		24조원	43조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누적)	10개		16개	30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누적)	191종		341종	1,300여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누적)	3,680건		6,260건	18,000여건
5G 보급률	21.2%		33.4%	70%
인공지능 바우처(누적)	214건	→	414건	3,400여건
AI 전문기업 수	56개('19말)		83개	150개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추가 확대
5G 국가망	5개 기관 시범		5개 기관 시범	전체 정부청사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17%		20%	100%
공공서비스 디지털전환	-		①중앙부처·지자체 ②기존 복지수급자	①공공기관 등 ②전국민 확대

- ① (데이터) 데이터경제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축적·활용 촉진
  - (거버넌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데이터 특위를 신설
  - (축적·활용) 통신·농식품 등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활용을 다각적으로 지원

- ▶ 농식품, 해양수산 등 '21년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발(누적 16개)
- ▶ 헬스케어 등 新서비스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개발
- ▶ 산업·제조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표준모델 확보를 위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 및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21.3~)
- ▶ 국가지식정보, 교육콘텐츠 등의 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하고, 검색 및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21 정보화계획 수립 → '22~'23 구축)
- ▶ 중소기업·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확대(2,040→2,580건)

## ② (5G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5G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 ▶ 온라인 K-POP 공연 인프라 구축,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65개 운영 등 디지털 콘텐츠 창·제작 지원
- ▶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2%p)

## ③ (AI 확산) AI 활용기반 강화 및 쏠산업 AI 융합 확산

- ▶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대상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 지원
- ▶ 감염병 대응, 불법 복제품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를 통해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학습을 지원
  - \* ①군 의료 지원 ②감염병 대응, ③해안경계, ④산단 에너지 효율화, ⑤불법 복제 판독, ⑥지역 특화산업 혁신, ⑦국민안전 확보
- ▶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 등 Lv.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④ (지능형 정부)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정부서비스 혁신

- ▶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21.下)
- ▶ 중앙부처·지자체 수혜서비스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맞춤형·선제적 안내 개시
- ▶ 정부서비스 신청, 고지·납부 등을 익숙한 채널(메신저, 문자 등)로 미리 안내 받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 39종까지 확대(9→39종)
- ▶ 정부기관의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5개 기관 실증)
- ▶ 공공서비스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

## [ 의료·교육·근무 등 생활 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스마트 병원모델(누적)	3개	→	6개	18개
AI기반 정밀의료	8개 질환		8개 질환	20개 질환
WiFi 구축 교실 수(누적)	8.2만실		27.2만실	35.2만실(22)
온라인콘텐츠탑재(누적)	1,500개		1,800개	3,500개

## ① (의료) 스마트 의료인프라 구축 및 돌봄 등 스마트 건강관리 추진

- ▶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개(누적 총 6개) 구축(~'25년, 18개 분야)
- ▶ 건강위험군 어르신 5만명 대상 IoT·AI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25년, 10만명)
- ▶ 만성질환위험군 3.6만명 대상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25년, 13만명)
- ▶ 어르신, 장애인의 이동보조 등 돌봄로봇 4종 개발 완료
- ▶ 닥터앤서 1.0('18~'20년, 8개 질환 진단) 후속으로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AI정밀의료 SW(닥터앤서2.0) 개발 착수(~'24년)

## ② (교육·근무) 디지털 기반 교육·직업훈련, 원격·재택근무 적극 확산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 콘텐츠 확충(170개)
- ▶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400개)에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8만대)
- ▶ 6만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 ▶ 차세대 디지털 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등 원격근무 기술개발(R&D) 지원

## ③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혁신, 온라인 비즈니스화 등 지원

- ▶ 구독경제 시범사업 등 소상공인 5.3만명 대상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지역슈퍼 등이 비대면 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유통물류인프라(상품주문~배송과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재고관리 등) 구축
- ▶ 소상공인 대상 VR·AR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2만개 보급

### [ 주요 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C-ITS 구축(누적)	시범·실증	→	1,900km	30,000km
정밀도로지도(누적)	주요 간선도로 6,700km		주요 간선도로 18,370km	주요 간선도로 33,810km
스마트댐 안전관리(누적)	-		11개소	37개소
지하구조물 3D 지도(누적)	52개市		85개市	85개市+77개郡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누적)	170개소		340개소	510개소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누적)	-		20개소	100개소

## ① (4대 핵심인프라) 안전·편리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 ▶ (도로·철도) 국도 45%에 ITS 구축, 경부고속철도 쏘구간 스마트유지관리 도입
- ▶ (공항·항만) 4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 (수 자원) 국가하천 57%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스마트댐 안전관리체계 구축('21년 11개)
- ▶ (재난대응) 실시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미정비 재해위험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1년 170개소)

### · 전국 3D지도, 정밀 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 ▶ ①3D 지형지도를 전국 도심지에 구축, ②3D 건물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③85개市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21년)
- ▶ 자율 주행 지원을 위한 일반국도 약 11,670km 구축('21년)

## ② (도시·산단·물류)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 (도시)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15개 지자체 확산,  
부산 국가시범 스마트도시 입주('21.12~)
- ▶ (산단) 산단내 지능형 CCTV 등 기반 안전·교통관리 통합관제센터 2개소,  
물류 공유플랫폼 1개소 구축
- ▶ (물류) 교통중심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  
추가 구축 추진(총3개소),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 인증

## ② [그린 뉴딜]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저탄소 이행 본격화

◇ 그린 뉴딜을 위해 '21년 중 총 13.2조원 투자(국비 8.0조원)  
→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에너지·녹색산업 육성 등 본격화

### [ [녹색인프라]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 확산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누적)	1천여 동		2천여동	2천여동
그린스마트 스쿨(누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761동	2,835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누적)	-		25개	25개
노후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누적)	0.9만호	→	9.2만호	22.5만호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국민체육센터(누적)	-		51개소(~'22)	51개소
정부청사 ESS 개선(누적)	1개소		4개소	17개소
광역 스마트상수도 구축(누적)	9개소		23개소	48개소
지방 스마트상수도 구축(누적)	-		44개 지자체	161개 지자체

### ① (공공시설) 취약계층 이용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 적극 추진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속 추진('21년까지 누적 9.2만호(+8.3만호) 추진)  
↳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보강·교체,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시설 설치
-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등) **1천동**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 ▶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전기획 착수(761동)
- ▶ **친환경 국민 체육센터 51개소**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 **정부청사 ESS(에너지 저장장치) 개선 지원**(3개소)

### ② (도시·국토·해양) 자연생태계 회복 및 보호체계 지속 확충

- ▶ **(도시)** 지역주도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25개 대표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진하고, 자녀안심 그린 숲(50개소), 생활밀착형 숲(34개소) 등 조성
- ▶ **(국토)** 자연환경복원사업 절차 체계화 등 녹색복원체계 정립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후보지 목록작성→복원사업 계획승인→실적보고→모니터링)
- ▶ **(해양)**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21.3) 등 해양생태계 복원

### ③ (물 관리) AI·ICT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및 홍수·가뭄 대응력 강화

- ▶ **(광역상수도)** ('20) 9 → ('21) 23 → ('22) 39 → ('23) 48개소(누적)
- ▶ **(지방상수도)** ('20) 0 → ('21) 44 → ('22) 161개 지자체(누적)
- ▶ **(스마트하수처리장)** ('20) 2 → ('21) 8 → ('22) 15개(누적)
- ▶ **AI 홍수예보 플랫폼 기본계획 수립** 및 **취약하천 30개소 홍수센서** 설치 등 추진

**[ (녹색에너지) 지속가능 에너지믹스 전환+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누적)	60만호	198.5만호	520만호
친환경 도시발전(누적)	14개('19말)	33개	56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태양광, 풍력)(누적)	13.3GW('19말)	21.9GW	42.7GW
수소전문기업(누적)	-	최초 지정	100개 지정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3.7만가구('19말)	4만가구	20만('21~'25)
전기차(누적)	13.4만대	23만대	113만대
수소차(누적)	1.1만대	2.6만대	20만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누적)	100만대	134만대	216만대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누적)	1.5만대	3.5만대	15만대
충전인프라(누적)	전기	3.6만기	4.5만기
	수소	72기	188기

**①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전력망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진단 등 신산업·분산형 전원 확대기반 본격 조성**

- ▶ (스마트 전력망) 아파트 138.5만호에 스마트 전력망(AMI) 보급
- ▶ (건물 Database) 15년 이상 노후 민간건물 800동 대상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제공하여 에너지관리 역량 제고
- ▶ (마이크로 전력망) 19개 도서지역대상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25년 42개)
- ▶ (전선로 지중화) 학교주변 통학로 지중화 희망 지자체 33건 지중화 사업 착공

**②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 보급 지원, 지자체 및 기업(RE100) 등 참여 확산**

- ▶ (기술개발) 태양광 공동연구센터 착공 등 핵심기술 개발('21년 903억원)  
수소핵심기술 개발,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21~, 0.1조원)  
디지털 해상풍력 입지정보도('20~'21 50억원) 구축 등
- ▶ (보급지원) 주택, 상가 등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4만가구) 추진  
도심, 산단 등 대상으로 태양광설비 용차지원('21년 0.5조원)
- ▶ (참여확산) 지자체주도 집적화단지 도입 확산, 이익공유 모델마련,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 마련, 한국형 RE100 도입

**③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미래차 및 충전인프라, 친환경선박 확대**

- ▶ (친환경차) 전기차 '21년까지 누적 23만대 보급 및 배터리 활용 ESS실증 지원  
수소차 '21년까지 누적 2.6만대 보급 및 사용차 충전소 구축 지원
- ▶ (충전기) 전기충전기 3.6만기, 수소충전소 188기 보급 및 연료비 지원(~'21년 누적)
- ▶ (노후차) 노후 차량 34만대 조기폐차 지원, 경유화물차 2만대 LPG차 전환 등
- ▶ (친환경 선박) 친환경 관공선 9척 건조 및 민간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지원 등

## [ (녹색산업 생태계) 산업부문의 녹색전환 가속화 ]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스마트 그린산단(누적)	4개	7개	15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누적)	7개 산단	7개 산단	10개 산단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지원(누적)	41개사	71개사	100개사 선정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누적)	11개소	41개소	100개소
클린 팩토리(누적)	100개소	400개소	1,800개소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누적)	4,000개	7,000개소	13,000개소
CCUS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R&D)	중규모 CO <sub>2</sub> 저장소 확보	중규모 CO <sub>2</sub> 저장 공정 기술 개발	중규모 CO <sub>2</sub> 저장 실증 기반 구축 완료
	CO <sub>2</sub> 활용 기술 실증 모델 개발	CO <sub>2</sub> 활용 기술 파일럿 실증 공정 설계	CO <sub>2</sub> 활용 기술 실증 공정 시운전 및 시험생산

### ① (산단) 제조 디지털화·그린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스마트그린 산단 7개를 조성하고(누적)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구축

▶ (스마트 그린산단) 에너지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 7개) 등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21년 3개)

▶ (녹색융합 클러스터) ①청정대기(광주), ②생물소재(인천), ③수열에너지(춘천)  
④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⑤자원순환(탈플라스틱)

\* 녹색산업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화·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

### ② (산업)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30개)하고 '그린 스타트업 2000' 신설(400개) 등 그린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강화

▶ (그린뉴딜 유망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등 3년간 최대 30억원 집중 지원

▶ (그린 스타트업) 예비·초기창업패키지에 그린 분야 전용트랙 마련('21~'25, 1000개)  
환경분야 전용 창업 프로그램 '에코스타트업' 신설('21~'25, 1000개)

▶ (그린 스타트업 타운)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시설 연계 집적지('21~'22년 2개소)

### ③ (친환경 공정)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팩토리 등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3천개소) 대상 노후 미세먼지 저감시설 교체 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최소화  
( '20) 11 → ('21) 41 → ('22) 100개 (누적)

▶ (클린 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기술 등 지원  
( '20) 100 → ('21) 400 → ('22) 750 → ('25) 1,800개소(누적)

▶ (미세먼지 저감시설) ('21) 3천→('22) 6천 → ('23) 7천→('24) 8천→('25) 9천(누적, 개소)

### ④ (R&D) 대규모 CCUS 통합실증사업 착수<sup>1)</sup>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소중립 R&D 전략<sup>2)</sup>」 마련

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21년 159억원)

2) 신재생E, E효율, CCUS, ICT 활용 융합·혁신 등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 ③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구축

####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1년 중 총 5.4조원 투자(국비 4.7조원)  
→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연간 지원자수	-	→	40만명	50만명
고용보험 가입자수(누적)	1426만명		1,500만명	2,100만명
특고산재보험 가입자수(누적)	16.6만명		70만명	70만명+α
산재사고 사망자수(1만명당)	0.46(19년)		0.38	0.2
생계급여 수급자수(누적)	997만가구		110만 가구	113만+α 가구

- ① (국민취업제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
- ②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추진

####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주요 내용(안) >

- ▶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 (1단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 → (2단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추진 예정
- ▶ 가입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지원·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제도 도입 지원방안**(두루누리사업, 보험사무 대행지원사업 등)
- ▶ 소득파악 제도개선·소득정보 공유DB 구축 등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③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기준개선 등을 지속 추진

\* ('20.7) 9→14개, ('2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 간병인 등 검토

- ▶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 ▶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 추진**  
\*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개선)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방안 마련

- ④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 한부모 수급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22년)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⑤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 [ 사람투자 ]

◇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를 위해 '21년 중 총 0.8조원 투자(재정 0.7조원)  
→ 디지털·그린분야 인재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등 지속 추진

주요사업(성과지표)	'20말		'21년	'25년
AI·SW 핵심인재 양성(누적)	1.4만명	→	3만명	10만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누적)	1천명		4천명	2만명
미래형 핵심인재 육성(누적)	-		1.7만명	18만명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	7.1%		10%	20%
농어촌마을 인터넷 망(누적)	650개		1,224개	전체 마을

### ① (인재) '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할 분야별·수준별 인재 30만명 양성을 위한 노력 본격 개시('21년 3.6만명)

#### ▪ AI·SW 핵심인재 1.6만명(~'25년, 10만명)

- ▶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8→10개) 및 산학협력 강화
- ▶ 박사급 고급연구인재 **KIURI연구단** 2개 추가(4→6개) 등
- ▶ 전국 5대 권역(서울·충청·전라·전북·경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자 집중 양성
- ▶ **SW 중심대학**을 통해 교육 혁신을 고도화하고 확산(40개→41개)
- ▶ 기업 관리자급에게 **AI융합서비스 도입** 관련 교육(1,800명)
- ▶ 개방형 협동연구 및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교육 연구허브 구축**

#### ▪ 녹색 융합기술인재 0.3만명(~'25년, 2만명)

- ▶ 그린 뉴딜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그린 뉴딜분야 **녹색융합기술 특성화 대학원**(44개) 운영
- ▶ 그린 뉴딜분야 중·단기과정의 **실무연계교육** 운영(7개→12개)

#### ▪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K-Digital Training)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7만명 양성(~'25년 18만명)

### ②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 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 ▪ (K-Digital Credit 등) 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 지식 제공을 위한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지원('21년 27.6만명)

#### ▪ (K-Digital Platform)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디지털 훈련을 공유·개방하는 '거점형 디지털 융합플랫폼' 신설

\* 5개 권역 선정, 권역당 1개소 총 5개(디지털 융합훈련 시설 장비 등 지원)

### ③ (격차해소) 농어촌 통신망 확대,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추진

- ▶ **(농어촌 통신망)**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21년 574개)
- ▶ **(공공 와이파이)** 도서관 등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 WiFi 신규 구축
- ▶ **(디지털 배움터)**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 4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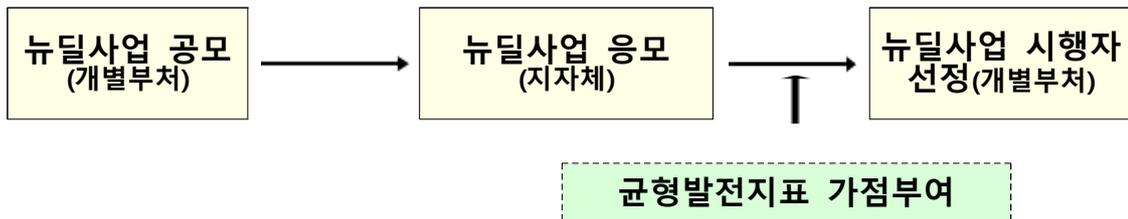
◇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본격 추진 및 제도개선 병행

#### [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전략 ]

-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12.7조원) 신속 추진 ·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지원 · ③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 본격 추진
-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장애요소 ·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 협의하는 제도개선 Fast-Track 도입

#### [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추진 ]

- ① 공모사업 선정시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뉴딜 해당여부를 고려하고, 균형발전 요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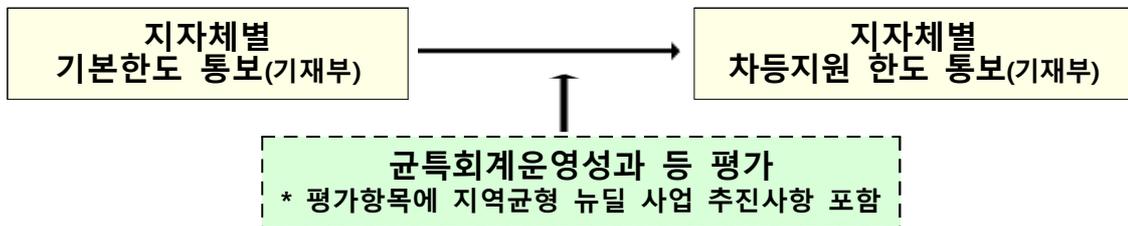


- ② 디지털 · 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21.上, 現 24개), 규제자유특구 펀드(350억원)를 통한 투자 추진
-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디지털 · 그린 뉴딜산업 육성을 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추가 발굴('21.上, 지역특구법 개정)
- ④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을 거쳐 시 · 도별 주력산업을 재편하고 ('20.12) 지역사업 집중 지원('21년, 중기부, 지자체)
- 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디지털 · 그린 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3~+10%p)

\* (현행) 지역집중유치업종, 주력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등에 대해 +2%p  
(개선) 디지털·그린업종 등에 대해 대기업 +3%p, 중견 +5%p, 중소기업 +10%p

## 【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 지원 】

-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인센티브 시행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수시' 심사 등 절차 간소화(연간4회 심사→ 수시심사)
- 지방채 초과발행 신청시 심의위원회 즉시·수시 개최(11월~) 및 협의절차 단축(신청시 1개월 이내 협의결과 통보)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민관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도사례 평가('21.5)후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 부여('21.7)



- 지역균형 뉴딜 분과<sup>1)</sup>를 활용하여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자체 애로사항 신속 협의·추진<sup>2)</sup>('21.1~)
- 1) 행안부장관(분과장), 기재·산업·중기·환경·과기부·균형위 1급, 17개 시도 부단체장  
 2) (예) 수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실화(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 '21.2)  
 ↳ (현행) 모든 수소차 운전자는 안전교육(3시간) 이수 의무화  
 (개선)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 수소버스 운전자는 안전교육 유지

## 【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투자 】

- 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 지원
  -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20.9~) 등을 통해 협업과제 추진상황 주기적으로 점검
  -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균형위, 기재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뉴딜사업 추진 실적 반영
- ② 지역소재 민간·공공기관\* 및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
  - \* 여유자금(기본재산수익 등) 보유한 공공기관이 운용수익 확대 차원에서 자율참여

## 2.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계획

① **(재정투자) 20년 4.8조원 → 21년 21.0조원 투자**  
**10대 대표과제 + 안전망 강화에 80%(16.8조원) 집중**

① **(재정투자 개요)** '21년 총 21.0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 국비 투자에 매칭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부담분 포함시 약 32.1조원

구 분 (국비기준, 조원)		투자계획		'20~'25년
		'20년 추경	'21년	
총 계		4.8	21.0	114.1
디지털 뉴딜	합 계	2.4	7.6	44.8
	1. D.N.A. 생태계 강화	1.3	5.2	31.9
	2. 비대면 산업 육성	0.7	0.6	2.9
	3. SOC 디지털화	0.4	1.8	10.0
그린 뉴딜	합 계	1.3	8.0	42.7
	4.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0.5	2.5	12.1
	5.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0.5	4.2	24.3
	6.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	0.3	1.3	6.3

### 안전망 강화

합 계		'20년 추경	'21년	'20~'25년
1. 고용사회 안전망		0.9	4.7	22.6
2. 사람투자		0.2	0.7	4.0

② **(10대 대표과제)** 디지털·그린뉴딜 대표과제에 11.4조원 투자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스마트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③ **(안전망 강화)** 8개 과제에 5.4조원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사람투자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1조원	① 디지털·그린인재 12만명 양성	0.2조원
②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4조원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3조원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1.0조원	③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0.2조원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0.6조원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6조원		

## ② [민간자본 활용] 뉴딜펀드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 21년 정책형 뉴딜펀드 등 본격 출시 ]

① (정책형 펀드) '21년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펀드를 조성하고 시중유동성을 활용한 뉴딜 성과 창출 및 국민 성과 공유 본격화

- ▶ (공공출자) 뉴딜 분야별 산업 성숙도, 투자 위험도, 민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모펀드 출자는 평균 35% 범위에서 출자비율 차등화  
\* 이 중, 재정을 통한 후순위 출자는 기본 10% 수준에서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
- ▶ (투자형태) 투자 대상에 따라 프로젝트펀드, 블라인드펀드 등 펀드 유형을 다양화하고, 주식·채권·메자닌·대출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폭 넓게 활용
- ▶ (성과공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 조성('21.3)

②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등 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21.3)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유형 등

- ▶ (펀드유형)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및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
- ▶ (투자대상) 한국판 뉴딜분야 관련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
- ▶ (운영방식)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 뉴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③ (민간 뉴딜펀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 21년 뉴딜 정책금융 17.5조원+α 공급 ]

○ '21년 중 「17.5조원+α」의 뉴딜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지원 강화

< 기관별 공급 계획(단위: 조원)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중진공	무보	기보	합계
4.5	2.6	5.0	5.4	0.6	0.8	1.0	17.5+α
17.5('21~'25년 100조원 공급 계획)				α (2.4조원 등 추가 노력)			

- '21년 중 17.5조원(5년간 100조) 공급을 위해 대출·보증 공급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타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대표 신설프로그램(안) >

- ▶ **(산은)** 뉴딜 특별자금 및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신설 등 (4.5조원)
  - \* 한국판 뉴딜 숲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우대금리 최대 △0.8%p 적용)
- ▶ **(수은)**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 (5조원)
  - \* ①뉴딜 중점분야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우대(최대 △1.0%p)
  - ②차주별 통합한도 설정을 통한 개별단계 신속 지원
- ▶ **(기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대출 등(2.6조원)
  - \* 산기보와의 MOU를 통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특화 지원추진(금리우대 최대 △1.0%p)
- ▶ **(신보)** 뉴딜 신성장 분야 중점 육성 프로그램 (5.4조원)
  - \* ①자금수요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지원
  - ②우대지원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 최대 △0.4%p 차감)

[ 기업 및 민자 투자 등 민간참여 유도 ]

- ① **(기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범부처·원스톱 기업투자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현행 기업투자지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 개편**(’21.1~)
  - (발굴·관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 통합 관리
    - \* 혁신성장 옴부즈만 외에 한국판뉴딜 정보허브 등 온라인채널 활용
  - (해소·지원) 관계부처 합동 뉴딜투자지원회의\*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 \* 뉴딜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투자지원회의(혁신성장추진기획단)를 뉴딜투자지원회의로 확대 개편
- ② **(민자)** 새로 도입한 포괄주의와 혼합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해 민자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적극 발굴
  - \* 그린스마트스쿨(’22년 이후 물량, 3.2조원), 수소 충전소(0.5조원) 및 신규 발굴
  - 既발굴한 그린스마트스쿨은 ’21년 추진물량(1.1조원)에 대해 ’21년 내 사업고시 완료 및 ’22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

### ③ [법·제도개선]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개선과제 지속 발굴

#### [ 입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 10대 입법과제(총 30개 내외 법안) >

▶ 디지털경제전환법	▶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법
▶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 미래 모빌리티법	▶ 녹색산업육성법
▶ 디지털·그린 전환 지원법	▶ 뉴딜금융 활성화법
▶ 지역균형뉴딜법	▶ 건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15개 법안은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개정 후 하위법령 제개정을 신속 추진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2)	(디지털집현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및 활용 체계 마련
(3)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기술 원천기술 확보 및 성과 상용화 촉진 등
(4)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등
(5)	(전기사업법) RE100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도입 등
(6)	(환경영향평가법)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
(7)	(여객자동차법)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8)	(화물자동차법)
(9)	(도로교통법) 자율차 정의, 운전의 개념 등 자율주행자동차 법적기반 마련
(10)	(산업집적법) 에너지 자립 등 그린스마트 산단 추진 등(완료, '20.11)
(11)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녹색산업 집적·융복합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
(12)	(소상공인지원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
(13)	(디지털포용법)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 조성
(14)	(조세특례제한법)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분리과세 등(완료, '20.12)
(15)	(퇴직급여보장법) 펀드 등 투자가 가능하도록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도입
(16)	(환경기술산업법)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을 확대
(17)	(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특수고용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등(완료, '20.12)
(18)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완료, '20.12)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음영: 국회 통과사항 ]

#### [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

○ 법제도 개혁 T/F를 통해 경제계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24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검토 중(금융사 재택근무 규제 개선,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의무 완화 등)

▪ 既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주기적(분기)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참고] 분야별 주요 입법과제 (10대 입법과제 + α)

[ 디지털 뉴딜 ]

D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본법 + <b>산업, 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활용 지원</b> 법률 제정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기 스마트제조법 제정)</li> <li>▶ 국민의 행정정보 이용편의 강화를 위해 <b>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b>(전자정부법 개정)</li> <li>▶ <b>정밀도로지도 제작용 3D정보 온라인 활용</b> 허용(국가공간정보법 개정)</li> <li>▶ <b>소상공인의 디지털화</b>를 체계적으로 지원(소상공인지원법 개정)</li> <li>▶ <b>국가지식정보 통합</b> 및 활용 체계 마련(디지털집현전법 제정)</li> </ul>
비대면·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b>)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 기반 마련(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li> <li>▶ (<b>금융</b>)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li> <li>▶ (<b>의료</b>)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감염병예방법 등 개정)</li> <li>▶ (<b>물류</b>) 생활물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시 금융지원을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해당여부에 대한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등</li> </ul>

[ 그린 뉴딜 ]

녹색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기반 확보를 위해 <b>그린뉴딜 기본법</b> 제정</li> <li>▶ <b>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기반</b> 구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개정)</li> <li>▶ <b>온실가스</b>가 미치는 <b>영향을 환경영향평가</b>에서 <b>고려</b>(환경영향 평가법 개정)</li> </ul>
녹색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생에너지 직접거래</b>(PPA) 허용(전기사업법 개정)</li> <li>▶ <b>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b> 상향(신재생에너지법 개정)</li> <li>▶ <b>원전·석탄발전 관련 사업자 지역·산업계 지원</b>의 법적 근거(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li> <li>▶ 자율차 정의, 운전자 의무 등 <b>자율차 도입 제도적기반</b> 마련(도로교통법 개정 등)</li> <li>▶ <b>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b> 지급 근거 마련(여객/화물자동차법 개정)</li> </ul>
녹색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녹색융합 클러스터</b> 조성 근거법 제정(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li> <li>▶ 사업장 대상 <b>오염물질 배출 실시간 측정·감시</b>를 위한 IoT 계측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개정)</li> <li>▶ 기업환경정보 공개 확대 및 <b>녹색분류체계</b> 마련(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등)</li> <li>▶ <b>기후기술 원천기술 확보</b> 및 성과 상용화 촉진 등(기후기술개발촉진법 제정)</li> <li>▶ <b>녹색산업</b> 집적·융복합을 위한 <b>클러스터</b> 조성근거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li> </ul>

[ 안전망 강화 ]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특고 고용보험 적용</b>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li> <li>▶ <b>임신중 육아휴직</b>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li> <li>▶ <b>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1년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b> '22년까지 폐지 완결(기초생보 지침 개정)</li> <li>▶ <b>퇴직연금 관련 펀드 등 투자가 가능</b>하도록 디폴트 옵션 도입(퇴직급여보장법 개정)</li> </ul>
사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b>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b> 마련(디지털포용법 제정)</li> <li>▶ 디지털·그린 등 <b>고속연 전문기술인재 양성 마이스터대</b> 도입(고등교육법 개정)</li> <li>▶ 전국민 <b>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근거</b> 마련(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li> </ul>